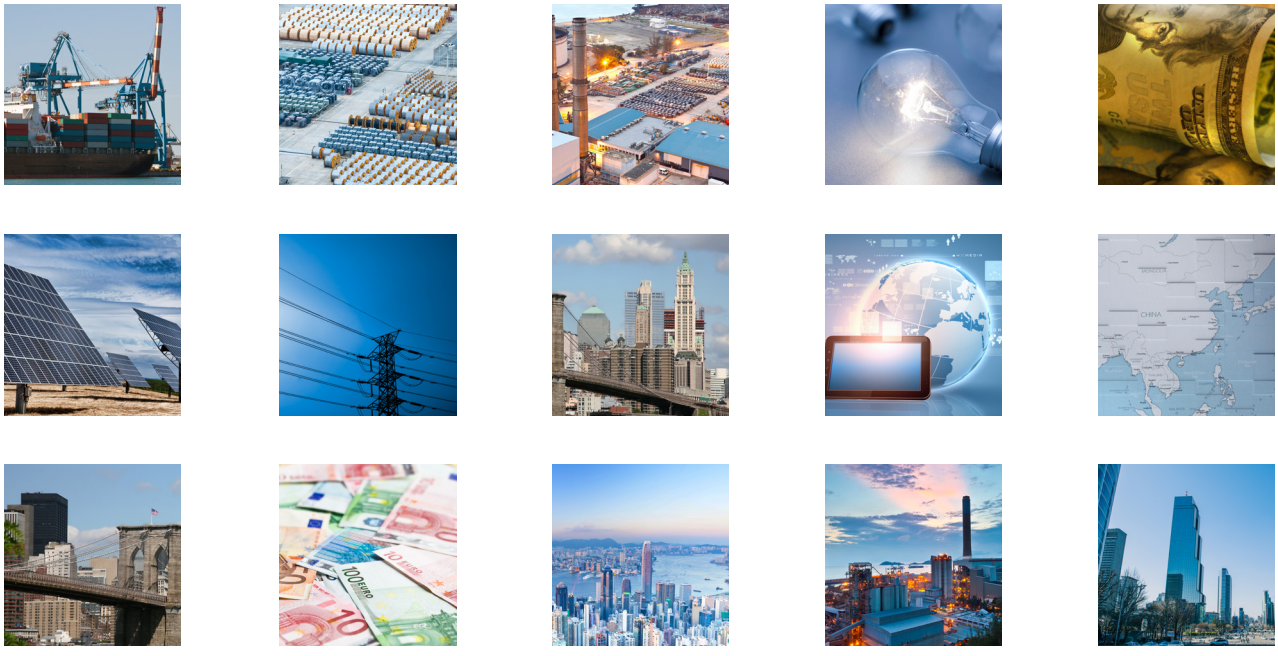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GY



2013 통상백서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발간사

2013년은 통상관련 정부조직에 변화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통상교섭, 이행, 국내대책 등 통상기능이 단일 창구로 통합되었고,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함으로써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부는 '13.6월 '新통상 로드맵'을 수립하여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시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부는 본 계획에 따라, 통상교섭과 협력, 활용과 소통 등 통상의 전주기에 걸쳐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외개방형 통상전략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선, 중단된 영연방 3개국과의 협상을 재개하여 12월에 한-호주 FTA를 타결하였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새로운 전기가 될 한-중 FTA 1단계를 성공적으로 타결하여 2단계 협상으로 진전을 이루었고, 유럽진출의 교두보가 될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도 발효하였습니다.

다자차원의 무역자유화 노력에 동참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13.12월에 WTO 발리패키지가 타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고, 서비스 · IT 등 복수국간 협정에도 적극 대응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PEC, OECD 등 다자협의체에서 산업과 관련된 아젠다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상협력이 통상교섭과 함께 우리 통상정책을 지지하는 한 쪽 수레바퀴가 되도록 양자간 산업자원협력 사업을 통상협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양국간 통상협력협의체와 정상외교 등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고, 우리가 해외

에서 겪는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 대응, 수입규제 대응, 통상분쟁에도 산업계와 함께 긴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를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교육하며 합리적인 국내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부는 1380 콜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활용애로를 해소하고, 국내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FTA와 관련된 홍보와 교육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통상의 활동은 소통과 협업의 원칙 하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해관계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업종별 통상산업 포럼을 운영하고, 전문가 및 국회와 주기적인 소통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통상(通商)은 문자 그대로 상(商)을 통(通)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과 비즈니스가 국경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세계를 넘나들며 활동할 수 있도록, 산업부는 통상과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 산업부의 노력을 담은 본 백서가 이러한 정부, 학계, 언론계에 계신 분들이 통상정책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 상 직

목차

제1장 신통상로드맵 수립

1. 추진배경 3
2. 추진경과 5
3. 4대 추진 과제 5
4. 맺음말 11

제2장 FTA 협상 진전

제1절 한·중 FTA 15
제2절 영연방 3개국 FTA 19
제3절 기타 FTA 23
제4절 동아시아 지역통합협정 30
제5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심표명 37

제3장 다자협상 추진

제1절 WTO DDA 협상 추진 및 진전 43
제2절 복수국간 협정 추진 48
제3절 다자통상협력 54

제4장 양자 통상협력 추진

제1절 미주 63
제2절 구주 68
제3절 중앙아 통상협력 75
제4절 동북아 81
제5절 아주 98
제6절 중동·아프리카 112

제5장 통상애로 해소 지원

제1절 비관세장벽 대응 145
제2절 수입규제 대응 151
제3절 통상분쟁 대응 157
제4절 신흥국 진출 지원 159

제6장 FTA 체결이후 후속조치

제1절 FTA 활용촉진 167
제2절 FTA 국내보완대책의 추진과 성과평가 176
제3절 FTA 교육·홍보 활동 183
제4절 FTA 이행 187

제7장 소통협업역량강화

제1절 소통협업 인프라 운영 199
제2절 통상산업포럼 206
제3절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211
제4절 국회협의 강화 214
제5절 언론 홍보 217
제6절 통상 전문성 강화 223

제1장

신통상로드맵 수립

1. 추진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3년 6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신통상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신통상 로드맵은 통상교섭-이행-국내대책이 단일 창구로 통합됨에 따라 통상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을 계기로, 산업계와의 소통 및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활성화하여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높이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통상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선진 경제권간의 FTA,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을 둘러싼 미-중간의 주도권 경쟁과 신흥국의 급부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EU FTA(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 주도의 TPP(Trans Par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동반자협정), 중국 및 아세안 주도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 등이 본격화되는 반면, WTO 다자통상체제 위상 및 역할에 대한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대기업·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의 유효성이 저하되면서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이, 수출의 고용기여도는 지속 감소하여 고용유발계수는 2000년도 10.9(명/10억원)에서 2005년 8.0(명/10억원), 2010년 5.9(명/1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적극적 통상정책 기조하의 동시다발적 FTA를 통해 9건, 47개국과 FTA를 체결한 FTA hub를 구축하고, 인도네시아나 베트남과 같은 성공적인 산업자원협력 사례를 발굴했다는 등의 상

* 통상정책총괄과 서기관 전동욱

당한 성과를 발굴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실효성보다는 FTA 교섭성과 위주의 분절적 통상정책이라는 점과 국민·산업계와의 소통이 다소 미흡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업부가 제시한 새로운 통상정책의 방향은, FTA협상 추진 등 지금까지의 개방형 통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통상정책 성과의 국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업·소통 체계를 보다 보강하여 산업과 통상의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할 것임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즉,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상생형 통상국가'를 목표로, ①개방형 통상정책의 기조 유지 ②상대국과 상생(Win-win)하는 통상전략 수립 ③통상정책 성과의 국내 공유 시스템 구축 ④협업·소통의 통상정책 기반 확충을 네가지 주요 정책기조를 제시하였고, 통상교섭 및 협력, 성과공유 및 추진방식 등 4대 분야에서 모두 과거와 차별화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1-1. 새정부 통상정책의 방향

	그간의 통상정책 전략	新통상정책 전략
추진전략	FTA 교섭중심의 통상	산업과 연계를 강화한 통상
통상교섭	· FTA Hub 구축	· 지역통합의 중심 핵심축(linchpin)
통상협력	· 거대경제권 위주	· 신흥국 맞춤형 통상협력모델 개발
성과공유	· FTA 효과의 체감도 저하	· 통상정책의 실효성 제고
추진방식	· 분절적 통상추진체계	· 통상교섭-이행-대책 일원화
	· 정부주도	· 민관 협업과 소통

2. 추진경과

통상기능 이관을 계기로 신통상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은 2013년 2월 산업부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및 발표되었다. 이어 4월 19일에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하여 23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로드맵 전략기획단'을 구성하였고, 교섭·협력·중소기업·국내대책·인프라 5개 분야의 작업계획을 논의하였다. 5월 13일에는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30명의 민간자문위원이 참석하여 제2차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신통상로드맵과 관련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이어 6월 5일에는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열어 각 부처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작업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6월 14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안건을 상정·의결하였고, 통상차관보의 브리핑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

3. 4대 추진 과제

(1) 통상교섭: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

새정부의 통상교섭은 기 구축된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통합시장과 미국 주도 환태평양 통합시장을 연결하는 핵심축(linchpin)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한·중 FTA,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을 통해 동아시아 통합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구체적으로, 한·중 FTA를 통하여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 접근성 제고와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완결하고, 동아시아 지역통합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후, 한·미, 한·중 FTA를 기반으로 미국 주도의 TPP(Trans Par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동반

자협정)와 중국 주도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바, 주변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1-2. 아-태지역 경제통합과 우리의 역할

특히, 중국시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FTA 파트너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될 필요가 있다. 우선, 한·중 FTA는 연평균 18% 이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LCD 패널, 휴대전화,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제품들의 중국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대 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중 FTA는 중국에 진출하여 있는 2만 3천여개 우리기업 및 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교역상대국이자. 미국에 이은 제2의 해외투자 대상 국가로서,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15년동안 11배가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의 투자액도 10년새 두배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중국진출 기업과 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FTA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는 미국·EU FTA를 기반으로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투자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체결되어 있는 한·미, 한·EU FTA를 기반으로 하

여, 한국으로의 투자가 집중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한·중 FTA는 신중하게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그간 2005년부터 5년간 경제적 타당성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를 시행하여 왔고, 민감분야 보호를 위한 단계별 협상 방식을 채택, 2012년 5월 이후 여섯차례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단계별 협상방식은 모델리티 협상방식이라고도 하며, 1단계에서 우선 상품분야 자유화 방식 또는 협상지침에 관련한 합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2단계 협상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즉, 민감분야 보호를 위하여 한·중 FTA에서는 상품분야 자율화 방식을 우선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 민감, 초민감 분야에 대한 처리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신흥국의 개발, 협력수요에 부응하면서 산업, 자원, 에너지 협력 등과의 연계를 통한 win-win 방식의 FTA 추진할 것이며, 특히 ASEAN의 핵심국가이며 우리 기업 진출, 수출 확대 필요성이 큰 인니·베트남과의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중, 한·인니, 한·베트남 FTA, 한·중·일 FTA, RCEP 타결시 우리의 FTA 무역비중은 2013년 35%에서 2017년 6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으로, WTO 다자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계획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시 '95~'04년 간 쌀 관세화유예를 확보, '04년 유예기간을 '14년까지 추가연장을 받은 상황이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14.12.31일자로 만료 예정인 바,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쌀 관세화 정부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WTO 일부 회원국들간 진행 중인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Trade in Service Agreement) 협상,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품목확대협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우리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도모할 계획이다. DDA 협상의 경우, '13.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MC9)를 계기로,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개발/LDC

(최빈개도국) 등 DDA 협상 중 합의 가능한 일부 분야에서 조기수확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2) 통상협력: 산업·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정책 추진

산업부가 통상정책을 담당하게 된 것을 계기로,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 제고를 위하여 국가별 맞춤형 통상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즉, 국가별 진출여건 및 기업수요를 감안, 유형별(산업협력, FTA협력, 자원협력, 특화협력군)로 맞춤형 통상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국·EU·중국·일본 등 거대경제권과는 FTA 중심으로 협력하고, 인니·베트남 등 신흥개도국과는 산업발전협력+FTA형 협력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즈벡·모잠비크 등 신흥자원부국과는 자원·에너지 확보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러시아 등 기술우위국과는 원천기술 확보 및 자원확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흥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신흥국 공동발전 프로그램(ECP: Emerging nations Co-development Program)을 마련하고, 플랜트 펀드 조성 및 다자개발은행과 프로젝트 금융협력, 신흥국에 적정기술 지원을 통한 상생형 기술협력 등 산업자원협력 지원시스템을 정비하는 등의 복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3) 성과공유: 국내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공유 확대

①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통상정책 추진

통상을 통한 시장창출 성과가 중소기업 육성·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내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진출 기반조성 및 해외진출 역량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통상의 성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문화·복지·CSR 등 사업간 결합

및 R&D·마케팅 등 기능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제고를 모색하고, 해외진출 정보와 지원거점도 단일화(KBP)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실질적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부내에 통상차관보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관세장벽 대책본부'를 금년 하반기에 구성하여 외국의 기술장벽·지재권 관련 조치 등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측면에서 통상의 기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료·전자정부·교육 등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고, 청년·퇴직인력 Pairing 시스템 확산 등을 통해 인력 해외진출 사업도 확대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품+서비스' 복합사업모델에 대해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해외환자유치 패키지 지원 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② FTA 국내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한·중 FTA 등으로 예상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FTA 체결과 연계한 보완대책 내용·구성 및 체계의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실장급(12명) 및 유관기관 부기관장(12명)이 참여하는 「FTA 활용촉진 협의회」를 통해 FTA 활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중심의 One-Stop 서비스도 강화할 것이다. 또한 한·미, 한·EU FTA 국내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중진공 지역지부, 지방노동청 등을 활용한 지방 중소기업 대상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추진방식: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기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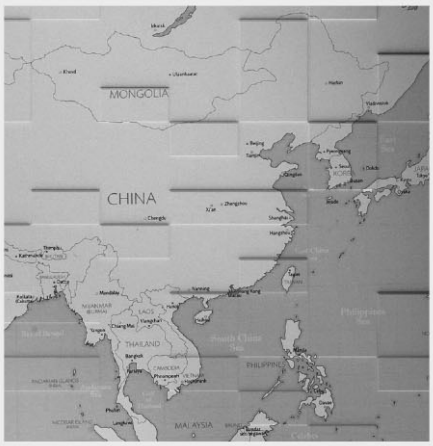
정부 3.0 기조에 따라 산업계, 전문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협업하는 '통상 협업 커뮤니티'를 구축함으로서 통상정책의 새로운 추진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13년 5월부터 제조업·농업·서비스업 등 업계가 참여하는 '통상산업포럼'을 구성하여 통상 이슈에 대해 상시 소통, 협업하고 있다. 통상산업포럼은 산업부장관·무역협회장 공동위원장 주재 하에 22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상에 대한 소통 강화, 미시적 영향평가, 실질적 국내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또한 통상절차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對국회 의무보고 사항 외에도 주요 협상 추진상황,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이며, 민간자문위원회 역시 국회추천 인사 및 농어업·중소중견기업 등 취약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재편할 것이다. 아울러, 「통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상 관련 부처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통상기능 이관 취지에 따라 재외공관의 통상관련 인력조정 등 통상부서와의 협업체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통상동향, 협상 추진동향, FTA 보완대책, 수입규제동향, 주요 프로젝트 동향 등 각 기관별로 분산된 통상정보를 체계화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14년 상반기 중으로 one-stop으로 제공할 것이며, 해외진출 무역정보와도 연계하여 해외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4. 맺음말

산업부는 이러한 새로운 통상정책을 통하여 5년후 FTA 시장규모가 GDP 기준으로 77%까지 늘어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이 40%까지 확대되며, 총 무역은 1조 4천억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토대로 향후 주요 통상정책 수립시 국회,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 및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며, 향후에도 관련 정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GY



제2장

FTA 협상 진전

제1절 한·중 FTA*

1. 제5차 협상

한·중 FTA 제5차 협상은 2013년 4월 26~28일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되었다.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협상에서 양측은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의지를 서로 확인하였다.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품목군별 정의 및 상세 처리방안 등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상품 분야 자유화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비관세장벽에 대하여도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경쟁, 지재권, 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정부조달, 투명성 등 분야에서 작업반 회의 또는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어 협상지본지침(modality) 문안 또는 협상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다. 제5차 협상에서는 처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협상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사무관 박정현

2. 제6차 협상

한·중 FTA 제6차 협상은 2013년 7월 2~4일 간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2013년 6월 27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 것을 토대로, 1단계 협상 타결을 가속화하기 위해 분야별 협의를 진행하였다.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자유화 수준을 비롯한 상품 모델리티 문안 대부분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지재권 등 분야에서는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모델리티 문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거나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또한 양측은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기로 한 양국 정상 간의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그간 협정 대상 및 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경쟁, 투명성, SPS, TBT,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협력(산업협력, 농수산협력, 정부조달 등) 분야를 협정 대상 및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3. 제7차 협상: 1단계 협상 타결

2013년 9월 3~5일 간 중국 웨이팡에서 개최된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양측은 1단계 협상 모델리티(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하여 2012년 5월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타결하고, 본격적인 품목 협상 및 협정문 협상인 2단계 협상 진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일반적인 FTA 협상이 단계별 협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면적인 품목 협상으로 돌입하는 것과 달리, 한·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감안하여,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범위를 정한 후, 2단

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제7차 협상에 이르러 양측은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1단계 협상의 주요 결과(모델리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품목군별 분류(일반, 민감, 초민감) 방식과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관세철폐(자유화) 수준에 합의하였다(다만 양측은 추후 협상 과정에서 자유화율의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또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관련 사항, 원산지 및 통관 분야를 2단계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무역구제 분야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 요소로 하는데 합의하였고, SPS는 WTO SPS 협정상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점에, TBT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투명성, 기술협력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에 각각 합의하였다.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한다는데 합의하고,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ISD 등 협정문의 구성 요소에 대해 합의하였다.

규범 분야는 지식재산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를 2단계 협상의 논의 대상으로 한다는데 합의하고, 분야별 구성요소에 대하여도 합의하였다.

경제협력 분야는 산업협력, 농수산협력, 정부조달을 2단계 협상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위 각 분야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도 합의를 도출하였다.

1단계 협상 타결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양측은 1단계 협상 결과 마련된 협상 모델리티를 기초로 향후 전 분야(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분야)의 협정문 및 시장개방(양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상품 분야에서는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화율에 합의하고, 역외가공지역 논의에 합의하였는바, 역외가공지역 조항은 개성공단 국제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WTO 서비스 협정 및 양국의 기존 투자협정(BIT)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밖에 중국측이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경쟁,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투명성, 경제협력 등의 분야를 향후 협상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 효과 외에도 중국내 우리 기업,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4. 제8차 협상

한·중 FTA 제8차 협상은 2013년 11월 18~22일 인천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1단계 협상에서 합의된 모델리티를 바탕으로 협정문 초안 및 상품 양허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상품 분야는 처음으로 양허안(offer)을 교환하였다. 또한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등 분야의 협정문 논의를 진행하였다.

서비스, 투자 분야는 금융서비스, 통신, 자연인의 이동을 포함한 서비스 협정문 초안과 투자 협정문 초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규범 및 협력 분야는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투명성, 분쟁해결 포함), 전자상거래, 경제협력(산업협력, 농수산협력, 정부조달 포함) 등 분야의 협정문 초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절 영연방 3개국 FTA*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1. 개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은 모두 제조업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반면,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리 공산품의 수출 확대와 함께 철광, 유연탄, 우라늄, 원목 등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입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들 국가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하여 왔다.

2. 한-호주 FTA

한·호주 FTA는 2009년 5월 협상을 개시한 이래 2010년 5월까지 총 5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ISD 조항의 포함여부, 상품양허 등에 대한 입장 차로 인해 한동안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양국은 공식 협상 중단 기간에도 비공식회의를 지속하여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였고, 2013년 9월

* FTA협상총괄과 사무관 이가영

에는 호주 신정부가 ISD 조항 포함에 대해 사안별 접근(case-by-case)이라는 신축적 입장을 취함에 따라, 한·호주 FTA에서의 ISD 관련 논의도 가능하게 되었다.

2013년 10월 9일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호주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상호 노력키로 합의하였으며, 11월 서울에서 한·호주 FTA의 협상 재개를 선언하고 6차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다. 12월 3~4일에는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7차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동 협상에서 ISD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해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이어 개최된 12월 4일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시 한·호주 FTA 7차 공식 협상에서 모든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음을 평가하고, 한·호주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다.

협상 결과, 호주측은 5년내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8년내 수입액 기준 92.4%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우리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 다수(가솔린 중·소형 등)에 대한 관세 즉시철폐를 확보하였다.

표 2-1. 한·호주 교역 및 투자 동향

단위: 백만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교역액	17,923	23,171	19,999	27,098	34,480	32,238	30,347
·수출	4,691	5,171	5,243	6,642	8,164	9,250	9,563
·수입	13,232	18,000	14,756	20,456	26,316	22,988	20,784
투자							
·호주의 對한국 투자	47	69	225	7	90	153	50
·한국의 對호주 투자	155	653	1,251	766	4,142	4,407	1,687

3. 한·캐나다 FTA

한·캐나다 FTA는 2005년 7월 협상을 개시하여 2008년 3월까지 총 13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다. 상품양허 관련 이견, 캐나다의 쇠고기 관련 WTO 제소(2009년 4월) 등으로 협상이 장기간 중단되었으나, 2012년 이후에는 비공식회의를 7차례 개최하여 한·캐나다 FTA의 협상 재개 방안을 협의하여 왔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한·캐나다 정상회담(2013년 10월 7일)에서는 한·캐나다 FTA의 진전을 위해 상호 노력키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2013년 11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4차 한·캐나다 FTA 공식협상을 계기로 시장접근 및 협정문 협상 모두에서 한·캐나다 FTA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으며, 12월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이러한 실질진전을 상호 확인하였다.

표 2-2. 한·캐나다 교역 및 투자 동향

단위: 백만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교역액	6,760	8,461	6,975	8,453	11,540	10,075	9,920
·수출	3,506	4,057	3,440	4,102	4,928	4,828	5,203
·수입	3,254	4,404	3,535	4,351	6,612	5,247	4,717
투자							
·캐나다의 對한국 투자	51	89	303	480	739	393	387
·한국의 對캐나다 투자	255	150	4,307	953	1,887	878	880

4. 한·뉴질랜드 FTA

뉴질랜드와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총 4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다. 양국 간 상품양허 관련 입장차로 공식 협상이 중단된 동안에도 두 차례 수석대표급 현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품양허 협상의 진전방안 및 양국간 이익의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왔다.

2013년 7월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시에는 한·뉴질랜드 FTA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해 양 정상간 공감대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협상 재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 12월 3일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한·뉴질랜드 FTA의 협상 재개 및 뉴질랜드에서의 5차 공식 협상(2014년 2월)의 개최에 합의하였다.

표 2-3. 한·뉴질랜드 교역 및 투자 동향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교역액	1,870	1,947	1,770	2,094	2,578	2,804	2,886
·수출	699	825	891	918	1,104	1,465	1,491
·수입	1,171	1,122	879	1,176	1,474	1,339	1,395
투자							
·뉴질랜드의 對한국 투자	0.47	0.06	0.34	31	0.36	0.46	0.50
·한국의 對뉴질랜드 투자	38	16	13	15	49	23	13

제3절 기타 FTA*

1. 한·인도네시아 CEPA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1년 2월 16일 한·인도네시아 통상장관회담에서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고, 2011년 중 3차례 공동연구를 거쳐 2011년 11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공동연구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후 양국은 협상개시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2012년 3월 28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협상 출범 이래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6차례의 공식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통관, 규범 등 각 분야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3년 10월 12일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는,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의 연내 타결에 합의하였다. 앞으로 양국은 잔여쟁점 타결을 통해 가급적 조속히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 FTA 정책기획과 사무관 허예원

한·인도네시아 CEPA는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개도국과의 상생형 FTA의 첫 번째 사례로 추진되고 있다. 한·인니 CEPA 체결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확대, 규범분야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우리기업 진출 확대 및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2. 한-베트남 FTA*

베트남은 ASEAN 국가 중 상대적으로 후발국이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국으로, 2013년 기준 우리의 제4위 투자국이기도 하다. 특히, 베트남은 한·ASEAN FTA상 상품시장 자유화 일정이 여타 ASEAN국가에 비해 늦을 뿐만 아니라, 2007년 1월 베트남의 WTO 가입 이후 베트남의 MFN 관세가 한·ASEAN FTA 특혜관세율보다 낮아짐에 따라, 우리의 이익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면서 한·베트남 FTA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9년 10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한·베트남 FTA 공동작업반이 설치되었으며, 2010년 6월부터 총 6차례 공동연구를 거쳐 2011년 10월 공동연구가 종료되었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1년 11월 8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공동연구 보고서를 최종 채택하였다.

이후 2012년 3월 28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필요한 국내절차가 종료 되는대로 양자간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는 협상개시 선언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 2012년 9월 3~4일 한·베트남 FTA 제1차 협상을 개최하고, 향후 협상의 범위, 구조, 일정 등의 지침이 되는 협상 운영세칙(Terms of Reference: TOR)을 채택하고, 2013년 5월 22~24일 제 2차 협상에서 협정문에 바탕을 둔 본

* FTA 정책기획과 사무관 김파라

격 협상을 개시하였다. 또한, 2013년 9월 양국 정상회담시 양국간 '2014년 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에 합의함에 따라. 협상 진전에 정치적 추동력이 부여 되었다. 2013년 10.16~18일 한·베트남 FTA 제3차 협상을 개최하고, 2014년 타결을 위한 모멘텀 구축을 위해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등 전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베트남은 우리의 동남아 지역 주요 교역·투자 대상이자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한·베트남 FTA 체결시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통상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한-콜롬비아 FTA 협정 서명*

한·콜롬비아 FTA는 2008년 11월 페루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이 FTA 추진 필요성에 공감함으로써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2009년 12월 제1차 공식협상을 시작하였으며, 2년 6개월간 총 7차례의 공식협상과 7차례의 소규모 협상을 개최하여, 2012년 6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콜롬비아 방문을 계기로 양국 통상장관간 한·콜롬비아 FTA 협상타결을 공동으로 선언하였다.

이후, 양국은 7~8월간 2차례의 법률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협정문을 확정하고, 2012년 8월 31일 가서명 이후 2013.2.5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3년 2월 21일 한·콜롬비아 FTA를 정식으로 서명하였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제3위의 소비인구(약 4700만명)와 제4위의 경제규모(약 3,200억불대의 GDP)를 갖추고 있는 중남미지역의 중견국가로서 최근 들

* FTA 정책기획과 사무관 민경언

어 치안안정과 더불어 안정적 경제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또한 콜롬비아는 중남미 5대 유망산유국이자 세계 10위 광물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으로서 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로서는 최적의 협력파트너가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한·콜롬비아 FTA의 조기 발효를 통해 콜롬비아와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표 2-4. 한·콜롬비아 교역 현황

단위: 백만불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 출	1,121	1,091	797	1,389	1,615	1,467
수 입	116	143	125	432	381	415
무역수지	1,005	948	672	957	1,234	1,052
총교역액	1,237	1,234	922	1,821	1,996	1,882

출처: 한국무역협회

표 2-5. 한·콜롬비아 투자 현황

단위: 천불, ( )는 신고건4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콜롬비아 對한투자	107 (1)	54 (1)	450 (1)	-	-	-
한국의 對콜투자	21,876 (2)	1,034 (3)	34,075 (6)	38,606 (6)	118,609 (11)	168,901 (16)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4. 한·터키 FTA*

(1)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발효

터키는 유럽 인구 2위(7,370만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아시아·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시장 잠재력·거대시장 인접성 등 신흥시장으로서의 요건을 두루 갖춘 post-BRICs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7년 양국 수교 이후 터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터키의 전략적 중요성과 전통적으로 우리의 우방국이었음을 감안하면 양국 간의 교역수준은 그 경제규모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양국은 한·터키 FTA가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다양한 방면에서 양국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간 FTA 체결 추진을 본격화하였다.

표 2-6. 한·터키 교역 동향

단위: 백만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 출	4,087	3,773	2,661	3,753	5,071	4,552
수 입	282	362	434	516	805	672
무역수지	3,805	3,411	2,227	3,237	4,266	3,880
총교역액	4,369	4,135	3,095	4,269	5,876	5,224

출처: 한국무역협회

* FTA서비스투자과 사무관 허희정 / FTA이행과 주무관 전호언

2010년 3월 19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한·터키 통상장관회담 계기 한·터키 FTA 협상 출범이 선언된 이래 양국은 2010년 4월과 7월, 2011년 3월, 2012년 3월 네 차례의 공식 협상과 소규모협상을 통해 한·터키 FTA를 한·ASEAN FTA 방식에 따라 1)기본협정, 2)상품무역협정, 3)여타 협정(서비스·투자협정 등)으로 구성하는 데 합의하고, 2012년 3월 26일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의 타결을 선언하였다.

2012년 8월 1일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페르 차을라얀 터키 경제부 장관은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서명(signing)하였고, 양국 국내 비준을 거쳐(한국 2012.2.22/터키 2013.1.10), 2013년 5월 1일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발효로 향후 10년간 약 7.4억불의 교역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대터키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09년 이후 증가 추세인 무역수지 흑자폭이 더욱 증대(발효 후 10년간 약 5.13억불 예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진행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은 2011년 3월 제3차 협상까지 진행 후 중단되었으나,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협상을 재개하여, 1년 내 타결을 목표로 한다"는 기본협정 제1.5조에 따라, 2013년 8월 협상을 재개하였다.

한국과 터키 양국은 2014년 중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타결을 목표로 2013년 8월과 2013년 11월, 2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협정문 관련 일부 기술적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가시적 진전을 달성하였다. 차기 협상시 시장개방 관련 논의도 심도 있게 진전시켜 2014년 중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표 2-7. 한·터키 투자 현황

단위: 천불, (　　)는 신고건수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터키의 對한투자	362 (5)	1,308 (7)	205 (4)	1,977 (10)	916 (7)	2,131 (9)
한국의 對터키투자	131,150 (28)	89,797 (30)	247,104 (45)	66,636 (30)	135,842 (39)	292,295 (44)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은, 기발효된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배가시키고, 상품 분야로만 국한되었던 한·터키 FTA를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시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터키의 기체결 FTA가 상품 분야로만 국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터키 FTA는 터키 최초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체결하게 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제4절 동아시아 지역통합협정(한·중·일 FTA, RCEP)*

1. 한·중·일 FTA

(1) 협상의 개시

정부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민간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2010~2011년간 한·중·일 3국의 학계,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WTO 규범과의 합치성, △이익의 균형, △민감부문에 대한 고려 등 4가지 원칙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도출하였다.

2012년 5월 13일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3국은 FTA 협상의 연내 출범 선언을 위한 국내절차 및 실무협의를 포함한 준비 작업을 즉시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3차례 사전 실무협의가 개최되었다. 제1차 사전 실무협의는 2012년 6월 20일 일본 동경에서, 제2차 사전 실무협의는 2012년 8월 21일 중국 칭다오에서, 제3차 사전 실무협의는 2012년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사무관 박정현

9월 27일 서울에서 각 개최되었으며, 이들 협의 결과 3국은 협상의 범위 및 방식, 행정사항 등 기본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다.

사전 실무협의를 마친 3국은 각자 협상개시 선언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통상 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 및 FTA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절차규정에 따라 2012년 10월 24일 한·중·일 FTA 공청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1월 9일 FTA 추진위원회 의결 및 같은 달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같은 달 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한·중·일 FTA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법정 국내 절차를 마쳤다. 한편, 이러한 법정 절차 이외에도 한·중·일 FTA 협상추진 타당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국제세미나, 간담회 등 다양한 국민적 여론 수렴 활동 및 대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한·중·일 3국은 당초 2012년 11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려 하였으나, 중-일 외교 갈등으로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3국은 대신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3국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되었다.

한·중·일 FTA는 3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를 형성한다는데 그 주된 의의가 있다. 한편, 정부는 한·중·일 FTA 체결을 통해 전세계 3위에 해당하는 새로운 역내 거대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우리 민감분야를 고려하면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달성하며, 포괄적 경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중·일 FTA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12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단기적으로(5년 이내) 약 0.32~0.44%, 중장기적으로(10년 이내) 약

1.17~1.4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후생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약 71.98~96.25억 달러, 장기적으로 약 116.11~163.47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제1차 협상

한·중·일 FTA 제1차 협상은 2013년 3월 26~28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협상에서 3국은 협상의 기본원칙·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terms of reference)을 채택하고, 협상의 범위 및 작업반 구성 등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협의하였다.

3국이 합의한 협상운영세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협상 범위는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를 중요한 준거로 활용하고, 필요시 3국 합의로 새로운 이슈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협상 방식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허 방식 관련, 상품 분야는 양자 및 3자 협상을 병행하고, 서비스, 투자 및 규범 분야는 3자 협상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협상의 범위 및 작업반 구성 논의 관련, 3국은 상품(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포함), 서비스, 투자, 규범(경쟁, 총칙) 등 분야는 작업반 설치에 합의하고,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협상 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협상 방식 및 양허 방식 등 세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1차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며, 협상 일정, 3국간 접촉선(contact point), 협상 문서의 관리 방법, 통계 및 자료 교환 등 협상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 행정사항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3) 제2차 협상

한·중·일 FTA 제2차 협상은 2013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다. 3국은 제1차 협상에서 채택한 협상운영세칙을 기초로 양허 방식 및 협상 범위 등 주요 쟁점들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경쟁, 총칙 분야의 작업반 회의와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특히 상품 분야에서는 양허안 작성방식, 품목군별 분류 및 처리방안, 통계 교환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3국은 제3차 협상부터 환경, 정부조달, 식품 분야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분야를 협상 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4) 제3차 협상

한·중·일 FTA 제3차 협상은 2013년 11월 26~29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이 협상에서는 상품 분야 모델리티(협상 가이드라인), 협상 범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여타 협상과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상품 분야는 양허안 작성방식, 품목군별 분류 및 처리방안, 통계 교환 등에 대한 모델리티 문안 협의를 진행하고,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분야의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밖에 서비스, 투자, 경쟁, 총칙, 지식재산권 분야 작업반 회의 및 전자상거래, 환경, 정부조달, 식품 분야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문에 포함할 요소에 대하여 협의하고, 협정 대상 범위 포함 여부가 합의되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3국이 모두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일 FTA와 RCEP 협상 간의 일관성 및 정합성 유지를 위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2.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1) 협상의 개시

ASEAN은 2011년 11월 개최된 ASEAN 정상회의에서 RCEP 작업계획(RCEP Framework)을 제시하면서, 2012년 11월을 RCEP 협상개시선언 목표시점으로 정하였다.

2012년 8월 개최된 ASEAN + 6(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통상장관회의에서 참여국들은 2012년 11월에 있을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RCEP 협상개시선언을 위한 목표시점으로 하는데 합의하여 RCEP 협상지침을 확정하였다.

2012년 11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ASEAN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은 RCEP 협상의 개시를 선언하였다.

정부는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효용을 극대화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RCEP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RCEP 협상 참여국에는 우리 제1, 2, 3위 교역 대상국인 중국, ASEAN, 일본이 모두 포함되어 RCEP이 체결될 경우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사무관 박정현

또한, 역내 국가간 원산지 규정 등 무역규범의 조화를 통해 양자 FTA 체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른바 스파게티 볼 효과)을 최소화하고, 초기 단계부터 RCEP 협상에 참여하여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비중 및 역할의 증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역내 국가 간 경쟁 구도, 정치적 대립의 완화 및 해결 방안으로 RCEP의 활용 가능성도 기대된다.

(2) 제1차 협상

RCEP 제1차 협상은 2013년 5월 9~13일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개최되었다. 이 협상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 참여국들은 RCEP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ng Committee, TNC)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합의하는 한편,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작업반 첫 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로 향후 작업 방식 및 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3) 제1차 RCEP 경제장관회의

2013년 8월 19일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개최된 제1차 RCEP 경제장관회의에서는 RCEP 협상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작업 계획을 논의하였다.

참여국들은 2015년 말 RCEP 협상 타결을 목표로 설정하고, RCEP의 최종 공식협상이 될 제10차 협상을 2015년 9월경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제2차 협상

RCEP 제2차 협상은 2013년 9월 23~27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었다. 이 협상에서 참여국들은 TNC 회의에서 우리나라(분쟁해결), 일본(지재권, 경쟁), ASEAN(경제협력), 뉴질랜드(정부조달) 등이 발표한 분야별 concept paper를 기초로 분야별 논의를 진행하였고,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의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상품 작업반 회의 결과 참여국들은 동 작업반 산하에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2개 소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제5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심표명*

1. TPP 협상동향

TPP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 창출에 목표를 두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21세기형 복수국간 FTA로서, '13년 기준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총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TPP 참여 12개국의 경제규모는 '12년 기준 전 세계 GDP의 약 40%로서, 협상 타결시 거대 지역무역협정이 탄생할 전망이다.

TPP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상품 분야에서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추구하면서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IT, 녹색성장, 신기술 등 그간 다자무역체제에서 다루어지지 않거나 진전이 부진한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0년 3월 TPP 협상이 개시된 이래 2013년 8월까지 총 19차례의 공식협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대책단 사무관 송지현

상이 개최되었다. TPP 회원국들은 2013년말 TPP 협상 타결을 목표로 2013년 12월 7~10일간 싱가포르에서 TPP 각료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회원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타결에는 실패하였다. 미·일간 시장접근 협상 관련 일본측의 5대 민감품목(쌀, 밀·보리, 쇠고기·돼지고기, 낙농품, 설탕) 처리에 대한 입장차 및 지재권, 환경, 국영기업 등 규범 분야 주요 이슈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차가 협상 타결 실패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2. TPP 대응현황

TPP가 아·태 지역 최대 지역경제통합체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TPP 참여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한편, 국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TPP 경제적 타당성" 연구결과(2013.7월)에 따르면, 우리의 TPP 참여시 장기적으로 실질 GDP가 최대 2.6% 증가하고, TPP 불참시에는 실질 GDP가 최대 0.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3년 10월부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 하에 관계 연구기관 합동으로 산업별/분야별 TPP 심층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TPP 관련 포럼, 업계 설명회,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파악한 결과, 제조업계는 TPP 역내시장 확보 및 일본과의 동등한 경쟁관계 확보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TPP에 긍정적이나 일부 업종은 대일 시장개방에 따른 우려로 TPP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농수축산업계는 시장개방 확대 요구에 따른 민감분야 피해 우려로 TPP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정부는 TPP 관련 그간의 대응현황을 종합하여, 현 시점에서 TPP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3년 11월 29일 제143차 대외

경제장관회의에서 TPP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관심표명'은 '공식적인 참여선언'과는 구분되는데, 참여선언 이전에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기존 참여국들과 참여조건에 대하여 '예비 양자협의'에 들어감을 의미한다. 정부는 TPP 관심표명 직후 2013년 12월 3일~6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 12월 7~10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TPP 각료회의 등의 계기에 기존 TPP 참여국들에 우리의 TPP 관심표명 의사를 전달하고, 1차적인 TPP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였다.

3. TPP 관련 향후 계획

우리의 TPP 참여시, TPP 역내 시장에서 일본과 동등한 경쟁기반을 확보하고, 중국 등 TPP 미참여국 대비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는 등 TPP 역내 거대시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TPP 역내 원산지 완전누적을 인정함에 따라 역내 생산네트워크(supply chain)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TPP 가입시 우리기업들의 상당한 수혜가 예상되나, TPP 역내 생산네트워크에서 배제되는 경우 상당한 수준의 기회비용 감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TPP에 참여한 12개국간 상이한 경제규모와 경제발전 수준, 제조업 분야 경쟁력 등의 차이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PP 참여시에는 농수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과 더불어 대일본 시장개방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앞으로 TPP 참여여부를 예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TPP 협상의 진전동향, 12개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경과, 산업별/분야별 TPP 심층연구 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TPP 참여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3장

다자협상 추진

제1절 WTO DDA 협상 추진 및 진전

1. DDA 협상 : 발리 패키지(Bali Package)*

(1) DDA 협상 개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1995년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2001년 새로운 무역협상으로 DDA 협상(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이 출범되었다. DDA는 WTO 설립 이후 첫 번째로 출범한 다자간 협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일부 분야에서 여전히 높은 관세율, 다수 미양허 품목의 존재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DDA 협상은 2008년 잠정타협안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기도 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대립 등으로 인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13년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DDA 협상의제는 ①농업, ②비농산물시장접근, ③서비스, ④무역원활화, ⑤규범(반덤핑, 보조금 등), ⑥무역과 환경, ⑦지식재산권, ⑧개도국 우대, ⑨분쟁해결양해(DSU: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로 구성되어 있다.

* 세계무역기구과 사무관 김휘강

(2) 발리패키지 개요

2013.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1개), 농업 일부이슈(4개), 개발·최빈개도국(5개) 등 3개 분야 10개 합의문으로 구성된 이른바 '발리 패키지'가 타결되었다.

표 3-1. 발리패키지 주요내용

① **(무역원활화)** 통과의 자유, 수출입 절차·수수료 개선, 무역규정 공표·시행 등 무역원활화 조치 / 회원국간 정보교환 등 세관협력 / 협정 이행을 돕기 위한 기술지원·능력배양 등 對개도국 우대방안

② **(농업)** △농산물 수입국이 저율관세로 들여오는 쿼터(TRQ)에 대한 관리방식 개선(단, 개도국은 TRQ 관리방식 변경의무 면제),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WTO 농업협정의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잠정적으로 WTO 제소 자제(2017년까지 영구적 해법 마련), △WTO 농업협정상 허용보조로 인정되는 정부 일반서비스 목록에 '농촌개발, 빈곤퇴치 등 목적의 토지개혁 및 농촌생계보장' 관련 프로그램 추가, △수출보조 감축 등 수출경쟁 조치 관련 정치적 선언

③ **(개도국/최빈개도국)** △개도국 우대조항 이행현황을 검토하는 모니터링 메커니즘 설치, △LDC 상품에 대한 무관세·무쿼터(DFQF) 시장접근 부여수준 개선노력 의무화, △LDC 특혜원산지 가이드라인 마련, △회원국들이 LDC 서비스에 대해 웨이버(의무면제)를 통해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면화(cotton) 이슈의 논의진전을 강조하는 정치적 선언

발리패키지는 DDA 출범(2001)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던 WTO가 12년 만에 거둔 수확이자 '95년 WTO 출범 이후 최초로 도출된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 성과이다. 각료회의 기간을 포함, 농업문제에 관해 미국과 인도 등 주요국간 대립으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WTO의 위기를 방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는 공감대 하에 회의 기간을 하루 연장하는 등 극적으로 합의가 도출되었다.

발리패키지는 DDA 전체 협상범위 대비 그 비중은 작지만 주목할 만한 것이다. 특히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시, 통관절차 개선을 통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교역 확대에 기여하고, 통관 관련 애로 해소로 우리 기업의 수출입 여건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번 성과를 기초로 잔여 DDA 협상의제들에 대한 추동력이 확보되고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등 복수국간 협상의 진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발리패키지의 선언문들은 무역원활화를 제외하고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규정 또는 지침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발리 각료선언은 2014년말까지 DDA 잔여의제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무역원활화 협정이행'과 'DDA 작업계획 수립'이 2014년 WTO의 주요 과제로 추진되게 되었다.

2. 무역원활화협정*

(1) 추진 개요

발리 패키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2004년에 DDA 정식 의제로 채택된 무역원활화이다. 무역원활화는 통관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간소화, 표준화하여 무역 관련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제상공회의소(ICC)에 따르면, 무역원활화협정은 전 세계적으로 1조달러 이상의 수출 증가 및 2천만개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발전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분업 구조가 급속히 확대

* 다자통상협력과 주무관 박윤주

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서 무역원활화 조치들은 큰 의미를 갖는다.

(2) 주요내용

무역원활화협정은 구체적인 무역원활화 조치와 개도국 특별대우로 구성되는데, 무역원활화 조치 부분에서는 통관 절차를 간소화 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제안한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조항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를 일괄하여 단일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단일서류접수창구를 의미한다. 개도국들이 싱글윈도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수출입 신고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무역업자의 편의가 크게 증대되고 물류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세관당국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보장하고, 각종 통관 규정 및 절차를 인터넷으로 공표하여 투명성이 강화된다.

또한, 무역원활화협정은 개도국에 대하여 다양한 특별대우를 제공한다. 개도국은 협정상 의무의 이행 기간을 연장받을 뿐 아니라 협정 이행을 위하여 선진국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협정상 의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개도국에 대한 배려인 동시에, 개도국의 협정 이행을 촉진하여 무역원활화의 효과 발생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만큼, 개도국들과 우리의 제도 개선 경험을 공유하고 관세행정 노하우를 전수하여 개도국의 협정 이행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미 OECD에서도 우리나라가 불복 절차, 서류 간소화, 자동화 등 다수의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OECD 평균보다 상당히 우수한 조치들을 시행중인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3) 전망 및 대응방향

2014년에는 무역원활화협정의 발효를 위한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역원활화 준비위원회를 설립하여 △협정 발효시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LDC)의 이행의무(A의무) 통보 접수, △무역원활화협정을 기존 WTO 협정에 부속서로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 의정서 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리 각료결정에 따라 2014년 7월 31일까지 WTO 일반이사회에서 무역원활화협정 관련 개정의정서를 채택하고, 2015년 7월 31일까지 WTO 회원국의 2/3 이상이 국내 비준절차를 마치게 되면 동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면 세계 시장에 진출중인 우리 기업들이 통관절차 개선과 거래비용 감소 등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교착상태에 있는 DDA 협상의 모멘텀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자무역체제의 수혜국이자 개방형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WTO를 지속적으로 지지하며 무역원활화협정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복수국간[1] 협정 추진(TISA, ITA확대)

1.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협상*

(1) 추진경위

2008년 WTO DDA 시장개방 협상이 중단된 이후 DDA 협상 전반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서비스 교역 자유화에 관심이 많은 회원국들은 2012년 초부터 복수국간서비스협정 출범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및 호주가 논의를 주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EU, 일본, 캐나다, 홍콩, 칠레 등 WTO 서비스 프렌즈(Really Good Friends) 그룹에 포함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22개국이 2012년 2월~2013년 1월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협상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 2013년부터는 협상문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안협의를 시작하였으며, 동 협정의 명칭을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로 확정함과 동시에 각국이 협상 참여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2013년 6월에 개최된 협상에서

* 다자통상협력과 서기관 김연수

1 WTO 전체 회원국이 아닌 희망하는 회원국들만 참여

TISA의 출범을 대외적으로 선언하게 되었다.

이러한 협상 진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 경제적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2013년 초부터는 통상절차법에 정해진 절차를 포함하여 협상 참여에 필요한 국내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청회(1.24), 두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1.14, 21)를 거쳐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4.25) 후 국회 보고(6.14)를 마치고 협상 출범 당시부터 협상에 공식 참여하고 있다.

(2) 주요내용 및 최근동향

대체로 선진국들은 자국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서비스시장 자유화에 적극적인 반면 개도국들은 수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인도, 남아공, 브라질 등 주요 개도국이 협상에 불참함에 따라 복수국간서비스협정은 WTO 체제 밖에서 별도의 FTA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3년 12월 현재 총 23개국[2]이 참여중이다.

주요 목표는 2012년 12월에 합의한 골격문서(Framework Document)에 나타나 있는데, 기본 방향은 WTO 서비스협정(GATS)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이후 체결된 FTA들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방침 하에 협상은 규범(협정문)과 양허(시장개방) 두 분야 모두의 자유화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참여국 확대를 통한 다자화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규범 측면에서는 분야별로 신규 규범의 도입과 기존 규범의 개선을 위한

[2] 우리나라,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터키, 이스라엘, 파라과이, 리히텐슈타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규제, 투명성, 인력이동, 항공, 통신, 금융과 같이 GATS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한편, 전자상거래, 특급배달, 에너지서비스, 전문직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범 제정도 아울러 시도되고 있다.

양허 협상의 경우 시장접근에 있어서는 포지티브 방식, 내국민대우에는 네거티브 방식을 사용하는 등 혼용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참여국이 목표시한인 2013년 11월까지 1차 양허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2013년 9월 중국이 협상 참여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서비스 시장 확대 및 복수국간서비스협정의 다자화 측면에서 중국의 참여를 환영하였으나, 미국이 중국의 협상 참여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중국의 협상 참여시기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3) 전망 및 대응방향

현재 복수국간서비스협정은 연 5회 협상을 개최하고 있다. 협상 타결의 목표 시점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규범과 양허 협상을 병행함으로써 가급적 조기에 타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에도 규범 및 양허분야에서 협상의 진전이 기대된다.

우리부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서비스 교역 관련 국제 규범형성에도 적극 기여하는 한편 참여국 확대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2.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1) 논의 배경

IT 산업 발전으로 새로운 품목을 ITA에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ITA 무세화 품목범위를 확대하려는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2013년 11월 이후 참가국간 의견 차이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다.

※ 기존 ITA(정보기술협정) 개요

○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T제품 및 부품(203개)에 대한 무관세화 협정('96.12 체결)

○ MFN 방식으로, 참여국들은 모든 WTO 회원국에게 해당품목 무세화

○ '13년말 기준 총 78개국이 ITA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가국들은 해당품목 전세계 교역량의 97% 이상 포괄

* 주요 참여국 : 한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스위스, 중국, 러시아 등

ITA 확대협상에는 우리나라·미·일·중·EU·대만·스위스 등 총 54개국(EU를 28개국으로 산정)이 참가하고 있다. 참가국들은 협상타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신규 참가국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참가국 수는 협상출범 시(32개국)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 ITA 확대협상 참가국('13년말 기준)

○ 우리나라, 미, EU(28국), 일, 중, 대만, 코스타리카, 호주, 말레이시아, 캐나다, 태국,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폴, 뉴질랜드, 필리핀, 홍콩, 이스라엘, 바레인, 모리셔스, 터키, 몬테네그로, 과테말라, 엘살바돌,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알바니아

* 세계무역기구과 사무관 김휘강

(2) 논의 내용

먼저 ITA 확대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품목은 디스플레이, 음향·영상기기, 전기기기, 의료기기 등 HS 6단위 기준 249개 품목으로, 기존 ITA에서는 반도체·컴퓨터·휴대폰 등 주요 IT제품 무세화된 것에 비해, 확대협상에는 전기기기·의료기기·계측기기 등 추가 및 소재·부품·장비 등 연관제품까지 무세화 논의가 확대되었다. 논의대상 품목은 참가국들이 무세화를 희망하는 품목을 모두 취합하여 리스트를 구성한 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최초 논의품목은 500여개에 달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품목에 대해서도 참가국별로 많게는 수십 개의 품목을 무세화 대상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중이어서 최종 무세화될 품목수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최종 무세화 대상으로 확정된 품목들에 대한 관세는 3년 이상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계획으로, 일반품목은 3년, 민감품목은 5년, 예외적인 경우 그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는데 참가국들이 전반적으로 합의하였다. 1996년 타결된 기존 ITA에서도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관세를 3년 간 균등철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ITA 확대협상에서는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 즉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철폐할 품목의 수 및 품목별 관세 철폐기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3) 주요 동향

확대협상은 15차 협의까지 진행되었으나 2013년 11월 15차 협의에서 무관세 대상 품목범위를 둘러싼 미-중 등 주요국간 의견대립으로 협상이 잠정 중단되었다. 중국은 논의대상 품목 중 60여개 품목을 논의대상에서 삭제(무세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면, 미국은 자국의 핵심 관심품목인 의료기기, 계측기기, MCOs(Multi-Component ICs, 반도체 복합구조칩) 등

의 관세철폐 수용을 중국에 지속 요구하였고, 중국은 현재의 입장이 최선의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추가적인 양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협상이 중단되었다.

(4) 우리 입장

ITA 확대협상은 우리나라가 높은 IT 분야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참가이익 극대화 및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계획이다.

주요국간 타협안이 마련될 경우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관심품목이 최종 무세화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요품목의 논의동향과 주요국 입장변화를 관찰하고 관련국과의 협의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제3절 다자통상협력

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3] 참여*

(1) 2013년 APEC 회의 개관

2013년 APEC 21개 회원국[4]은 인도네시아를 의장국으로 하여 정상회의(10.6~7), 장관급 회의인 통상장관회의(4.20~21)와 합동각료회의(11.4~5)를 비롯하여, 연중 네 차례 고위관리회의를 개최[5]하였다. 또한 무역·투자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실무급 산하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아·태 지역의 성장·발전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적인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발리에서 개최된 제21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복원력 있는 아·태 지역, 세계 성장의 엔진(Resilient Asia-Pacific, Engine of Global Growth)"

* 다자통상협력과 사무관 구교영

3 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4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ASEAN 7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5 제1차 고위관리회의(2.6-7, 자카르타), 제2차 고위관리회의(4.18-19, 수라바야), 제3차 고위관리회의(7.5-6, 메단), 최종 고위관리회의(10.1-2, 발리)

을 주제로 하여, APEC이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고실업 극복을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 APEC 연계성 비전[6], 형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3대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아울러 정상회의 기간에 함께 개최된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아 천여명의 아·태 역내 주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혁신의 비즈니스 : 왜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정책을 소개하였다.

(2) 주요 의제별 논의 및 성과

①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

회원국들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을 모색하였다. 정상들은 DDA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는 한편 FTA를 통한 글로벌 통상의 지역주의 경향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자무역체제 강화가 여전히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공감하고, 제9차 WTO 발리 각료회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정상회의 별도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세계 경제의 침체와 저성장으로 인해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발동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APEC은 지난 2008년 리마 정상회의에서 처음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을 한 이래로 이를 매년 재확인해 오고 있다. 금번 정상회의에서도 2016년까지 동 약속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6 연계성(connectivity) : 국가간 사람과 물건의 이동을 촉진하는데 있어 긴요한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결성을 포괄하는 개념

한편 다자체제 강화를 위한 APEC 차원의 장기 비전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7]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8],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9] 등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대 FTA들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회원국들은 이들 FTA를 통한 지역경제의 블록화를 경계하면서, FTA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투명성과 개방성을 제고함으로써 이들 거대 FTA가 높은 수준의 아·태자유무역지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② APEC의 연계성 비전

또한 회원국들은 아·태지역의 경제 성장과 장기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상품과 인력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상을 담은 '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10]'와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계획[11]'을 각각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채택하였다. 연계성 프레임워크는 물류·통신 인프라의 확충, 국가간 규제 제도의 조화, 관광·교육을 통한 인적 교류 증진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역내 국가간 연계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7 FTAAP :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8 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9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10 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APEC Connectivity Framework) : 물적 인프라 확충, 관련 제도 정비, 제품과 인적 이동의 자유화 제고를 포함하는 포괄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APEC 차원의 구상

11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계획(APEC Multi Year Plan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nvestment) : 2013-16년간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각종 규제의 조화·개선, 정부 역량강화, 금융 환경 개선 등에 관한 계획

특히, 도로, 항만 등 경제성장에 기반이 되는 물리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인프라 개발을 위한 민간 투자 확대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바람직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 우리 대통령은 수익성 있는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역량 배양이 중요하며,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기 위해 정부, 민간, 다자개발은행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풍부한 민간 인프라 투자 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

APEC 회원국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2010년 요코하마 정상회의에서 5가지 성장전략[12]으로 구성된 'APEC 新성장전략'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금년 APEC에서는 특히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나로 포괄하는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요 의제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회원국들은 인류가 직면한 식량, 에너지 자원, 물 부족 등 점증하고 있는 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형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우리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국가간 및 계층간 보다 형평한 성장을 위하여 선진 회원국들이 기술 이전 등 개도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을 역설하였다.

12 균형 성장(Balanced Growth),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혁신적 성장(Innovative Growth), 안전한 성장(Secure Growth)

(3) 전망

2014년 APEC은 중국을 의장국으로 하여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을 통한 미래 형성”을 주제로 하여, 지역경제통합 증진, 혁신적 발전·경제개혁·성장 촉진,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 등의 이슈를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3] 무역위원회 참여*

(1) 개관

OECD는 세계 경제의 주요 동향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국제 경제 분야의 논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3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2013년에도 OECD 각료이사회와 무역위원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OECD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 통상 분야 주요 이슈별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정부의 통상 정책 수립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2) 각료이사회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는 연 1회 개최되며, 2013년에는 노르웨이가 의장국을 맡아 5월 29~30일간 파리에서 개최하였다. 각료이사회는 “일자리, 평등 그리고 신뢰(It’s all about people: Jobs, Equality and Trust)” 라는 주제 하에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성장

13 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다자통상협력과 사무관 김보연

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동 각료이사회의 무역 세션에서는 기업생산 전 과정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s) 현상이 심화되는 세계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무역, 일자리'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회원국들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교역 증대 및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원활화 및 무역자유화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우리는 무역 세션에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촉진하고자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정책들을 소개하고,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무역위원회

한편, 무역위원회와 무역위 산하 작업반 회의는 2013년에 각각 2회, 4회 개최되었다. 우리는 무역위와 산하 작업반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무역 자유화를 위한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는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우리는 무역위가 2007년부터 추진해 온 서비스무역 제한 지수(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개발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STRI는 서비스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각국의 조치를 정량화하여 국가별·산업별로 서비스 규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수이다. 무역위는 동 작업 결과가 2014년에 최종 발표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4장

양자 통상협력 추진

제1절 미주

1. 미국*

(1) 교역·투자 현황

한·미 총 교역규모는 2008년 이후 중국, EU에 이어 3위('11년 4위(중·일·EU·미))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 교역규모는 667억불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전년대비 21% 감소하였지만, 2010년에는 902억불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2011년에는 1,008억불, 2012년 1,018.7억불, 2013년 1,035.6억불 등 한미 FTA 발효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미(對美) 무역수지 역시 1998년 이후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흑자규모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2013년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은 전년대비 6% 증가한 620.5불, 대미 수입은 전년대비 4.2% 감소한 415억불을 기록하였다

2013년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은 전년대비 6% 증가한 620.5억불, 대미 수입은 전년대비 4.2% 감소한 415억불을 기록하였다. 한·미 교역의 특징

* 미주통상과 사무관 하유진

은 첨단제품을 중심으로 한 '산업내 교역'의 특징과 함께, 대미(對美)수입은 상대적으로 품목이 분산되어 있는 반면, 대미(對美)수출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집중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1의 투자 대상국이며 '13년 대미 투자액은 53.6억불로 동기간 우리나라 해외투자 총액(351.2억불)의 15.2%(신고기준)에 해당한다. 미국의 대한 총투자는 '13년까지 533억불(누계, 신고기준)이며, '13년 미국은 우리나라에 266건 35억불(신고기준)을 투자하였다.

중국이 각국의 핵심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면서부터 한국의 대미 교역비중 및 미국의 對韓 교역비중이 축소되는 추세이나 양국간 교역 규모는 지속 증가 중으로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다. 특히 한미 FTA 체결 이후 혜택품목을 중심으로 교역이 확대되고 있어 양국의 경제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1. 한·미 연도별 무역 현황

단위: 억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수출	금액	457.7	463.8	376.5	498.2	562.0	585.3	620.5
	증가율	6.0	1.3	△18.8	32.3	12.8	4.1	6.0
수입	금액	372.2	383.7	290.4	404.0	445.7	433.4	415.1
	증가율	10.6	3.1	△24.3	39.1	10.3	△2.8	△4.2
무역규모		829.9	847.5	666.9	902.2	1,007.7	1,018.7	1,035.6
무역수지		85.5	80.1	86.1	94.1	116.4	151.8	205.4

(2) 경제·통상 협력

'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투자유치, 한미 에너지 협력 강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대통령 방미 계기 뉴욕에서 개최한 외국인 투자유치 신고식(5.6)에서는 새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의지를 표명하고, 보잉(Boeing) 등 7개 기업으로부터의 3.8억불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양국간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장관대행(Daniel B. Poneman)간 면담을 가졌으며, 향후 협력을 위한 「한미 에너지협력 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5.7). 동 공동성명에서는 ①셰일가스, ②가스하이드레이트, ③클린에너지 기술 등의 분야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한미 경제인 오찬(5.8) 등 경제인 행사를 개최하여 양국 기업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간 통상현안 협의 노력도 지속하였다. 지재권, 특허, 수입규제, 자동차, 의약품, 금융정보 이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양국 정부는 한미 통상장관회담(4.19, 8.21)을 개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주한미국대사 면담(4.30, 10.21) 등 고위급 및 실무자급 면담을 개최하였다. 또한 미 USTR측과 한미 정례통상협의(통상정책국장-USTR 부대표보)를 개최하여 무역구제, 지재권, 분쟁광물 규제 등 양국간 관심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 외 한미 FTA 이행 이슈는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11.5) 등 분야별 이행위원회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암참, 미 상의 간담회 등 미국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정례 협의체 및 수시협의를 통해 양국간 상호 신뢰와 이해를 제고하고, 한미 간 통상현안이 통상 마찰로 발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 캐나다*

'13년 한·캐나다 교역규모는 99.2억불로, '11년 첫 100억불 돌파 이후, '12~13년 100억불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광업 및 제조업 분야를 중심[14]으로 캐나다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뤄졌다.

한국은 자동차 등 공산품을 캐나다로 수출하고, 캐나다로부터 자원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한·캐 FTA 체결로 양국간 투자와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 3위 원유매장국(오일샌드 포함)이자 주요 광물자원이 풍부한 캐나다는 한국의 에너지·자원분야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12년말 기준 5.3억불 규모의 15개 광물프로젝트, 온타리오州 풍력·태양광 단지 건설 등 관련 사업들이 진행중에 있다.

이와 관련, '13.11월 캐나다 13개州중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활발[15]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수상이 방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가지고 그간 양국간 에너지 협력현황을 평가하며 추가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크리스티 클락 BC州 수상은 에너지·자원 부문에서 협력 지속의사를 피력하며, LNG사업 진흥을 위해 관련 투자 유치, 예측가능하고 신뢰성 높은 시스템 구축, 조세·지역사회·노동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중임을 홍보하였다.

* 미주통상과 사무관 임정은

14 업종별 투자규모 : '13년 기준 광업 9,160백만불(77.1%), 제조업 1,182백만불(9.9%)

15 '12년 기준 캐나다 총 수출 금액중 BC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51.7%로 최대, BC주의 주요 對한국수출 품목은 광물제품 및 기초금속류임

3. 중남미*

중남미는 거대소비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안정된 경제성장과 중산층 급부상으로 우리기업의 시장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신흥시장이다.

우리나라의 대(對) 중남미 교역은 1987년 이후 27년간 연속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2013년 대(對) 중남미 무역흑자는 180억불로 전체(441억불)의 40%를 차지하였다.

교역액(억불): ('04)182 → ('10)508 → ('11)603 → ('12)565 → ('13)547

우리나라의 대(對) 중남미 투자는 2013년 누계기준 220억불이며, 중남미의 대 한국 투자는 89억불 규모 수준이다.

중남미는 리튬, 구리, 철광석, 아연, 석유, 셰일가스 등 전략자원이 풍부하여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중남미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기존 광물유전 위주 경제협력이 인프라, 전력·에너지효율, 정보통신, 농업, 바이오, 방산 등 신성장동력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우리기업의 대(對) 중남미 건설수주가 '03년 80만불에서 '13년 33억불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3년 10월 중남미 경제의 중심국가인 멕시코와 브라질에 정부사절단을 파견하여 자원협력위원회와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재국의 에너지자원개발 참여확대, 플랜트 진출 및 수출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브라질, 페루 등 중남미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표준체계 전수를 통해 표준·인증기관의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수출기업의 기술무역장벽 사전 제거 여건을 마련하였다.

* 미주통상과 사무관 정경화

제2절 구주*

1. 개괄

2013년은 대통령의 프랑스, 영국, 벨기에 등 서유럽 주요 국가와 유럽연합(EU) 방문으로 서유럽과의 경제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진행된 한 해였다. 대통령 취임 첫 해 양자 차원의 유럽 순방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창조경제 추진에 있어서 창조경제의 본산지인 유럽과의 경제협력을 각별히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 유럽순방을 계기로 유럽의 기초과학 및 고도기술과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 등을 접목하여 기술 개발에 시너지를 제고하고, EU 및 유럽 주요국과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유럽과 우리 나라간 교역 및 투자 규모 확대와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을 구축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2013년에는 대통령 유럽방문을 통한 경제협력 외에도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특히, 양국 정상회담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서울에서 번갈아 두 번 개최되어 양국간 경제협

* 구주통상과 사무관 박다정

력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2. 대통령 서유럽 주요국 및 유럽연합 순방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서유럽의 주요국가인 프랑스, 영국, 벨기에 및 유럽연합(EU)을 차례로 방문하여, 이들 국가 및 기관과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 프랑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 2일부터 11월 4일간 프랑스를 방문하였다. 창조경제 정책에서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기술 개발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이 중요한데, 첫 방문 국가인 프랑스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과 프랑스의 '미래 신산업 지원 정책'간 공통점에 주목하고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신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의 창조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 교역 장애 철폐, 상호 시장에 대한 이해 증진, 산업분야 진출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활동을 지원 등 경제분야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양국간 경제장관급 대화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프랑스의 공공투자은행(BPI France)은 대형 프로젝트 위주의 공동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프랑스 수출보험공사(Coface)간 제3국 수출 및 해외투자와 관련된 공동 금융지원 MOU를 체결하여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동 기간 양국 경제단체 회장 등 기업인 240여명이 참석한 한국-프랑스 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양국 민간기업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영국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에 이어 2013년 11월 4일부터 11월 7일간 영국을 방문하였다. 동 방문시 양국 정상은 2020년까지 교역규모와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를 2배 증가시킨다는 공동 목표하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양국 정부간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JETCO: Joint Economic and Trade Committe) 및 양국 기업간 한·영 글로벌 CEO 포럼을 정례적으로 연계하여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이번 방문 기간 중 제1차 한·영 JETCO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영국 기업혁신기술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개최되었는데, 이를 통해 양국은 무역·투자, 국제경제, 에너지, 문화, 보건, IT 등 6개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제1차 한·영 JETCO와 연계하여 양국 기업간 제1차 한·영 글로벌 CEO 포럼도 개최되어 민간에서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무역·투자,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총 7건의 구체적인 공동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는데 앞으로 이를 통해 동 분야에서 산업협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한류상품 박람회, 영국 TESCO사 매장을 통한 한국 식품전 등 한국의 상품 및 음식을 해외에 소개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었다.

표 4-2. 2013년 11월 대통령 영국 순방시 체결된 경제분야 협력 양해각서

무역·투자 분야	•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영국 수출금융청간 재보험 양해각서
	• 대한무역투자공사와 영국무역투자청간 협력 양해각서
	• 대한무역투자공사의 M&A 지원 양해각서
에너지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의 상업적 원전협력 양해각서
	• 한국수소연료전지 Test-bed 센터와 영국 수소연료전지 Supergen Hub간 협력 양해각서
	• 한국 에너지산업기반협의회와 영국 옥스퍼드대간 에너지기술 양해각서
산업분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영국 스트라스클라이드 대·뉴캐슬대간 해양플랜트 인력양성 협력 양해각서

(3) 벨기에/EU

박근혜 대통령은 영국에 이어 2013년 11월 7일, 8일 양일간 유럽순방의 마지막지인 벨기에 및 유럽연합(EU)를 방문하여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이며 우리의 중요한 무역·투자 파트너인 EU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한국과 EU는 1963년 수교이래로 지난 50년간 양자간 교역규모를 1천억불로 확대하였으며, 한·EU FTA를 통해 양자간 상호 교역 및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자 정상회담(EU측은 헤르만 반 롬퓌이 상임의장관 조제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이 참석)에서 양 정상은 한·EU FTA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동 협정 이행관련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산업경쟁력강화, 기업가 정신 증진, 혁신활동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산업정책 분야에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고위급 산업정책대화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 방문시 독일, 프랑스, 벨기에 및 이탈

리아의 대표적인 5개의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3.7억불의 한국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통령의 이번 순방기간인 11월 7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투자유치식에서 유럽을 대표하는 초우량 기업들이 R&D센터,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및 고도기술수반 제조공장을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발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술이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유레카 사무국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우리 중소기업과 EU의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도모하였다. 또한, 유럽 한국경제단체(KBA Europe)가 이번 방문 계기에 새롭게 출범하여 향후 EU를 상대로 한국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통상 및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EU 양측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3. 2013년 유럽 5개기업 투자유치 프로젝트 개요

투자가		프로젝트	비고
기업명	국적		
Versalis	이탈리아	합성고무 제조공장 설립(여수)	FDI 1억불
BASF	독일	아태지역 전자소재 R&D센터(수원)	연구인력 약 40명 고용
LFB	프랑스	바이오 의약품 제조공장 설립(오송)	기술제휴
Solvay	벨기에	신화학 제조공장 설립(새만금)	신기술 단독투자
Siemens	독일	에너지솔루션즈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 지역본부(서울)	엔지니어 약 520명 고용

3. 양자경제협력

(1) 러시아

2013년은 러시아와의 양자협력을 위한 움직임이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게

전개된 한해였다. 양국은 2013년 4월 18일 공동으로 제2차 '한·러 비즈니스 어워드'를 개최하여 양국에 진출한 우수한 기업들을 포상하여 격려하고 무역, 투자 등에서 더욱 활발한 교류를 당부하는 한편, 양국간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2년 재개하기로 합의한 한·러 산업협력위원회를 2013년 7월 8일 개최하여 자동차, 상호인증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향후 개발 잠재력이 큰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6월 18일 모스크바에서 제12차 한·러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남한과 북한 및 러시아를 잇는 전력망 공동 타당성조사, 러시아 극동지역 석탄개발을 위한 인프라 개선, 양국간 에너지효율 개선 등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3년 7월 3일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톡에서 매일경제 주관으로 개최된 극동 경제포럼을 지원하고 양국간 극동개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양국은 2013년 상트페테르부르크(9월 6일)와 서울(11월 13일)에서 번갈아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를 통해 양국 정상은 한국과 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핵심국가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아가기로 합의하였다. 한·러 정상회담을 위하여 방한한 푸틴 대통령은 제6차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도 참석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기업의 러시아진출을 직접 요청하는 특별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한국과 러시아간의 경제협력은 향후 출범될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개국 관세동맹과 유라시아경제공동체(EEU)와의 협력을 통해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호주, 뉴질랜드

호주는 우리나라의 광물자원 최대 공급국이고 해외광물개발 최대 투자국으로서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3년 8월 23일 호주 맬버른에서 개최된 양국간 에너지·자원분야의 민간협력 행사인 제34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고, 양국간 에너지·자원 협력과 더불어 소프트산업과 제조업간의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창조경제 분야의 협력가능성을 논의하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7월 26일 정전 6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한한 존 키(John Key) 뉴질랜드 총리와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을 갖고 한·뉴질랜드 FTA의 성공적인 타결과 이를 계기로 상호 경제협력과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3) 터키

최근 우리나라와 Post-BRICS 신흥 주도 중견국가인 터키와 상호 고위급 방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터키를 방문하여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통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였고, 이어서 2013년 7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터키를 방문하여 양국 총리회담시 한·터키 FTA 출범평가, 양국 교역·투자 활성화, 한국 기업의 터키 인프라 건설 참여 등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국간 실질적인 통상 및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13년 5월 1일 발효된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과 향후 발효될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을 통해 경제적 효과가 제고된다면 양국 경제협력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중앙아 통상협력*

1. 경제동향

자원 수출 중심의 중앙아시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2009년 및 2010년 일시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중앙아 지역 국가들의 적극적인 사회 인프라 투자로 2011년 이후 건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2013년 경제성장률은 6.0%였으며, 향후 'Expo 2017' 및 '카자흐스탄 2050' 국가발전전략 등에 따른 투자 확대가 예상되어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률은 8.0%로, 2004년 이후 연간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왔다.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국내외 투자 증가에 따라 3년 연속 10%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카자흐, 우즈벡, 투르크멘을 포함한 중앙아 주요 5개국의 2013년 경제성장률 평균은 8%를 상회하였다.

중앙아 국가들은 자원의존적인 경제구조로 인한 경제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시스템의 현대화, 산업다각화 및 산업 수직계열화를 추진하고

* 통상협력총괄과 사무관 이우진

있다. 이에 따른 전기, 교통, IT 등 사회 인프라 투자가 예상되며 한국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 또한 기대된다.

표 4-4. 중앙아시아 주요 5개국 경제지표('13년)

국가	면적 (천㎢)	인구 (만명)	GDP (억불)	경제 성장률(%)	교역액 (억불)	수출액 (억불)	수입액 (억불)
카자흐스탄	2,717.3	1,718	2,203	6.0	1,313	825	488
우즈베키스탄	447.4	3,048	568	8.0	242	128	114
투르크메니스탄	488.1	510	406	10.2	295	171	124
타지키스탄	143.1	790	85	7.4	53	8	45
키르기즈스탄	198.5	560	58	10.5	64	17	47
5개국 전체	3,994.4	6,626	3,320	8.42	1,967	1,149	818

자료: 외교부, CIS 통계위원회

2. 교역·투자 현황

한국은 199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고 교역을 시작하였다. 공식적인 무역통계가 처음 집계된 1994년의 교역규모는 4억3천만 달러에 불과하였지만 2013년에는 36억9천만 달러로 약 8.6배 증가하였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교역은 1990년대는 주로 소비재 제품을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는 건설, 기계류의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우즈벡은 중앙아 주요 5개국 중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가장 크며, 2008년 교역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한 이후 2013년에는 2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카자흐와의 교역규모는 2009년 4억7천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13억 달러에 이르며 약 2.8배 증가하였다. 투르크멘, 타직, 키르기스 및 아제르바이잔 등 기타 중앙아 국가들의 경우, 물류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역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중앙아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기계

류, 화학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비철금속, 면제품 등의 원자재로서, 2013년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약 30억 9천만 달러이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투자 누계는 1994년 7천만 불에서 2013년 50.4억불로 증가하였다. 주요 투자 업종은 건설, 은행 등 금융서비스, 제조, 자원개발 등이다. 카자흐스탄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및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석유화학 플랜트 등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됨에 따라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표 4-5. 한·중앙아 교역 추이('13년)

국가	교역액 (백만불)	수출액 (백만불)	수입액 (백만불)	무역수지 (백만불)	투자(누계) (백만불)
카자흐스탄	1,323	1,074	249	825	3,490
우즈베키스탄	2,021	1,968	53	1,915	1,327
투르크메니스탄	141	141	-	141	-
타지키스탄	44	44	-	44	63
키르기즈스탄	165	164	1	163	161
5개국 전체	3,694	3,391	303	3,088	5,041

자료: 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3. 주요 협력 현황

(1) 산업자원협력

중앙아 지역은 석유·천연가스·광물 등 자원이 풍부하지만 산업화 초기단계에 있음에 따라 한국과 경제적 보완관계에 있다. 중앙아는 자원 및 에너지 인프라의 건설 수요가 증가하여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신흥시장이다. 특히 상당수 대규모 프로젝트가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 우리 정부와 상대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카자

흐 자원협력위원회 및 한·우즈벡 산업자원협력위 등 정부간 산업자원협력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주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한·카자흐 자원협력위는 2004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3년 9월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8차 회의에서는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의 착공 등 양국간 본격적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는 양국의 대표적인 경협사업으로서, 우리 정부는 자원협력위를 통해 전력구매조건 및 제반 협조사항을 명시한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정부간협정 보완의정서의 신속한 비준과 용량구매계약 및 이행계약 체결을 카자흐측에 요청하였다. 한·카자흐 자원협력위에서는 이 외에도 잠빌해상광구, 아티라우 석유화학플랜트 등 석유·가스 분야의 협력과, 신재생에너지 협력, 광물탐사 협력 또한 논의되었다.

그림 4-1.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사업개요

○내용: 석탄화력 1,320MW(660MW×2기) * BOOT(Build-Own-Operate-Transfer)방식 민자발전사업(IPP, 20년) ○사업자: 한국컨소시엄(삼성물산/한전) 75%, 삼룩에너지 25% ○사업비: 49억불(70%는 PF차관 조달)	

한국과 우즈벡은 「한·우즈벡 자원협력 MOU」('05.5)에 따라 자원협력위를 운영하였으나, 2011년 8월 정상방문시 한·우즈벡 자원위를 산업자원협력위로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3년 10월 타슈켄트에서 제1차 한·우즈벡 산업자원협력위를 개최하였다. 에너지·자원, 섬유기술협력, 전력, 태양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주요의제로 다루어졌다. 양국 정부

는 양국이 기존의 석유·가스 분야 협력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경제협력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우즈벡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서의 한·우즈벡 파트너십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즈벡은 풍부한 일사량 및 넓은 국토면적이라는 우위를 활용하여 2030년까지 4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규모는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양국 정부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의 3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태양광 실증단지를 공동 설계, 구축 및 운영하고, 대규모 태양광 민자발전사업 모델 또는 민관협력사업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국 정부는 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가스화학플랜트 사업, 우준쿠이 광구 탐사,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한·우즈벡 산업자원협력위 개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우즈벡 재무부는 2013년 12월 서울에서 「우즈벡 태양광 에너지 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양측은 태양광 실증단지를 공동 구축 및 운영하고, 기술협력, 인력양성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태양광 실증단지는 우즈벡 현지 환경에서 한국산 제품 및 기술이 적용된 최적의 태양광 발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양측은 양국 정부부처, 유관 협회, 연구소, 업계대표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실증단지 구축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 MOU 체결을 통해 우리기업의 우즈벡 태양광시장 진출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한국과 우즈벡 간 전략적 협력관계가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2) 정상외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아 국가 정상방한으로, 키르기즈스탄의 아탐

바예프 대통령이 2013년 11월 19일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경제·통상, 에너지·자원, 농업, 개발, 인적교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키르기즈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키르기즈 에너지산업부는 「한·키르기즈 에너지 및 산업분야 협력 MOU」('13.11)를 체결하였다. MOU는 화석연료 및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와 산업분야의 개발 촉진과 포괄적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양국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3) 뉴 실크로드 협의회

2009년 11월, 우리 기업의 중앙아 시장 진출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뉴 실크로드 협의회」가 출범하였다. 협의회는 중앙아 지역의 경제정책, 시장환경, 투자여건, 진출 노하우 등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들이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중앙아 진출을 지원하고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3년에는 제11차 회의('13.4), 제12차 회의('13.11) 및 제13차 회의('13.12)가 개최되었다.

협의회는 중앙아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중앙아시아 진출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을 발간('13.12)하였다. 가이드북은 중앙아 진출기업들이 현지진출 과정에서 실제로 겪었던 애로사항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작성한 국가별 투자환경, 애로사항별 해소방안(8개 분야 15개 항목), 국가별 진출시 유의사항 및 비즈니스 프로토콜로 구성되어있다.

제4절 동북아

1. 중국*

(1) 중국경제 동향 및 향후 전망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놀라운 속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13년 말 GDP 약 8조 9,393억 달러(세계 2위), 교역 약 4조 1,603억 달러(세계1위), 무역흑자 약 2,598억 달러, 천문학적 수준의 외환보유고 3조 8,200억 달러 (세계1위)라는 놀라운 거시경제 지표를 기록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세계의 공장'으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한데 반해, 2000년대 이후 내수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세계의 시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도농간, 빈부간 격차 심화 등 민생문제는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격차 문제의 해결이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 동북아통상과 사무관 윤진영

표 4-6. 중국의 주요 지표('13년 기준, 中 국가통계국)

구 분		내 용
규모	국토면적(만㎢)	960 (한반도의 44배, 세계 3위)
	인구규모(억명)	13.4 (세계인구의 1/5, 세계 1위)
경제 지표	GDP(억달러)	89,393 (세계 2위)
	1인당 GDP(달러)	6,569
	경제성장률(%)	7.7
	소비자물가상승률(%)	2.6
무역 및 투자	무역(억달러)	41,603 (세계 1위)
	무역수지(억달러)	2,598
	FDI유치액(억달러)	1,176
	외환보유고(억달러)	38,200 (세계1위)

중국은 약 10%의 고도성장을 30년간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경제 성장에는 외자기업의 투자와 가공무역 수출이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투자 및 가공무역 중심의 경제 발전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이행이 미진하고, 산업간 불균형 심화, 환경파괴·에너지 낭비, 지역간·계층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안정성 저해 우려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현 시진핑 지도부의 향후 5년간 경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18기 3중전회('13.11.9~12)에서 성장전략의 전환(양적→질적)을 목표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국유기업개혁, 금융개혁 및 대외개방의 경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14년 경제기조를 "안정성장, 개혁창조(穩中求進·改革創新)로 결정하여 중성장 추세를 수용하면서 개혁을 강조하여 경제구조의 업그레이드를 강조하고 있어 예년과 같은 연평균 10%내외의 경제성장보다는 7%내외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산업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2) 한중 교역·투자관계

중국은 거대한 시장규모, 지리적 근접성 및 문화적 유사성, 저렴한 생산비용,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우리의 중요한 교역 및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교역측면에 있어서 양국 정부는 '09년 10월 <한중경제통상비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역규모 2천억불 조기 달성 및 '15년 교역규모 3천억불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아래 '13년 말 약 2,289억달러를 기록하였고, 무역흑자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3년 말 기준 약 628억불에 달하고 있다.

표 4-7. 한중 교역규모변화('13년 기준, 무역협회)

단위: 억불, 괄호는 증가율%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한국 통계	총 계	1,180.2 (17.3)	1,450 (22.86)	1,683 (15.7)	1,410 (-16.3)	1,884 (33.6)	2,206.2 (17.1)	2,151.1 (-2.5)	2,289.2 (6.4)
	對中수출	694.6 (12.2)	819.8 (18.0)	913.9 (16.0)	867.0 (-5.1)	1,196 (34.8)	1341.9 (14.8)	1343.2 (0.1)	1,458.7 (8.6)
	對中수입	485.6 (25.6)	630.2 (29.8)	769.3 (11.5)	542.5 (-29.5)	716 (31.9)	864.3 (20.8)	807.9 (-6.5)	830.5 (2.8)
	무역수지	209	189.6	144.6	324.6	453	478.6	535.4	628.2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투자대상국으로 '13년 기준으로 투자건수는 약 4만8천건이며, 투자액수도 약 617억 달러(신고기준)로 전체 해외투자의 약 16.9%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한국의 대중 투자는 중소제조업, 노동집약형 가공무역, 동부연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중국 내 환경규제 강화, 임금상승, 인센티브 축소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투자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삼성반도체 시안투자, LG 디스플레이 광저우공

장, SK화학 우한공장, 현대자동차 중국4공장 투자 등)이다. 특히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투자비중이 70.2%를 기록('10～'13년 누계기준, '13년 수출입은행) 하는 등 향후 내수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8. 한중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억불, 전체 비중, 건수

	'08	'09	'10	'11	'12	'13	누계
中→韓	3.4 (2.9%, 389건)	1.6 (1.4%, 537건)	4.1 (3.1%, 616건)	6.5 (4.8%, 403건)	7.3 (4.5%, 512건)	4.8 (3.3%, 402건)	49.5 (2.5% 8,440건)
韓→中	49.2 (13.2%, 3,319건)	27.3 (8.8%, 2,124건)	44.1 (11.9%, 2,297건)	47.9 (11.0%, 2,210건)	65.3 (16.5%, 1,856건)	48 (13.6%, 1,880건)	616.8 (16.7% 48,581)

※ 자료: 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신고기준), 누계는 '62～'12.9(對韓), '88～'12.9(對中)

반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한국의 대중투자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의 대한 투자는 주로 기술습득을 위한 M&A형 투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유출이나 고용창출 측면에서 볼 때 적극적 투자유치 요인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발효 예정('14.5.17), 한·중 FTA 협상 및 정부의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 등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중국 기업들의 한국투자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대중 통상·산업 협력전략

중국과의 통상 및 산업협력 환경으로는 중국 내수시장의 발전이라는 기회요인과 중국의 정책변화로 인한 산업고도화, 진출기업 경영애로 증가라는 위협요인이 병존하고 있다.

우선, 내수시장의 발전이라는 기회측면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내수용 수입시장 점유율이 '12년 49.6%에 그쳐 일본(82.1%), 미국(56.9%), 독일

(73.2)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중국 내수를 타깃으로 한 통상협력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9. 주요국의 가공단계별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07	'08	'09	'10	'11	'12
한국	52.1	51	48.2	48.3	48.8	49.6
대만	30.9	28	27.7	31.1	30	33.6
일본	97.9	100.7	96.6	101.1	92.7	82.1
미국	58.3	61.5	62.6	53.8	53.5	56.9
독일	67.3	69	69	72.1	74	73.2

가공단계별: 일차상품, 중간재, 산업용 원자재, 부품(자동차부품 포함), 자본재 및 소비재 포함

자료: 중국해관 수입통계를 이용하여 정리(KIEP)

한편, 중국정부가 양적 경제성장 기조에서 질적 경제성장 추구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기업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 환경 및 노무규제 강화, 위안화 절상 등으로 인해 중소제조업 위주 투자기업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대중 경제협력의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경제가 성장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인건비 및 지가 등 생산비용 상승, 중국 현지 기업의 기술력 향상 등 거시환경도 변화하고 있어 기업의 빠른 대응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4) 성과1: 산업, 에너지, 통상 등 분야별 협력채널 확대

현 정부 들어 "통상"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된 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의 산업과 에너지 분야 대중국 협력채널의 활성화에 더불어, 새로이 중국 상무부와 통상채널을 신설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대중 협력채널을 확대, 발전시킴으

로서 양국 통상관계의 원활한 활동을 측면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13.6월 VIP의 방중시 중국정부와 "한중 경제통상 협력 수준제고에 관한 MOU(상무부)", "한중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강화에 관한 MOU(과학기술부)" 및 "한중 에너지 절약 협력 MOU(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을 체결하여 산업, 에너지 및 통상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통상분야 MOU를 통하여 양국은 통상장관 회담 개최와 더불어 실무회의격인 "한중 통상협력협의회(국장급)"를 신설하여 양국간 통상현안 해소 및 교역·투자 협력확대 방안을 논의('13.9월 1차회의 개최)하였으며, 응용기술 및 산업화 MOU체결 후 양국은 양국 공동연구과제 5개를 선정하였다. 이로서 중국측 파트너와의 공동 R&D추진으로 우리기업에게 새로운 시장확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 에너지관련 민관 초청 연수 및 한중 합작기업에 대한 에너지진단 시범사업 실시 등의 후속사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민간분야의 대중국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중국 중부의 중심지인 우한에 석유화학 공장 건설을 통해 중국 중부내륙지방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SK종합화학-SINOPEC"간 MOU 체결과 동북아오일허브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석유공사와 SINOPEC간 MOU 체결 및 바이오분야의 양국 기업간 파트너링과 매칭 촉진을 통한 신흥산업협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협회-생물바이오센터"간 MOU를 체결하여 우리산업의 외연확장에 기여하였다.

표 4-10. 통상, 산업에너지R&D협력 및 에너지절약 MOU 주요내용

	MOU 주요내용
통상	통상 및 투자협력 협의채널 정례화, 중국 중서부 대개발 및 도시화 사업에 우리기업 진출기반 마련, 3국 공동진출시 금융지원지지 등 합의
산업에너지 F&D협력	산업 에너지 R&D 장관회의 신설, R&D 협력분야를 에너지까지 확대, 신성장 분야 공동 R&D 확대, 기업협력센터 설립
에너지절약	노후 산업단지의 에너지효율화 사업 공동추진, 에너지절약 비즈니스 센터 설립,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등 합의

(5) 성과2: 중국 지방정부와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92년 한중 수교이후 우리의 대중진출은 중국의 연안지방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에 집중되었다. 이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동부 연안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동부지역이 경제발전의 중심축이 되고있는 현실에 기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등 다양한 지역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발전을 내륙으로 확산하고 있어, 우리의 대중진출도 이러한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09년 중국 31개 성시 중 가장 경제규모가 큰 광동성과 협력채널을 개설하여 '10년부터 한-광동성 포럼을 매년 한국과 광동성을 오가면서 개최하고 있다. 특히, '13년 제4회 한-광동성 발전포럼('13.10.15)에서는 "신흥전략산업 및 서비스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주제로 양국간 협력방안 모색 및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양국간 교역증진에 노력하였다.

한편, 중국 서부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섬서성과 장관급 '경제협력 협의회'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12.11)하였다. 섬서성은 중국 서부 경제중심으로 산업기반이 우수하고 중국의 중앙아시아·유럽 진출의 통로로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급부상 중인 지역으로, 최

근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진출 등 우리기업의 중서부 진출의 전초기지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3년에는 실무급회의(5.21)에 이어 VIP 방중시 섬서성을 방문하여 우리기업의 원활한 진출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6) 성과3: 양국 교역증진 및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산업협력사업 예산 등을 활용하여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동부연안에 집중된 교역구조를 동북 및 중서부로 확대하기 위해 '09년부터 '13년까지 중국 중부 및 동북지역 국가급 투자무역박람회에 참가단을 파견하였다. 또한 중국 서부대개발 민관합동 조사단('00～'09)과 중서부지역 투자환경 조사단('10～'13) 사업을 통해 보다 다양한 사업기회를 찾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중국정부의 성장 패러다임이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변화하고, 내수시장 규모 또한 연평균 44%정도 증가하여 '92년 110억위안에서 '13년 2,378억위안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중국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즉, '11년 <한중 교역협력 확대방안>을 마련, '12년 북경 서비스교역회에서의 한국관 개설 및 '13년 VIP 방중시 "글로벌 파트너링 차이나" 및 "내수시장개척 유통상담회"를 개최하여 우리기업의 중국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양국 교역은 '13년 기준 2,288억불로 수교이후 약 35배 성장하였으며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며,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한중교역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한·중 FTA 협상이 '12.5월 개시되었으며,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시장으로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13.9월 1단계 협상 완료)

표 4-11. 최근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사업 현황

구분	주요 사업
'09	한중 무역투자 정보망 개설('09~) 중국 프렌차이즈시장 진출지원, 동북아·중부 투자무역박람회
'10	한-광동성 무역투자포럼 개설, 중소벤처기업 내수시장 진출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11	조달 및 공공 프로젝트 플라자, 대형 유통기업 초청 상담회, 중서부 투자환경조사단 파견 등
'12	광동성 녹색시장 진출 로드쇼, 동북지역 신경협방안 마련 중서부 투자환경조사단 파견, 한중 수교 20주년 산업협력 포럼
'13	동북아 박람회, 북경서비스 교역회, 중서부 투자조사단 파견,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 개최 등

(7) 성과4: 기업의 애로 해소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과 임금 등의 생산요소 가격 상승, 가공무역을 제한하는 중국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08년 이후에 한국기업의 무단철수 문제가 불거짐으로써 중국진출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대응과 사회적책임활동(CSR)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3년 VIP 방중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CSR 경영을 통해 중국 국가전략 및 목표달성에 기여"한다는 한국기업의 CSR 추진방향 및 교육지원, 의료지원, 지역사회지원, 환경보호, 재난구호 등의 활동 분야를 발표하여 중국과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방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중국 진출기업의 애로해소 및 내실화를 중점 지원하였다.

특히 중국의 6대 거점 지역(북경, 청도, 상해, 광주, 대련, 서안)에 투자기업 지원의 허브역할을 하는 투자기업지원센터를 KOTRA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기술축적과 지재권보호 지원을 위한 IP China Desk와 현지 경영에 애로를 겪는 투자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유턴기업지원센터(북경, 상해, 청도, 광주, 심양)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기존 1회 개최해 오던 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를 '10년부터 연 2회 개최해 오고 있다. 지역별 한국상회와 지방정부간 네트워킹도 지원함으로써 중국 내 우리기업의 입지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우리기업의 대중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구축('13.9) 및 비관세장벽 협의회('13.11)에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한 대중국 비관세 장벽 리스트를 마련하였다. 이후, 한·중 FTA 협상 및 한·중 통상장관회담 등 각종 통상채널과 부처별 협의채널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에 영향력이 큰 중국의 비관세 장벽제거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기존에 운영하던 '차이나 포럼'과 '중국연구회'를 '13년에 '중국경제 모니터링 회의'로 개편하여 중국 거시경제 변화를 미리 살펴봄으로써 중국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2. 일본*

(1) 일본 경제 동향 및 향후 전망

2013년 일본경제는 2012년 말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회복 국면을 보였다. 「아베노믹스」란 2012년 11월에 취임한 아베 수상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장기 디플레이션 상황에 처한 일본경제를 소비·투자·수출 진작을 통해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출시키려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구체적인 정책은 일반적으로 '3개의 화살'로 표현하고 있다.

첫 번째 화살은 '대담한 금융완화' 정책으로, 소비·투자증대를 통해 물가를 2년 동안 2% 정도로 상승시키려는 정책이다. 또한 금융완화는 엔저 현상을 초래하므로 수출 증대도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화살은 '기동적인 재정' 정책으로 정부지출의 확대로 총수요를 제고하고 내수시장활성화를 도모하되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 화살은 '성장전략'으로 중장기적인 일본 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건강·에너지 산업 창출, 해외수요 개척을 위한 통상전략의 책정과 규제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아베노믹스의 정책 효과로 2013년 일본경제는 1.4% 정도 물가가 상승하여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엔 환율도 20% 이상 절하되어 기업수익 향상 기대로 인해 주가도 상승하고 있다. 또한 소비·투자 등도 약간씩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등 수출 회복은 아직 지연되고 있다.

---

* 동북아통상과 사무관 송진우

향후 일본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지는 성장전략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장전략은 비교적 정책 수행이 쉬운 금융완화·재정출동과는 달리, 규제완화 등의 구조전환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성공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경제가 심각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했다는 측면에서 2013년은 일본경제의 주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표 4-12. 일본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GDP(억엔)	518조 2,309	489조 5,885	512조 3,642	510조 445	517조 4,248	525조 3,902
1인당 GDP(불)	37,865	39,321	42,917	46,175	46,175	38,491
성장률(%)	△1.0	△5.5	4.7	△0.5	1.5	1.5
물가상승률(%)	1.1	△2.0	△0.3	△0.3	△0.2	1.4
실업률(%)	4.0	5.1	5.0	4.6	4.3	4.0
수출(억불)	7,759	5,809	7,670	8,208	8,013	7,192
수입(억불)	7,561	5,510	6,914	8,531	8,886	8,389
무역수지(억불)	198	299	771	△323	△872	△1,197
ODI(억불)	1,308	747	572	1,088	1,223	1,350
FDI(억불)	246	118	△14	△17	17.6	23.6
환율(엔/불)	103.36	93.57	87.78	79.81	79.79	97.60
외환보유고(억불)	10,306	10,494	10,962	12,958	12,681	12,668

* 출처: IMF, 일본 내각부, 일본 재무성, 일본 무역진흥회

(2) 한·일 무역·투자 관계

<무역>

2013년 한·일 교역량은 947억 달러로, 2년 연속 1,000억 달러를 상회했던 한·일 교역량이 축소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일 수출은 347억 달러로 전년대비 10.7%가 감소하였으며, 대일 수입은 600억 달러로 전년대비 6.7% 감

소하였다. 그러나 대일 무역적자는 254억 달러로 2012년(256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일수출 감소는 엔저로 철강·화학제품 등 산업재 분야에서의 수출 감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한일 정치관계 악화로 스마트폰, 한류제품 등의 수출 감소도 한 몫 하였다.

엔저에도 불구하고 대일수입이 감소한 것은 주로 소재·부품의 대일 수입 감소(2012년 23.0% → 2013년 20.8%)가 크게 기여하였다. 그동안 노력해 온 부품·소재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3. 한·일 연도별 무역현황

단위: 억불, %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수출	금액	240	265	264	283	218	282	397	388	347
	증가율	10.7	10.4	△0.6	7.1	△22.9	29.4	40.8	△2.2	△10.7
수입	금액	484	519	563	610	494	643	683	644	600
	증가율	4.9	7.3	8.3	8.4	△18.9	30.1	6.3	△5.8	△6.7
무역수지		△244	△254	△299	△327	△276	△361	△286	△256	△254

* 출처: 한국무역협회

<투자>

일본은 1962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누적 FDI의 16.2%를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제 2위의 투자국이다. 그러나 2013년 일본의 대한 투자액은 26.9억 달러로, 2012년 과거 최대였던 45.4억 달러에 비하면 59% 수준에 불과하다. 그 배경으로 2012년의 대한 투자가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점, 일본기업의 아세안 진출 붐, 한일 정치관계 악화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로 수송기계, 금속·비철금속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자동차 부품 등 일본기업의 부품 표준화·조달선 다변화 정책 등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한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서비스업의 진출도 지속되고 있다.

표 4-14. 한·일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억불, 건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누계*
對韓 투자	금액	22.6	18.8	21.1	9.9	14.2	19.3	20.8	22.9	45.4	26.9	355.0
	건수	557	612	584	469	460	370	422	500	564	447	12,733
對日 투자	금액	3.2	2.2	2.9	8.0	6.4	4.2	3.4	2.6	6.6	8.6	57.9
	건수	196	265	391	463	376	348	372	265	354	423	4,731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은행(신고기준, 누계는 '62~'13, '68~'13)

(3) 한·일 산업협력 전략과 그간의 주요 성과

2015년은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일본과의 산업협력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되며.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 관계는 동반성장·공동번영의 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① 한·일 비즈니스분야에서의 협력

한·일 양국 기업 간의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무역투자 확대 및 기술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앞선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이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내 대기업과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비즈니스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구미, 포항, 익산, 부산 진해 FEZ에 조성한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일본 부품소재 기업들의 입주를 위해 부품소재전용공단투자조사단을 2009.10월부터 2013.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유치하여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한일 양국 정상 합의에 의해 2009년부터 매년 양국 부품소재분야 교류확대를 위한 '부품소재 조달공급전시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일 산업기술 페어, 지역간 교류회의(큐슈, 호쿠리쿠, 환황해)' 등의 개최를 통하여 부품소재 분야의 협력기반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10월에는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 나고야대학 특별교수를 초청하여 한·일간 공동연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부품소재 분야의 인력교류 확대를 위하여 일본의 우수 퇴직 기술자를 초청하여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뿌리산업 분야와 환경 분야에서 선진 기술의 교류와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② 한·일 미래산업분야 협력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변화 등 양국이 공동으로 겪고 있는 경제·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료서비스산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 신산업 분야인 '한일 그린 파트너 십 구상'을 2009.10월에 합의하여 스마트 그리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일환경보호협력위원회를 2013.12월에 개최하여 일본과의 환경산업협력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한·일 경제인 회의('13.4월), 한·일 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13.11월),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13.11월) 등 민간 부문의 협력채널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신산업 분야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오고 있다.

③ 제3국 시장 공동진출

인프라 수출과 자원 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제3국 시장에서 양

국이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여 세계시장을 함께 개척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무역보험공사와 일본무역보험공사 간 재보험 협력약정('11.2월),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본국제개발은행 간 협조융자 MOU 등 양국 금융을 활용하여 3국 진출에 대한 금융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

끝으로 한·일 양국은 '92년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양국에 각각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및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등이 각각 예산을 지원하여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4-15. 한·일 양국 주요 협력채널 및 행사 개최 실적

구분	주요내용 및 실적
부품소재조달 공급전시 상담회	○ '08년 한일정상회담에서 부품소재분야 교류확대를 위한 전시상담회 개최 합의 ○ '09.4월, '10.9월, '11.11월, '12.11월 등 4차례 개최
한일산업 기술페어	○ 한일산업협력 유공자 포상, 비즈니스 상담회, 기술 고문 매칭, 세미나 등 개최 ○ '08년부터 '13년까지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
한·큐슈 경제교류회의	○ 일본 큐슈지역과의 경제교류활성화를 위해 '키타큐슈 '코리아페스타'에서 합의 ○ '93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3년까지 20회 개최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 일본 호쿠리쿠지역과의 경제교류활성화를 위해 한·일 민관합동 투자촉진회의에서 합의 ○ '00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3년까지 14회 개최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 환황해 지역의 경제교류확대를 위해 '99년 ASEAN+3 정상회의시 3국 정상간 개최 합의 ○ '01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3년까지 12회 개최
한일경제인 회의	○ 한일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69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
한·중·일 비즈니스서미트	○ '09년 제2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 경제단체간 개최 합의하고, '09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년까지 4회 개최
한일에너지 실무협의회	○ 에너지자원 정책교류 및 현안 논의를 위해 '86년부터 양국 국장급 정례회의 개최 ○ '11.11월 제 16차 회의 개최 후 추가회의 없음

구분	주요내용 및 실적
한일디지털 경제정책협의회	○ '00.9, 한일정상회담 시 「韓日IT 協力이니셔티브」채택이후 한일 IT 정책교류를 위해 개최 ○ '01년 1차회의 시작으로 '11년까지 14회 개최
한일조선 과장회의	○ 한일 양국 조선산업 현황 및 정책 등 현안 논의를 위해 '85년 설립 ○ '10년 37차 회의 개최 후 추가회의 없음
한일민관 철강회의	○ 한일간 철강 산업 현안 논의를 위해 '00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 ○ '13년 5월까지, 14회 회의개최
한일가스 정책 협의회	○ 한일 양국 가스(LNG, LPG등)정책협력 강화를 위해 '11년 설립 ○ '13년 까지 진행, 현재는 추진계획 없음
한·중·일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회의	○ '10년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 엔지니어링 업체간 정보교류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엔지니어링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신설 ○ '11.10월 일본에서 1차회의 개최 후 추가 회의 없음
한일수출통제 협의회	○ '08년6월 양국간 전략물자 교역촉진환경구축, 수출통제관련 정보 교환 목적으로 신설 ○ '13년 9월까지 4차회의 개최

제5절 아주

1. 아세안(ASEAN)*

(1) 창설배경 및 발전과정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이 지역안보 환경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67년 8월 방콕에서 아세안 창립선언(일명 방콕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결성되었다. 이후 브루나이(1984년), 베트남(1995년), 라오스(1997년), 미얀마(197년), 캄보디아(199년) 등 5개국이 추가로 가입하면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를 아우르는 지역협력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1967년 창설 이래 아세안은 40여년간 내부결속을 확고히 하면서 성공적인 지역협력체로 성장하였다. 2015년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구축을 목표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통합노력을 해온 아세안은 2007년 창설 40주년을 맞아 공동체의 헌법 역할을 맞게 될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과 EU식 경제공동체인 아세안경제공동체

* 아주통상과 사무관 김지연

(AEC) 설립을 위한 청사진에 서명함으로써 2015년까지 아세안 단일시장과 생산기반의 경제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통합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ASEAN+3(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등과 같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아세안 지역 외부의 강대국을 포괄하는 협의체를 주도하여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표 4-16. ASEAN 발전과정

구분	1967년	1999년	2002년	2008년	2010년	2015년
주요 일지	아세안 창설	ASEAN 완성	AFTA 공식발효	ASEAN 헌장발효	관세철폐	
					1단계	2단계
대상 국가	ASEAN5[1]	브루나이 ('84, 이하 가입 년도), 베트남('95) 라오스, 미얀마('97) 캄보디아('99)	-		ASEAN6[2]	CLMV[3]
회원국	5개국	10개국				

주: 1)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2)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3)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2) ASEAN의 중요성 및 한·ASEAN 관계

아세안은 인구 6억 3천만명, GDP 2.24조 달러 규모(2012년 기준)의 거대 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속하며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표 4-17. ASEAN 국가별 경제지표 (2012)

단위 : 10억$, $, %

구 분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GDP	416	15,300	878.2	9.2	303.5	62,400	105,721	5,460	67,448	92,478
1인당 GDP	41,703	733	3,592	1,445	10,304	834	2,614	50,324	5,679	1,526
GDP 성장률	1.3	6.5	6.2	8.3	5.6	6.3	6.6	2.7	6.4	5.0

* 출처: IMF, KOTRA 등

특히, 아세안은 한국의 에너지, 광물자원 및 원자재의 주요 공급지역이자 2대 교역지역으로서 양측간 교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한-아세안 관계는 2010년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2009년에 이어 2014년 12월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표 4-18. 한·아세안 관계 주요 연보

연도	주요 내용
1989	부문별 대화관계(Sectoral Partnership) 수립
1991	완전대화상대국 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로 승격
2005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협정 체결
2007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
2009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 발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제주) 개최
2010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부산 예정)

(3) 한·ASEAN 교역·투자 현황

한·아세안간 교역규모는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난 1989년 82억 달러에서 2013년 1,353억 달러로 16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9년 한·아세안 FTA가 전면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양국간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한국의 2013년 對아세안 수출은 820억불(전년대비 3.6% 증가), 수입은 533억불(전년대비 2.6% 증가)을 기록하였다. 앞으로 아세안 지역의 경제 자유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양측간 교역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 한국의 주요 교역국(2013년) : (1위) 중국 2.289억 달러, (2위) ASEAN 1,353억 달러(한국 총 교역액의 13%)

표 4-19. 한·ASEAN 교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국가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싱가포르	총교역액	24,655	21,489	23,094	29,820	32,564	32,640
	수출	16,293	13,617	15,244	20,839	22,888	22,289
	수입	8,362	7,872	7,850	8,967	9,676	10,360
베트남	총교역액	9,842	9,519	12,983	18,634	21,665	28,263
	수출	7,805	7,149	9,652	13,464	15,946	21,088
	수입	2,037	2,370	3,331	5,084	5,719	7,175
인도네시아	총교역액	19254	15,264	22,883	30,779	29,631	24,744
	수출	7,934	6,000	8,897	13,564	13,955	11,568
	수입	11,320	9,264	13,986	17,216	15,676	13,176
말레이시아	총교역액	15703	11,899	15,646	16,740	17,519	19,690
	수출	5,794	4,325	6,115	6,275	7,723	8,590
	수입	9,909	7,574	9,531	10,468	9,796	11,100
태국	총교역액	10061	7,767	10,629	13,879	13,574	13,303
	수출	5,779	4,528	6,460	8,459	8,221	8,072
	수입	4,282	3,239	4,169	5,413	5,353	5,231

국가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필리핀	총교역액	8115	7,219	9,326	10,914	11,495	12,489
	수출	5,016	4,567	5,838	7,339	8,211	8,783
	수입	3,099	2,652	3,488	3,571	3,284	3,706
브루나이	총교역액	1794	1,026	1,587	2,597	2,095	2,037
	수출	70	57	65	588	112	102
	수입	1,724	969	1,522	2,010	1,983	1,935
미얀마	총교역액	360	484	639	966	1,682	1,193
	수출	244	406	479	667	1,331	705
	수입	116	78	160	299	351	488
캄보디아	총교역액	308	291	376	538	719	751
	수출	294	273	333	451	593	615
	수입	14	18	43	87	126	136
라오스	총교역액	106	74	132	159	176	374
	수출	53	56	112	154	165	187
	수입	53	18	20	4	11	12

* 출처: 무역협회

아세안 입장에서도 한국은 아세안의 5대 교역국이며, 한국과 아세안 서로가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ASEAN의 주요 교역국(2012) : (1위) 중국 3,248억 달러, (2위) 일본 2,652억 달러, (3위) EU 2,450억 달러, (4위)미국 2,017억 달러, (5위)한국 1,324억 달러

투자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對아세안 투자는 2013년 45억 달러로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의 해외투자 대상지역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보완투자처로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이 유망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신고기준)

- 2013년도 기준 : (1위) 중국 51억 달러, (2위) ASEAN 45억 달러(한국 총 투자의 19%)

표 4-20. 對ASEAN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천달러

국가 \ 연도	'07	'08	'09	'10	'11	'12	'13
베트남	2,780,132	1,913,105	963,580	2,157,131	1,508,885	939,003	1,454,985
싱가포르	520,987	976,199	307,172	515,303	1,042,542	517,267	810,372
인도네시아	616,687	670,835	523,923	1,792,729	1,376,087	1,003,797	524,937
필리핀	220,728	356,031	298,007	385,629	233,835	959,434	469,945
말레이시아	937,992	4,917,921	259,842	1,706,976	177,673	738,472	416,683
태국	181,358	299,250	33,535	103,312	615,360	94,633	278,406
라오스	369,993	47,712	48,531	53,425	32,190	43,015	231,616
미얀마	17,868	49,746	3,533,271	233,038	108,679	42,090	148,795
캄보디아	828,401	1,261,732	283,991	125,635	1,178,719	139,926	132,604
브루나이	-	-	2,186	2,963	3,052	1,739	1,170
ASEAN	6,474,146	10,492,531	6,254,038	7,076,141	6,277,022	4,479,376	4,469,526

* 출처: 수출입은행

아세안 입장에서 볼 때에도 한국은 최근 3년간(2009~2011) 투자 누계액 기준으로 6번째 투자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표 4-21. 주요 ASEAN FDI 투자국(2009-2011)

단위: 백만달러, %

투자국 \ 연도	2009	2010	2011	2009-2011 누계	
				금 액	비 중
EU	8,063.1	17,012.1	18,240.5	43,315.7	17.1
일본	3,789.9	10,756.4	15,015.1	29,561.4	11.7
미국	5,704.3	12,771.6	5,782.7	24,258.5	9.6
중국(홍콩제외)	1,852.6	2,784.6	6,034.4	10,671.6	4.2
케이먼제도	1,402.9	5,601.6	2,424.7	9,429.3	3.7
한국	1,794.0	3,764.2	2,138.3	7,696.5	3.0

자료원 : ASEAN사무국

(4) ASEAN 국가별 주요 경제협력 활동

① (인도네시아) 2013년 수교 4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2010.12월 한국이 「인니 경제개발 마스터플랜(2011-2025)」의 주 파트너로 참여키로 합의하면서 시작된 양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을 지속 추진하였다. 제3차 장관급 경협위원회('13.9월)와 제4차 차관급 경협실무TF('13.6월)가 개최되어 다양한 협력의제들이 논의·추진되었으며, 특히 무역·투자, 산업협력, 에너지·자원, 건설·인프라, 환경협력, 농림·수산, 방산·국방, 정책·개발금융 등 기존 8개 분과 외에 친환경차 특별 분과와 문화창조 분과가 신설되어 협력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2013.10월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여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실질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② (미얀마) 미얀마는 동남아 지역의 마지막 미개척지로서 중국·인도·ASEAN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자원·인구·기후 등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이다. 이에 따라 2011.3월 미얀마의 개혁·개방이후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기회 선점을 위해 앞 다투어 미얀마에

진출 중이며, 우리정부도 미얀마와의 에너지·광물자원 협력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2013.7월 상업생산을 개시한 미얀마 서부해상의 A1, A3 가스전은 양국간 자원협력의 성공사례이다. 2013.6월에는 양국 범정부차원의 협력 추진을 위한 '한·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가 출범하여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기업진출, 자원협력 등 양자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③ (베트남)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011.5월에 양국간 원전건설, 산업기술 및 에너지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근거로 2013.11월까지 4차에 걸쳐 '한-베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전건설, 산업기술협력, 에너지·자원협력, 무역협력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2013.9월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으로 '2020년까지 무역규모 700억불 달성' 및 '한·베트남 FTA의 2014년 체결' 추진 등 양국간 경제통상협력이 가속화되었다.

④ (필리핀) 2013.1월, 지식경제부와 필리핀 통상산업부간 호혜적·전략적 경제·통상 파트너십 확립을 위한 「한·필 경제·통상협력 MOU」가 체결되어 상호간 정례적 경제협력 채널을 최초로 구축하고 무역·투자 및 산업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13.10월,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의 국빈방한 및 한·필 정상회담 시 조만간 개최될 제1차 한·필 경제통상 공동위를 통해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계속 증진시켜나가기로 하였으며, 필리핀 측에 투자 여건 개선 및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당부하는 등 우리기업의 진출 기반을 확충하는 유용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2. 서남아시아*

(1) 경제개관

서남아 국가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8개국으로, 서남아 지역은 인더스문명의 발상지로 산업혁명 이전까지 세계생산의 20%이상을 차지하여 왔으나 그 후 2세기 지난 1970년대에는 세계생산력이 3%로 떨어지는 등 서남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서남아 경제는 약 16억의 거대 인구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소득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빈곤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노동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내수시장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파행적 경제구조, 교육 불균등, 비능률적인 정치 및 사회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토분쟁, 방글라데시의 여야 대립심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 외 외국인투자 환경 열악, 공기업 민영화 지연, 각종 규제완화 및 무역자유화 미진,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등이 여전히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남아 국가들은 1970년대 말 이후 경제개방화 조치를 도입하여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향해 오고 있으며, 1990년대를 맞아 인도 등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정책 및 수출입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진전시키고 있어 서남아 경제의 부흥을 위한 날개를 펴고 있다. 2012/2013년도 회계연도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인도 4.7%, 파키스탄 4.3%, 방글라데시 6.1%, 스리랑카 6.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남아 시장은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거대한 시장 잠재력이 경제성장과

* 아주통상과 사무관 박학희

함께 가시화되고 있어 새로운 세계 경제 중심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인도의 경우 최근 유럽경제 위기의 영향과 개방정책의 후퇴, 부정부패 심화 등의 여파로 경제성장률 하락, 무역·재정적자 확대, 통화가치 하락 등의 현상을 나타내며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12년 성장률은 4.7%로 '03이후 최저이며 루피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12년 무역수지 1,992억불로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현재 상황에서 인도가 지난 10년간 이룩했던 8~9%대의 고속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도 정부는 과거 한국, 대만, 중국 등이 취했던 경제개혁 조치를 시행하여 기업인과 외국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정부패의 척결, 인프라 건설 정책의 지속적 추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최근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 국가의 성장세는 지난 몇 년의 성장세에 비해 다소 낮아지고는 있으나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서남아국가와의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교역 및 투자현황

2013년도 우리의 서남아 국가에 대한 교역현황은 수출이 140억불, 수입은 71억불로서 총 교역 규모는 약 211억불이며, 이 지역 국가와의 주요 교역품목은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원료, 무선통신기기 섬유·의류, 화학제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서남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2013년 말 기준 인도에 624개, 방글라데시에 207개, 스리랑카에 153개, 파키스탄에 37개의 국내업체가 진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남아시아지역 국가는 1인당 국내총생산이 2012년 기준 평균

2,100불 수준으로 거대한 인구, 면화재배를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이 발달해 있고, 인도를 필두로 각국 정부가 IT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계의 서남아시아 시장진출 확대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은 물론 외국정부의 원조, 민간자본 등을 이용하여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서남아 지역은 우리 업계의 프로젝트 수주활동과 연계된 수출이 많은 지역으로, 최근 전력,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 노력에 따른 수주활동이 기대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현지진출 노력으로 인도에서는 전자·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기업을 앞서나가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인도 등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반덤핑제소), 고질적인 SOC 부족 문제, 정부의 재정악화 등이 한국과 서남아 교역·투자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표 4-22. 한국의 서남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 출	금액	8,211	11,646	10,104	14,134	15,622	14,722	14,009
	증가율	-	41.8	△13.2	39.9	10.5	△5.8	△4.8
수 입	금액	5,305	7,443	4,721	6,272	8,959	8,066	7,122
	증가율	-	40.3	△36.6	32.9	42.8	△10.0	△11.7
무역규모		13,516	19,089	14,825	20,406	24,581	22,788	21,131
무역수지		2,906	4,203	5,383	7,862	6,663	6,656	6,887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표 4-23. 한국의 서남아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불

국가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도	총교역액	15,558	12,155	17,109	20,548	18,843	17,556
	수출	8,977	8,013	11,435	12,654	11,922	11,376
	수입	6,581	4,142	5,674	7,894	6,921	6,180
방글라데시	총교역액	1,264	1,186	1,693	1,872	1,754	1,759
	수출	1,095	1,064	1,554	1,628	1,459	1,427
	수입	169	122	139	244	295	332
파키스탄	총교역액	1,471	1,112	1,181	1,555	1,623	1,341
	수출	840	730	781	818	847	819
	수입	631	382	400	737	776	522
스리랑카	총교역액	686	244	303	426	392	384
	수출	627	170	246	344	320	299
	수입	59	74	57	82	72	85

표 4-24. 한국의 서남아 주요국가 투자현황

단위: 천불, 현지법인/신고기준

국가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도	328,123	288,045	341,663	199,275	649,571	443,212	594,150
파키스탄	7,083	5,875	22,589	37,841	30,587	5,278	35,040
방글라데시	18,601	9,085	4,668	119,736	10,421	14,470	14,560
네팔	10,350	4,784	230	700	200	9,548	8,106
스리랑카	8,955	6,628	5,761	1,032	1,250	3,766	972
서남아 계	373,112	315,205	374,911	358,602	693,079	476,274	653,020
對세계 투자 총계	30,098,648	36,889,755	30,967,061	34,427,402	45,661,030	39,481,228	35,379,57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신고기준, '68~'13 누계)

표 4-25. 서남아 국가별 주요 지표(GDP 순)

구분	면적 (km^2)	인구 (천명)	총GDP (US$Bil)	1인당GDP (US$)	경제 성장률(%)	수출 (US$Bil)	수입 (US$Bil)
인도	2,973,190	1,227,190	1,858.8	1,514.63	4.7	51.4	72.2
파키스탄	778,720	178,910	225.6	1,260.74	4.3	4.5	8.1
방글라데시	133,910	154,695	123.0	794.984	6.1	5.5	7.2
스리랑카	64,740	20,658	59.4	2,875.80	6.3	1.7	3.0
아프가니스탄	647,500	29,825	20.3	680.5	13.9	0.09	1.3
네팔	143,181	27,474	19.0	690.038	4.8	0.1	1.1
몰디브	300	331	2.1	6,377.55	0.8	0.04	0.2
부탄	47,000	743	2.0	2,671.33	6.5	-	-
서남아계(A)	4,788,541	1,639,826	2,310	(평균)2,108	-	63.33	93.1
세계총계(B)	510,072,000	7,095,220	718,300	12,700		18,260	17,840
비중(A/B)	0.94%	23.1%	0.32%	16.6%		0.35%	0.52%

* 자료: The World Fact book(CIA),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12년 기준, 추정치 포함), KOTIS

(3) 진출방안

서남아 지역은 현재까지는 소득 수준이 낮고 저개발상태에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므로 향후 교역확대를 위해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한 산업협력, 정부 및 민간 인사 교류확대, 서남아 전문가 육성 등의 거대 신흥시장 진출기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인구 16억으로 대변되는 거대 시장규모, 중동과 유럽으로 진출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및 국제무대에서 개발도상국가의 대표적 국가로서의 인도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

'06년 3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PA)은 '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한국은 인도의 13번째 FTA 체결국으로 인도는 SARRC(남아시아지역 공동연합), MERCOSUR(남미공동시장), 네팔, 몰디

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칠레와 이미 FTA를 체결했었다. CEPA 발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도측의 관세율 인하정책 및 일본·인도 CEPA 타결('10.10) 등으로 양국간 교역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한·인도 CEPA 협정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점을 양국이 공감하여 CEPA 공동위원회('11.1) 및 한·인도 정상회의('11.7)시 한·인도 CEPA 개선을 상호 합의하고 '11.9월 한·인도 CEPA 국장급 공동위를 개최하여 CEPA 개선방안의 실질적인 협의를 한 바 있다. 향후 양국은 CEPA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서남아 국가와의 정상교류와 정부간 협력채널의 활성화를 통해 양국간의 경협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10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방문, '11년 7월의 인도 파틸대통령 방한, '12년 3월 인도 싱총리의 방한, '10년 4월 스리랑카 라자팍스 대통령의 방한 등 정상회담을 통한 서남아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인도와는 '13년 2월 3일 뉴델리에서 제4차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투자관련 애로 해소 및 투자확대, 양국 표준기관간 협력확대 방안등을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서 양측은 CEPA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12개의 의제를 발굴하여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향후에도 정부는 서남아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간 인사교류 확대 등 對 서남아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우리 기업들의 서남아 진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의 활성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의 국가와의 정부간 협력채널 신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정부간 협력채널 활성화를 통해 기계설비·플랜트 수출·전력·도로·항만·석유화학 등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남아 지역과의 개발협력 확대, 시장개척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6절 중동·아프리카

1. 중동*

(1) 중동 개관

최근 중동지역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경제권이 경기침체와 재정위기로 경제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고유가 상황을 통해 중동으로 유입되고 있는 대규모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평균 5% 내외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중동은 2조 1천억불 규모로 추정되는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전 세계 국부펀드의 35%(전세계 6조 달러)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2011년 튀니지를 시작으로 중동전역으로 번진 이른바 '자스민 혁명'은 중동국가들로 하여금 민생안정을 위한 대규모 사회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100여개의 종합병원과 50만호의 주택건설, 202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르는 월드컵 경기장을 비롯해 최소 700억 달러의 인프라와 플랜트 건설, UAE는 원전 건설, 쿠웨이트는 항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사무관 이응대/배판술

만 확대 등 사회 인프라 및 플랜트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이라크는 전쟁이후 국가재건을 위해 5년간 2,750억불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중동 각국은 언젠가 고갈되어 버릴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IT 육성 등 산업다각화에 적극적이다. UAE의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카타르의 국가비전 2030, 사우디아라비아의 제9차 개발계획(2010~2014) 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하여 Post-Oil 시대에 대비한 산업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중동 지역은 풍부한 석유·가스 자원에서 축적된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대규모 사회인프라 개발 및 산업 다각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여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의 요건을 고루 갖춘 세계 유일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미국, EU, 인도, 중국, 일본 등 주요 세계 각국이 중동지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중동은 잠재력과 리스크가 병존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시리아, 이라크 등의 치안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의 정정불안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동지역과의 경제적 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외교적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2) 한·중동 경제협력 현황

1970년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젯다-메카간 고속도로와 주베일 항만 등의 건설현장에 진출한 이후 우리나라는 중동지역 국가들과 에너지와 플랜트·인프라 건설분야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동 국가들은 2013년 기준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량의 86%(7.9억배럴, 836억불), 57%(18백만톤, 154억불)을 각각 공급해 왔고, 또한 중동은 최근 10년간 우리기업의 수주액이 1,818억 달러(전체수주액의 41.1%)에 달하는 등 에너지 및 건설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표 4-26. 중동지역 국가별 원유도입 현황

구분	2013년			2012년		
	물량(백만B)	순위	비중(%)	물량(백만B)	순위	비중(%)
사우디	297	1	32.5	311	1	32.8
쿠웨이트	150	2	16.4	146	2	15.4
UAE	111	3	12.1	87	5	9.2
이라크	91	4	9.9	93	4	9.8
카타르	86	5	9.4	103	3	10.8
전체	915	-	100	947	-	100

교역과 투자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중동지역과는 전형적인 상호보완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중동으로부터 에너지·자원을 공급받는 한편, 이 지역에 인프라 건설, 플랜트 수출, 자동차, 전자제품, 선박 등 공산품을 공급하고 있다.

2013년말 기준으로 한국과 중동의 교역규모는 약 1,532억불 수준으로 중동지역은 우리나라에게는 아시아 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권인 동시에 고유가 지속과 에너지 수입 확대 등으로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과 수입 모두 글로벌 경제위기로 주춤한 2009,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4-27. 對 중동 교역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14,462 (18.2)	19,721 (36.4)	26,647 (35.1)	24,039 (△9.8)	28,369 (18.0)	32,884 (15.9)	36,616 (11.4)	32,288 (△11.8)
수입	62,531 (31.9)	67,540 (8.0)	101,645 (50.5)	61,613 (△39.4)	80,815 (31.2)	119,211 (47.5)	127,768 (7.2)	126,186 (△1.2)
수지	△48,068	△47,820	△74,998	△37,574	△52,446	△86,327	△91,152	△93,898

주 : (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무역협회(KOTIS)

이와 같은 활발한 교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외투자 중 對중동 투자 비중은 '13년말 현재 1,058건, 약 55억불로 전체 약 3,654억불(신고액 기준, 누계)의 1.5%에 불과한 바, 이는 중동국가들의 불안한 정세, 투자여건 미비(외국인 지분 제한 등)가 그 주원인으로 보인다.

표 4-28. 한·중동 투자현황

단위: 백만불, 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對한국 투자	금액	44	84	27	238	171	92			
	건수	82	68	132	149	102	73			
對중동 투자	금액	279	548	618	462	618	373	873	1,773	5,544
	건수	72	142	139	122	164	163	127	129	1,058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중동국가들은 Post Oil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일 머니를 활용하여 산업 다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법·제도 개편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기업의 중동 진출 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

중동지역은 석유·가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중동 국가들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큰 반면, 중동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지역 중 하나로 기업 진출시 리스크도 높다.

또한 중동 국가들은 Post-Oil 시대 대비 산업다각화를 적극 추진하는데 있어 단기간 압축성장을 실현한 한국을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왕실과 정부기관의 영향력이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부는 이러한 중동의 특징을 고려하여 대통령 중동순방 및 고위급 방문, 협력위원회 개최 등 정부대정부간 협력을 통하여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중동 국가들의 수요에 맞는 산업육성 및 경제개발 경험과 관련 기술을 중동국가에 전수하여 신뢰관계 구축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중동지역과의 인적 교류 및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한·중동 산업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동지역의 고위공무원, 주요 기업인, 언론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배우고 우리 정부, 기업인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한·중동간 실질적 협력 주체인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순방 및 고위급 방문과 연계한 경제협력 포럼 및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한·중 기업간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하여 한·중동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구체적 상호 거래·투자협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부는 70~80년대 중동붐과 비견되는 '제2의 중동붐'의 기회에 주목하고, 중동과의 전통적 협력 분야라 할 수 있는 에너지·플랜트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 위해 2012년 5월 '중동진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토대로 중동지역과 협력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2. 아프리카*

(1)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

① 성장 잠재력

아프리카는 지구육지의 20%(약 3천만㎢), 인구는 약 11억명으로 세계인구(70억명)의 15% 비중이고, 2050년에는 전체인구가 약 20억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정치적 안정, 외국인 투자확대 등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지역 중 하나이다. 풍부한 지하자원,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등으로 FDI 유입이 '12년 586억 달러로 10년 전에 비해 두배 수준으로 급증하였고, 향후 정치적 안정, 고위층 리더십, 금융 자금 등이 적절히 결합될 경우 에너지 자원 분야 이외에도 유통, IT, 제조업 등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② 에너지 자원개발 부상

나이지리아, 앙골라,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석유개발은 점차 증대하고 있어 석유생산에 아프리카가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할 전망이다(전세계 원유생산량의 10%). 아프리카의 가스 매장량은 14.2조 입방미터로 전세계 매장량의 약 7.6%이며, 모잠비크, 탄자니아 등이 본격 가스를 생산, 수출할 경우 아프리카 비중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니켈, 크롬, 우라늄 등 희소 및 전략 광종이 풍부하다.

---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사무관 김종락 / 김진석

표 4-29. 아프리카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2012)

광종	세계	아프리카	점유율(%)	주요국(세계순위)
우라늄 (톤U, 천톤)	3,338	760	22.8	남아공(4), 나미비아(8), 니제르(9)
니켈 (천톤)	67,000	6,155	9.2	남아공(7), 마다가스카르, 보츠와나
동 (천톤)	487,000	24,000	4.9	잠비아(10), DR콩고(10), 남아공
유연탄 (백만톤)	847,488	50,991	6.0	남아공(6), 모잠비크, 짐바브웨
크롬 (천톤)	104,210	77,000	73.9	남아공(1), 짐바브웨(3)
망간 (천톤)	630,000	147,000	29.4	남아공(1), 가봉(7)
코발트 (천톤)	7,100	3,690	52.0	DR콩고(1), 잠비아(4)

③ 건설·플랜트 시장 급성장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은 약 650억불 규모로 세계 시장의 1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국 개발 계획 추진 등으로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나이지리아·앙골라·이집트·우간다 등 오일달러를 활용한 전력·산업인프라 관련 대규모 플랜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표 4-30. 플랜트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억불, 플랜트산업협회

구분	'05	'09	'10	'12	'15	증가율(%)	
						'05~'10	'10~'15
세계	6,800	7,260	8,240	9,410	11,100	3.9	6.1
아프리카	420	400	460	518	610	1.8	6.0

(3) 對아프리카 경제협력 현황

① 교역 투자 현황

'13년 한·아프리카 무역규모는 169.8억불로, '04년 대비 약 2배 증가했으나, 한국 총 무역액의 1.6%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13년 對아프리카 무역

수지는 53.7억불로 최근 계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13년 한국 총 무역흑자(440억불)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표 4-31. 한·아프리카 교역 현황

단위: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수 출	금액	8,256	9,386	8,466	9,618	14,396	9,185	11,165
	증가율	6.8	13.7	-9.8	13.6	49.7	-36.2	21.6
수 입	금액	4,316	4,051	3,185	4,683	5,606	5,382	5,791
	증가율	-1.3	-6.1	-21.4	47.0	19.7	-4.0	7.6
무역수지		3,940	5,335	5,281	4,935	8,763	3,803	5,374
총교역액		12,572	13,437	11,651	14,301	20,002	14,567	16,956

한국은 주로 선박류,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 공산품의 수출을 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로 부터 천연가스, 동제품, 철광석, 원유, 금 등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고 있다.

표 4-32. 한·아프리카 품목별 교역 현황

단위: '13년,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선박류	5,093	33.8	천연가스	2,361	45.1
2	자동차	1,352	-1.6	동제품	855	-12.7
3	석유제품	1,041	142.0	철광석	387	-4.8
4	합성수지	586	21.0	원유	343	1.1
5	건설광산기계	214	-8.8	합금철, 선철 등	332	-6.4
	총계	11,165	21.6	총계	5,808	7.9

對아프리카 투자는 904건, 약 47.8억불로 전체 해외투자액의 1.3%에 불과

하며, 대부분 아프리카 자원 부국의 광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국가별로는 아프리카 자원부국인 마다가스카르(37.3%), 리비아(7.6%), 나이지리아(7.4%), 남아공(7.3%), 이집트(7.1%), 알제리(7%) 등에 집중되어 있다.

표 4-33. 對아프리카 투자 현황

단위: 신고기준, 백만불, 건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누계*
對韓 투자	금액	179.8	255.3	568.0	394.3	257.1	367.8	379.2	4,781.5
	건수	65	62	64	51	46	83	62	904

* 누계: 對阿 투자 ('68년-'14.4월)

② 에너지·자원 개발 현황

'06년 이후 정부차원의 자원협력 강화노력에 따라 신규 대형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개발 잠재력에 비해 정치적 리스크, 열악한 인프라, 불리한 투자여건, 부족한 정보 등으로 인해 우리기업들의 진출 실적은 미흡한 편으로 나이지리아 석유광구 개발사업 제외시 아프리카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는 대부분이 단순 지분 참여수준이다.

표 4-34. 아프리카 석유·가스 사업 참여 현황

구 분	참여국(사업명) 및 참여기관('13년)
석유·가스 (8개국 11개 사업)	◦ 나이지리아 (OPL/탐사) : 석유공사 등 (운영권자/광권분쟁중) · 리비아 (엘리펀트/생산) : 석유공사, SK 등 (단순지분참여) ◦ 이집트 (자파라니/생산) : SK 등 (단순지분참여) · 알제리 (이사우에네/생산) : 삼성물산, SK 등 (단순지분참여) · 적도기니 (Area C, D/ 탐사) : SK 등 (단순지분참여) · 코트디부아르 (CI-11/생산, CI-01/탐사) : SK (단순지분참여) ◦ 모잠비크 (Area- 4/탐사) : 가스공사 (단순지분참여) · 마다가스카르 (Majunga/탐사) : SK (단순지분참여)

광물자원 개발 분야에서도 마다가스카르 니켈광 개발사업 제외시 대형 사업은 미미하며, 우리 기업들의 광물개발 진출은 초기 단계수준이며, 현재 니제르에서 광물공(테기다), 한전·한수원(이모라렝)의 우라늄 개발 진행 중이다.

표 4-35. 아프리카 석유·가스 사업 참여 현황

구분	아프리카 광물개발 참여국(사업명) 및 참여기관
광물	· 마다가스카르(암바토비/니켈) : 광물공사 등 (지분 27.5%) · 니제르(테기다, 이모라렝/우라늄) : 광물공사 (지분 5%) · 니제르(이모라렝/우라늄) : 한전·한수원 (지분 10%) · 잠비아(치푸아/동광) : 지엠디(주) (탐사)

③ 건설 · 플랜트 진출 현황

'08~'14년 상반기까지 對아프리카 플랜트 수주액은 전체 수주액의 8.5%에 해당하는 총 325억불 기록하여 제2의 중동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08년 이후 알제리, 나이지리아, 모로코, 리비아, 이집트 5개국의 플랜트 수주가 267억불로 전체의 82%를 차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발전, 해양플랜트 분야가 전체 수주액의 2/3를 차지하였다.

표 4-36. 對아프리카 플랜트 수주

단위: 백만불, %

구분	'08	'09	'10	'11	'12	'13	'14.상	합계
전체	46,207	46,304	64,480	64,984	64,759	63,676	33,737	384,147
아프리카	2,312	3,978	4,151	4,080	5,416	6,912	5,665	32,514
점유율	5.0	8.6	6.4	6.3	8.4	10.9	16.8	8.5

(4) 진출 방안

아프리카 진출에는 몇 가지 시장특성에 따른 장애요인이 있다. 첫째, 아프리카 54개국중 33개국이 최빈 개도국으로서 시장규모가 협소하며, 둘째, 정치적 불안정 및 치안 불안으로 인한 투자 위험이 크고, 교통, 항만, 통신 등 인프라가 부족하며, 셋째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의 대규모 원조와 투자규모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수출주도형 압축 성장을 한 우리나라를 경제발전의 모델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와의 실질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우리에 대한 좋은 인상은 우리기업의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불확실한 아프리카 시장의 효과적인 공략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의 공조체제가 필수적이다. 진출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 및 수주활동을 지원하고, 정확한 현지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정부 및 KOTRA 등 준정부기관의 중요한 임무이다.

둘째, 무역·건설과 금융의 연계진출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 재원의 부족은 원활한 수입 및 발주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수출 또는 수주자의 입장에서도 자금조달 능력의 유무가 진출확대에 최대관건이 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 외환부족 등으로 인한 투자자금이나 수출대금 회수에 관한 위험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출보험에의 가입과 정부차원의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부차적인 위험분산 장치의 적극적인 활용도 중요하다. 셋째, 지정학적 여건, 시장성 및 성장성 등을 분석, 각 시장의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알제리, 리비아 등 플랜트 발주국, 남부 아프리카 최대시장인 남아공, 중동·아프리카·유럽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인 북부아프리카 및 동부아프리카 무역의 관문인 케냐, 탄자니아 등으로 구분하여 각 거점국가의 내수시장 공략과 인근지역으로의 진출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3. 주요 국가별 산업협력 현황

① UAE*

UAE는 토후국(Emirate)이라고 불리는 7개의 도시국가들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2009년 기준 도시국가별 경제규모는 아부다비가 전체의 60%, 두바이가 30%로 두 도시의 비중이 90%에 달한다. 나머지 도시 중에서는 샤르자가 6%를 차지하며, 기타 도시들의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다. 석유는 대부분 아부다비에서 생산되며, 두바이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사실상 아부다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세계 6위의 원유(약 978억배럴) 및 세계 7위의 천연가스(213조입방피트)를 보유하고 있는 UAE의 경제규모는 독립 이후 석유 개발로 인해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에 들어서 원유 생산 및 수출 감소 여파로 2% 내외의 성장에 그친 2001~2002년을 제외하고 이후 2003년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 약 9%의 높은 실질 경제 성장률을 시현하였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와 UAE간의 총 교역 규모는 238.6억달러로, 2012년 대비 약 8.6% 증가하였다. 對UAE 수출은 57.4억달러로 전년 대비 16.4% 감소한 반면, 수입은 181.2억달러로 전년 대비 19.9% 증가하였다. UAE 수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원유로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며, 비석유 수출품목 중 주요 수출 품목은 귀금속, 기계, 차량, 전기전자제품, 플라스틱 등이 있다. 주요 수입품목은 귀금속, 기계류 등 산업용 원재료가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차량, 전기전자제품, 항공기 등이 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각각 2006년과 2007년에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Abu Dhabi Economic Vision 2030)과 두바이 전략계획 2015(Dubai Stra-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사무관 이응대

tegic Plan 2015)를 발표하였다.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은 2015년까지 연간 7%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그 이후로는 연간 6% 성장을 이룩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아부다비의 개발모델은 사우디와 두바이 모델을 결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석유화학과 금속산업 등을 중심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제조업을 육성하는 한편, 두바이 모델을 따라 관광과 금융 서비스의 중심지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두바이 전략계획 2015는 목표 기간까지 연간 11%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두바이의 GDP를 1,080억달러로 늘이고, 1인당 GDP는 4만 4,000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2013년 국내 플랜트 기업의 對중동 플랜트 수주실적은 약 140억불 규모이며, 2010년 이후 중동 편중세가 다소 완화되어 수주 지역 다변화 양상을 보였다.

표 4-37. 아랍에미리트 주요 플랜트 프로젝트 (2009~2013)

수주업체	프로젝트명	발주금액 (백만불)	수주년도
현대건설	SARB Field 개발 프로젝트	1,894	2013년
삼성 엔지니어링	Carbon Black &Delayed Coker Project	2,477	2012년
	샤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PKG 4	1,496	2010년
	Ruwais 정유 플랜트 확장 프로젝트 PKG3	2,729	2009년
	FERTIL 암모니아 우레아 확장 프로젝트	1,223	2009년
한전	원자력 발전	18,600	2010년
SK건설	Ruwais 정유 플랜트 확장 프로젝트 PKG1	2,117	2009년
현대건설	IGD Project PKG2	1,702	2009년
GS건설	Ruwais 정유 플랜트 확장 프로젝트 PKG2	3,109	2009년
	IGD Project PKG3	1,202	2009년

②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국가로서 2013년 말 기준으로 한국 원유수입량의 32%, 천연가스 수입량의 23%를 공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의 제4의 교역국이자, 우리기업의 플랜트·인프라 건설의 최대 해외 시장이다. 2013년 말 기준 교역액은 465억불(수출 88, 수입 377)로 우리나라 전체교역액의 4.3%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기업 수주액은 2009년 72억불, 2010년 105억불, 2011년 166억불, 2012년 162억불, 2013년은 99.7억불로서 전세계 수주액 652억불의 15%, 중동 수주액(261억불)의 3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동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12년 2월 VIP 순방, 2012.9월 사우디 광물자원부 장관, 2013년 6월 한·사우디 원전협력 라운드테이블, 2013.10월 상공부 장관과 회담 등 고위급 만남을 통하여 상호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토대로 안정적 원유 수급을 위한 사우디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무역·투자 및 플랜트·SOC, 신재생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다각화에 맞는 산업협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업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한국에 대한 사우디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한 투자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사무관 배판술

③ 카타르*

카타르는 한국의 전통적 에너지 공급원이자 플랜트·건설 수출 대상국이다. 2013년 기준 카타르는 LNG 총 도입물량의 30.2%(1,058만톤)를 차지하여 제1위 LNG 공급국이자 원유 총 물량의 10.9%(1.03억배럴)로 제3위의 원유 공급국이다.

2000년 이후의 유가급등으로 축적된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Post-Oil 시대 및 202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산업다각화 추진, 교육도시 확대, 경기장,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발주로 우리기업의 주요 건설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표 4-38. 건설 및 플랜트 수주 현황

단위: 백만불

구 분	76-2009	2010	2011	2012	2013. 8	누계(76-13)
건 수	75	3	4	6	5	93
금 액	9,605	1,176	1,494	1,842	2,490	16,607

자료: 해외건설협회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2007년, 2008년, 2009년 양국간 정상외교, 2001년, 2008년 총리방문 및 고위급간 빈번한 상호 방문을 통하여 카타르 왕실·정부 주요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동안 2011년 왕세자 방한, 2012년 VIP 순방, 2013.8월 총리 방문을 통하여 기존 정부 및 민간 협력 채널을 활성화 하여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고위급 상호 방문을 통한 협력 추진은 물론, 2012년 5월 한·카타르간에 에너지산업협력위원회,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사무관 배판술

2012년 10월 고위급전략협의회를 설립하여 카타르 맞춤형 경제개발 및 산업 협력 추진으로 양국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표 4-39. 우리기업이 시공중인 주요 프로젝트 현황

회사명	사 업 명	공사기간	공사규모 (백만불)
현대건설	Hamad Medical City 2단계	'11.2 ~ '14.6	534
	카타르 국립박물관 신축공사	'11.9 ~ '14.6	434
	루세일고속도로 PH.1	'12.4 ~ '15.9	1,000
삼성eng	DHT 공사	'11.9 ~ '14.4	100
GS건설	메트로 철도(Red Line South)	'13.6 ~ '18.6	510
LS전선	할룰섬 해저케이블 연결	'12.6 ~ '16.6	400
SK건설	GSUP	'11.11~ '14.6	40
	메트로 철도(Red Line North)	'13.6 ~ '18.3	950
효성	전력네트워크 10단계(변전소)	'11.10~ '14.2	210
삼성물산	루세일신도시 CP5B 도로	'12.1 ~ '14.7	300
	메트로 철도(대형역사)	'13.6 ~ '16.6	700

④ 이라크*

이라크는 풍부한 원유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라크의 원유매장량은 약 1,431억배럴(전 세계 매장량의 8.0%)로 세계 5위의 자원부국이며, 일일 원유생산량은 '12년 340만배럴로 전쟁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IEA는 2020년까지 880만 배럴로 전망하고 있다. 이라크는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에 이은 우리나라 제4위 원유도입국('12년 도입물량: 93백만배럴, 도입비중 : 9.8%)이다. 이라크 GDP 성장률은 2010년 3.0%, 2011년 8.9%, 2012년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사무관 이응대

10.2%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는 오일달러를 바탕으로 중동최대 재건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기획부)는 2017년까지 재건사업에 2,750억불,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에 5,000억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전과 가스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가스공사는 2개 가스전(아카스, 만수리아), 2개 유전(주바이르, 바드라)의 총 4개 이라크 유·가스전 개발사업에 참여 중이며, 한국석유공사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지역 3개 광구(바지안, 상가우 사우스, 하울러) 개발사업에 참여 중이다. 이라크에서 한국 기업이 수주한 주요 프로젝트는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77.5억불 규모), Karbala 정유공장 건설사업(약 60억불 규모), 주바이르유전 원유처리설비 프로젝트(약 27억불 규모), 이라크 Al Faw항만 방파제 건설공사(약 7억불 규모) 등이 있다. 단일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해외건설공사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비스마야 지역에 10만호(분당 규모) 규모의 신도시 건설사업을 '12.5월 한화건설이 수주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다. Karbala 정유공장 건설사업은 현대건설·현대ENG·GS건설·SK건설 등 국내 4개 건설사가 조인트벤쳐(Joint Venture)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13.11월)하였다. 주바이르유전 원유처리설비 프로젝트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바이르 지역 원유처리설비 관련 3개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13.7월)되었다. 이라크 Al Faw항만 방파제 건설공사는 대우건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13.9월)되었고, '13.11월에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이란*

2002년 이란 반정부단체가 이란정부의 우라늄 농축계획을 발표한 이래, 국제사회는 유엔안보리의 4차례 결의를 통해 對이란 경제제재를 천명하였다.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사무관 김종락

미국은 2010년 7월 '포괄적 이란제재법(CISADA)'을 시행하고, 2011년 12월 '국방수권법'을 제정하여 이란産 원유수입을 통제하는 등 對이란 경제압박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는 '10년 이후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EU 기업 철수에 따른 반사이익, 원화결제 시스템 가동 등의 효과로 수출 상승세를 유지해 왔으나, '12년 부터 주력 수출품이었던 승용차 수출 중단, 중국·인도의 자국통화 지불 시스템 구축('12.5) 등으로 인한 경쟁우위 감소 등으로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특히 '13.7월 이후 제재 강화로 석유화학제품, 철강,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對이란 수출이 대폭 하락하였다.

표 4-40. 연도별 對이란 수출, 수입규모

단위: 백만불, %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잠정)
수출	금액	2,559	3,266	4,343	3,992	4,597	6,068	6,257	4,480
	증가율	19.5	27.6	33.0	△8.1	15.2	32.0	3.1	△28.4
수입	금액	5,049	6,482	8,223	5,746	6,940	11,358	8,544	5,555
	증가율	42.8	28.4	26.9	△30.1	20.8	63.7	△24.8	△35.0
무역규모		7,608	9,747	12,566	9,738	11,537	17,427	14,801	10,035
무역수지		△2,490	△3,216	△3,881	△1,754	△2,344	△5,290	△2,288	△1,075

표 4-41. '13년 1~11월 품목별 對이란 수출, 수입현황

단위: 백만불, %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 액	증가율	품목명	금 액	증가율
1	영상기기	450	83.5	원유	4,693	△18.3
2	종이제품	415	75.3	LPG	229	△84.6
3	합성수지	362	△45.4	석유제품	126	△64.3
4	철강판	271	△54.1	알루미늄	24	△23.9
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22	△26.7	기초유분	18	△80.9

그러나 최근 P5+1(미·영·프·러·중+독)과 이란 간 초기(First step) 핵 협상 타결('13.11.23)을 통해 이란은 핵프로그램을 정지하는 대신 미국 등 서방은 이란제재를 일부 완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이란 경제제재 한시적 완화 동향을 주시하여 무역협회의 「이란교역투자 가이드라인」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동 핵협상은 6개월간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인바, 이란의 핵협상 이행 현황과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

표 4-42. 핵협상 주요내용

대상	핵협상 내용
이란	5% 이상 우라늄 농축 중단, 추가적인 원심분리기 설치 금지, 원심분리기 시설 및 우라늄 공장 등에 IAEA 실사 허용 등
미국 등 서방	6개월 동안 이란이 합의를 이행한다는 전제로 원유수출 및 일반교역 등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현행 유지 * (일부완화) 귀금속,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 (현행유지) 원유

⑥ 남아공*

남아공은 금융, 유통 등 3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남아공 GDP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5.8%('13년 기준)에 달한다. 남아공의 주요산업은 3차 산업을 제외한 광산업,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남아공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광산업이 발전했는데 남아공 GDP의 9.5%를 점유('13년 기준)하고 있다. 철광석 매장량은 1,500Mt로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전한 철강산업은 남아공 제1의 제조업으로서 2010년 기준 전체 제조업의 약 20%를 차지하고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주무관 정동현

있다.

한국과 남아공과의 교역규모는 200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교역액은 36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對남아공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 경유, 건설중장비,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이며, 對남아공 주요 수입품목은 백금, 합금철, 철광, 동괴 및 스크랩, 기타 금속광물이다.[16]

대남아공 플랜트 진출현황은 총 3건 9.9백만불('08~'13년)로서 주요수주로서 Mercury-Mookodi 400Kv Section B Transmission Construction (2012년)이 있다. 2007년 제2차 한·남아공 민간경제협력포럼 이후 단절된 양국간 민간 경제협력채널을 재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과 양국간 교역 확대를 위해 제3차 한·남아공 민간경제협력포럼을 2013년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했다.

한국측은 한국무역협회가, 남아공측은 BUSA(Business Unity South Africa), BBC(Black Business Council)가 주관하였고, 駐남아공 한국대사관의 후원으로 진행된 민간경제협력포럼에는 국내기업 10개 내외 및 남아공 진출 한국기업 등 55명이 참가하여 한·남아공간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남아공측에서는 BUSA, BBC 회장 및 회원사, 관심기업 100여명이 참가하여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포럼의 주요 행사로서 양국간 협력 분야 세션별 포럼(한-남아공 경제협력 및 지역발전 강화, IT·에너지·전자분야 등 한·남아공 협력전략 강화)을 진행하고 참가기업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하였다.

16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자료(Kita, MIT 4단위, 2014. 4월 기준)

⑦ 알제리*

알제리 경제는 석유가스부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불균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알제리 산업구조를 보면 석유, 가스, 가스산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수출의 98%(2011년 기준)와 전체 GDP의 절반가량, 재정수입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알제리는 원유생산량에서 아프리카 3위,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유수출국기구(OPEC)의 4개 아프리카 회원국 중 하나이다. 석유·가스 생산량은 174백만TOE를 기록('06년도)하여 2000년 이후 연평균 2.3%의 성장세를 시현했다. 한국과 알제리와의 교역규모는 2008년 이후 연평균 18억불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대알제리 주요 수출품목은 화물자동차, 기타 건설중장비, LCD TV, 자동차부품 등이며, 대알제리 주요 수입품목은 나프타, LNG, 원유, 아연괴 등이다.[17]

우리기업의 對알제리 투자현황은 53건 2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한국수출입은행, 2013.12) 알제리는 우리나라의 62번째 투자대상국이다. 주요 진출사례로는 삼성물산, 경인에너지 컨소시엄이 석유탐사사업(Issaouane 석유탐사 사업 30% 지분 참여)에 참여하고 있다.

2013년 8월 알제리 알제에서 CATICTA(첨단기술아프리카센터) 사업 추진과 한·알제리 경협 T/F 개최 일정을 알제리측과의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KOICA(국제협력단)를 공동 대표로 하여 알제리측과 CATICTA(첨단기술아프리카센터) 사업 추진, 한-알제리 경협T/F 개최 등 주요현안을 협의하였다. 이번 알제리와의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CATICTA 사업의 효과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KOICA 프로젝트 사업 운영위원회(사업수행기관(PMC), 주재국 국토개발환경부 등을 포함)를 구성할 계획임을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주무관 정동현

17 KOTIS 통계(MIT 6단위, 2014. 4 기준)

전달하고, 양국 정부기관 이외 산업단지공단(KICOX) 등 국가 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등을 포함하는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⑧ 이집트*

이집트는 중동지역 최대 인구대국(8,500만명)으로 EU, 아프리카, 중동을 잇는 교통·물류 중심지이다. 한·이집트 무역규모는 '13년 기준 약 25억불로 이집트는 남아공(44억불), 나이지리아(38억불), 라이베리아(35억불)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 중 한국의 제4위(세계 46위) 무역 상대국이다.

표 4-43.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수 출	금 액	1,167	1,548	1,528	2,240	1,727	1,807	1,535
	증가율	36.7	32.7	△1.3	46.6	△22.9	4.6	△15.1
수 입	금 액	614	1,331	463	938	691	802	1,016
	증가율	36.4	116.8	△65.2	102.5	△26.3	16.1	26.6
무역수지	금 액	553	217	1,065	1,303	1,036	1,005	519

이집트 교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432백만불(1.41%), 수입 1,657백만불(2.81%)로 전체 15위 규모('11년 기준)이고, 한국은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 수출이 활발하며, 이집트는 천연가스, 나프타, LPG 등 원자재 수출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對이집트 투자는 '13년말 기준 총 85건, 약 340백만불로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사무관 김종락

표 4-44. 품목별 교역 현황

단위: 백만불, 전년대비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승용차	271	△44.5	천연가스	49822	13.1
2	자동차부품	179	△15.6	나프타	448	54.1
3	합성수지	159	11.4	LPG	22	-
4	기타석유화학제품	67	3.4	박류	17	147.9
5	평판디스플레이	61	33.7	편직제의류	5	8.1

표 4-45.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신고 기준, 백만불, 건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누계
對韓 투자	금액	0.6	1.3	1.4	1.2	1.1	0.9	1.8	8.4
	건수	10	25	35	25	12	10	19	137
對이집트 투자	금액	2.4	1.4	100	2.3	1.7	6.8	6.6	340.1
	건수	3	2	5	2	2	3	4	85

우리기업 진출현황을 보면 2012년 기준 삼성전자, LG전자, 석유공사 등 18개사가 현지법인을 운영 중이며, 금호타이어, 현대·기아차 등 15개사는 연락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최근 한국기업의 대 이집트 건설 프로젝트 시장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삼성물산, GS건설, 두산중공업 등 관련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다.

한편 이집트는 북서부 엘다바 지역에 900~1,650MW급 경수로형 원전 2기 건설 추진중('27년까지 총 4기 원전 건설 계획)이며, 한·이집트간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01.6월)을 바탕으로 산업부는 이집트 전력에너지부간 원자력 협력 MOU를 체결('13.5월)하였다. 또한 '10.8월, '12.7월 한국형원전설명회(카이로), '13.5월 원전협력 세미나(서울), '13.11월 이집트 주요인사 초청교육을 실시하였다. 향후 이집트 원전수주를 위해 현지화, 인력양성 지원 등 이집

트측 관심분야에 중점을 두고 한국의 강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원전협력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 7월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하여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제1차 통상협력위를 개최하여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사전조사 추진, 무역진흥행사 개최 협력, 양국 상의 간 협력 진흥 등을 논의하였다.

⑨ 카메룬*

카메룬은 아프리카 중서부 적도에 위치한 국가로 한반도 2.2배(478만㎢)의 면적과 2천만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이다. 2012년 카메룬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2.5억배럴로 원유생산은 지난 30여년간 카메룬 경제와 국가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현재 카메룬 유일의 정유사인 SONARA의 원유 정제능력을 210만톤에서 2015년 까지 4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다. 카메룬의 광물 생산은 소량이며, 주요 생산광물은 알루미늄, 금, 다이아몬드 등이다. 철, 니켈, 우라늄 등이 내륙지역에 일부 부존하나 생산실적은 없으며, 전력공급 및 운송 인프라 미비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과 카메룬 간 교역규모는 '11년 70백만불이었으나, '12년에는 전년대비 23% 감소한 54백만불을 기록하였다.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사무관 김종락

표 4-46. 양국간 연도별 무역현황

단위: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07	'08	'09	'10	'11	'12	'13.8월말
수출	금액	25.0	44.2	32.2	48	70	54	30
	증가율	118.5	77.0	△26.9	49.2	45.4	△22.8	1.1
수입	금액	520.2	231.1	23.3	10	42	11	5
	증가율	22.2	△55.6	△89.9	△56.9	316.8	△74.6	△14.5
무역수지	금액	△495.2	△187.0	8.9	39.2	32	43	25

한국은 알루미늄 합금제품, 중고의류, 컴퓨터, 자동차 및 기타 석유화학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며, 카메룬으로부터 원유, 금, 원목 등 1차산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산업부는 '13.11월 경제사절단을 구성하여 카메룬 야운데를 방문하여 '제3차 한-카메룬 에너지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同에너지협력포럼에는 카메룬 에너지수자원부 장관을 비롯하여 카메룬 석유공사, 정유공사 등 카메룬 측 50여명이 참석하여 카메룬 석유가격안전화기금 등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건설사 등을 카메룬 정부 및 기관에 소개하는 비즈니스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한편, 카메룬 총리 예방 및 에너지수자원부 장관, 광물산업기술개발부 차관 등을 만나 카메룬 국영제철소 건립 전담팀 구성요청, 카메룬 광물 탐사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 지원 요청 등 우리기업 진출에 관해 논의하였다.

⑩ 콩고*

DR콩고(콩고민주공화국)는 한반도 11배 크기(아프리카 2위), 7,400만명 인구, 최근 5년간 연평균 6%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코발트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사무관 김진석

(1위), 다이아몬드(1위), 동(10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과 콩고강(세계 2위의 평균유량) 등의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DR 콩고는 아프리카국가 중 '05.3월 최초로 우리나라와 정부간 자원협력위를 구성한 국가로 제1차 자원협력위 '07.9월 개최 되었고 제2차 자원협력위는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을 수석대표로 18개 기관·기업 총 35명의 민관합동사절단을 DR콩고에 파견('13.9)하여 개최하였다. 주요의제로 무소쉬 동광 개발 사업, 카탕카주 희귀금속 탐사 등 지질 탐사 협력, 광해관리 협력, 미분양 석유탐사광구 진출방안, 도로 등 인프라 협력 등을 논의하여 양국간 에너지·자원 개발 협력기회를 제고하고 우리기업 진출 확대를 지원하였다.

⑪ 탄자니아*

탄자니아는 한반도 면적의 4.3배인 광활한 영토와 금, 우라늄, 탄자나이트, 천연가스 등 풍부한 지하자원, 킬리만자로와 세렝게티 등 천혜의 관광자원, 캐냐 등 8개국과 국경을 인접한 지리적 여건 등을 바탕으로 동부아프리카의 거점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안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발의지로 인프라 건설부분 등의 성장세에 힘입어 최근 5년간 6~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는 등으로 우리기업의 탄자니아 진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3.10월 한·아프리카산업협력포럼 참석차 방한한 무혼고 에너지광물부장관과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하였고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상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31개 기관·기업 등 총 46명의 민관합동사절단을 탄자니아에 파견('14.4.23~26)하여 비즈니스 포럼, 자원협력 채널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사무관 김진석

구축 및 양국간 제1차 자원협력위를 개최하였다. 탄자니아 산업자원개발과 우리기업 진출기회 등을 주제로 다레살람에서 개최(4.25)된 '비즈니스포럼'에서는 탄자니아 산업무역부, 에너지광물부, 투자청 등 양국 정부 및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정인무역'과 탄자니아의 'S & M Agro Ltd사'간 62백만불 규모의 농기계 수출계약이 성사 되였으며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에너지 플랜트 분야 등에서 7.5억불의 수주상담이 이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탄자니아 에너지광물부간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직후 개최(4.25)된 제1차 자원협력위에서는 우리측 관심사항인 산업자원 인프라, 전력, 전기안전분야, 광해방지 협력 등이 논의되었고 우리나라는 관련 정보·주요 인사교류, 향후 공동 협력사업개발 등을 제안하였으며, 탄자니아 측은 협력 의지를 표명하며 우리 기업과의 경험공유 등을 희망하였다.

⑫ 오만*

오만은 다른 중동 국가와 마찬가지로 석유와 가스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2008년 기준으로 석유가스 산업 비중은 GDP 51%, 수출 76%, 재정수입 78.6%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오만과 2000년부터 25년간 매년 406만 톤 LNG 수입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국내 총 도입량(4,074만 톤) 중 448만 톤(3위, 11%)을 수입하였으며, 2014년 406만 톤을 수입할 예정이다. 원유 수입은 2013년 국내 총 도입량(915백만B) 중 3.5백만B(16위, 0.4%)을 수입하였다. 오만 정부는 과대한 석유자원 의존과 경제구조의 획일성을 탈피하기 위해 자국화(Omanisation), 산업구조다변화(Diversification), 민영화(Privatisation) 등 세 가지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매년 말 모든 업체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사무관 이응대

들은 Omanization 관련 Report를 제출해야 하며, 오만인 고용률 저조 기업들은 정부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박탈되고, 외국회사의 경우 채용자들의 노동허가를 불허된다, 산업구조 및 국민소득원 다변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첨단기술 도입, 수출지향 정책, 민간부문 개발 및 중소기업 설립 촉진, 세계 경제로의 통합 확대를 중점 추진 중이다. 또한 오만은 정부 주도형 개발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향후 국제 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영화(Privatization)를 오만 Vision 2020(1996~2020년)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 기준, 對오만 교역규모는 58억불(32위)로, 우리나라 총수출(5,596억불)의 0.18%(10억불, 59위), 총수입(5,156억불)의 0.93%(48억불, 24위)를 차지하였다. 對 오만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석유화학합성원료이다. 특히 자동차가 전체 수출의 절반 가량(48%)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한국 기업들이 오만에서 수주하는 프로젝트(발전소, 정유공장, 도로 등)에 따른 건설자재 및 중장비가 해당이 된다, 오만의 對 한국 주요 수출품은 천연가스, 원유, 기타 석유화학제품이다. 한편, 한국과 오만은 한·오만 총리회담('05. 11.30)에서 양국간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오만 경제협력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다. 그 동안 제1차 한·오만 경협위 개최(2009.5.4, 서울), 제2차 한·오만 경협위 개최(2010.10.24, 무스카트), 제3차 한·오만 경협위 개최(2012. 11.12, 서울) 등 세 차례 개최하여 무역 투자, 에너지자원, 플랜트건설, 중소기업, 기술표준, ICT 및 정보보안, 보건, 직업능력개발, 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오만측은 '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의 1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태양광 시범발전설비 건설중(Al-Mazyunah지역, 303kW급, Astonfield Renewables(인도) 건설, '14년 말 가동 예정)이며, 풍력도 500kW급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Mashira섬)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난 2012.12.9일에는 사우디아리비아(제다)에서 개최된 ICAO 항공운송협상회의시 양국 간 항

공회담을 통해 지정항공사 변경(단수→다수), 편명공유(Code-Sharing) 조항 신설 및 노선구조 제지점화 등을 골자로 하는 MOU를 서명하였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오만 건강보험제도 도입 자문('13.3), 오만 병원 협력 MOU 체결('13.9), 의료진 연수와 환자 송출 프로그램 제안('13.6), 건강보험 도입 컨설팅 1단계 연구용역 완료('14.4)하는 등 양국간에 교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⑬ 케냐*

케냐는 지정학적으로 동부 아프리카의 관문(gateway)에 위치한 전략적 이점 및 천혜의 기후와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케냐 몸바사항은 남아공 더반, 나이지리아 라고스와 함께 아프리카 3대 항만이며, 나이로비 Jomo Kenyatta 공항은 아프리카 허브 공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케냐의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2012.6월 인천-나이로비 간 직항노선을 개설하여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케냐는 이러한 지리적 잇점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부족, 만성적 전력부족으로 경제발전이 지연되고 있으며, 케냐 정부는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케냐 비전 2030을 수립하여 사회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케냐의 경제특징을 고려하여 2000년 이후 2011.3월, 2012.7월 총리방문, 2010.11월, 2012.11월 케냐 부통령 및 총리 방한을 계기로 우호 협력관계를 구축은 물론 플랜트·인프라 건설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올카리나 지열발전소건설 수주를 계기로 케냐에 풍부한 지열발전소 건설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사무관 배판술

양국간 교역·투자에 있어서는 많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 양국 무역액은 287백만불, 투자에 있어서는 '13년 말 기준으로 對한국 투자 총 3건, 약 196천불, 對케냐 투자는 총 35건에 약 13,023천불을 기록하고 있다.

표 4-47. 한·케냐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수출	금액	137	156	165	233	215	263	258
	증가율	△33.3	14.3	5.3	41.3	△7.6	22.3	△1.9
수입	금액	7.8	5.7	5.6	9.2	17.6	28	29
	증가율	52.3	△26.4	△2.9	65.8	90.6	58	4.9
무역 규모		145	162	170	242	233	291	287
무역 수지		129	151	159	223	197	235	229

표 4-48. 한·케냐 연도별 투자현황(신고기준)

단위: 천불, 건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누계*
對韓 투자	건수	-	1	-	1	-	-	-	1	3
	금액	-	55	-	41	-	-	-	100	196
對케 투자	건수	-	-	-	1	1	4	10	1	35
	금액	-	-	-	100	100	1,100	1,822	501	13,023

* 對韓 투자 ('62-'12년, 산업통상자원부), 對쿠웨이트 투자 ('68-'12, 수출입은행)

제5장

통상애로 해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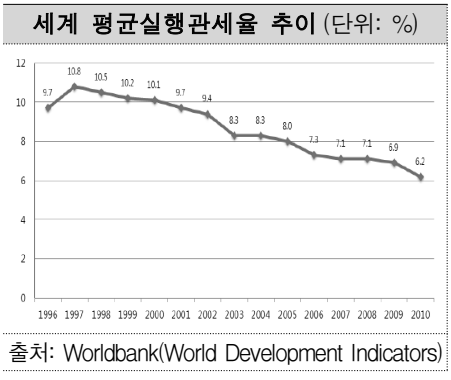
제1절 비관세장벽 대응*

1. 비관세장벽 대응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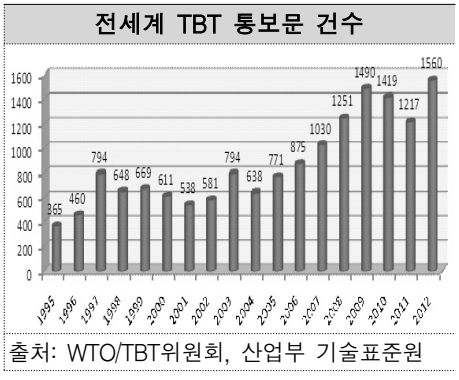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이래로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선진경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들이 통관·표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 조치를 보호무역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일례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대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가 2012년에 1,560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위생검역(SPS)의 경우에도 2010년 1,436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세계무역기구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2012년 6월 "보호주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 통상정책총괄과 사무관 조진화

그림 5-1. 세계 평균관세율 추이 및 TBT 통보문 건수



출처: Worldbank(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출처: WTO/TBT위원회, 산업부 기술표준원

세계 각국 또한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확산에 대하여 심각성을 확인하고 다자 규범 및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이행을 통하여 다루려는 노력을 전개하게 된다. G20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무역·금융 등 무역에 왜곡을 주는 조치를 동결(Standstill)할 것”을 선언하였고, 2013년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는 ‘G20 보호주의 동결서약’을 2016년까지 연장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무역협정 협상과정에서도 전개된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계기로 일본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비관세장벽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요소로 작용하여 해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우리나라 일본 수출 중소기업의 26.9% 및 중국 수출 중소기업의 16.7%가 비관세장벽을 해외 진출에 있어서 주요 애로사항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기중앙회, 2013년 6월).

2. 비관세장벽 대응 체계 구축 및 대응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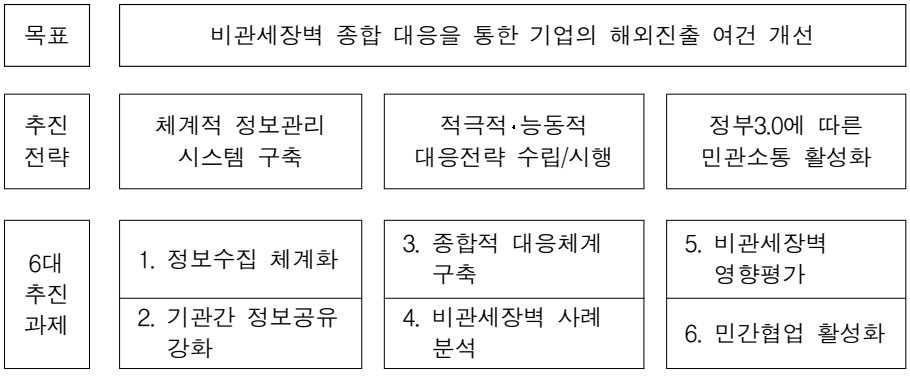
(1)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2013년 9월 12일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에서의 논의 및 9월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우리 기업의 실질적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민관 협업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간 해외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일회성 조사와 수세적 입장, 정부 위주의 대응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에 실질적인 해결 노력이 미흡했던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번 정책발표 이전에 정부는 2013년 6월 13일 수립된 '신통상로드맵'에서 통상의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경제4단체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9월 16일 무역협회 내에 '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을 구성하여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정보 시스템의 본격 구축 및 대응지원 노력에 착수한 바 있다.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은 3대 전략과 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째, 비관세조치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관간 정보 공유 강화를 추진하는 것, 둘째, 통상추진위원회를 전략수립을 위한 부처간 협의의 장으로 활용하고, 양자협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다각적인 통상채널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 셋째, 비관세장벽이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민관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림 5-2. 비관세장벽 대응 기본방향



⑵ 비관세장벽 대응 추진 현황

첫째, 각 부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재외 공관 및 무역애로 등을 통하여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관세조치 사례를 발굴하고, 수집된 사례를 국가별·업종별·규제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2013년 11월 12일 민관합동의 '비관세장벽 협의회 1차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비관세장벽 협의회는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하에, 통상산업포럼을 구성하는 업종별 협회(18개)와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단체 7개 및 관계부처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된 개별 비관세조치 사례에 대하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규범 합치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민간의 통상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제1차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FTA협상이 진행중인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협회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중심으로 그간 수집된 사례 33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집중 논의하였다.

셋째, 이러한 비관세장벽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국가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2013년 11월 29일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통하여 관계부처와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외교부와 공동으로 2013년 12월 23일 각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국가별 종합 보고서인《외국의 통상환경》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통상협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교부에서 지난 1998년부터 발간되던 자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무역장벽보고서(제1권), 분야별 통상환경보고서(2권), 지역별 통상환경보고서(3~6권)로 구성되어 있다. 금년 보고서에는 주요 교역국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총 83개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주요 11개국에 대하여 우리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실질적 애로로 느끼는 비관세장벽 101건의 사례를 수집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역환경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관련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림 5-3. 비관세장벽 협의회 운영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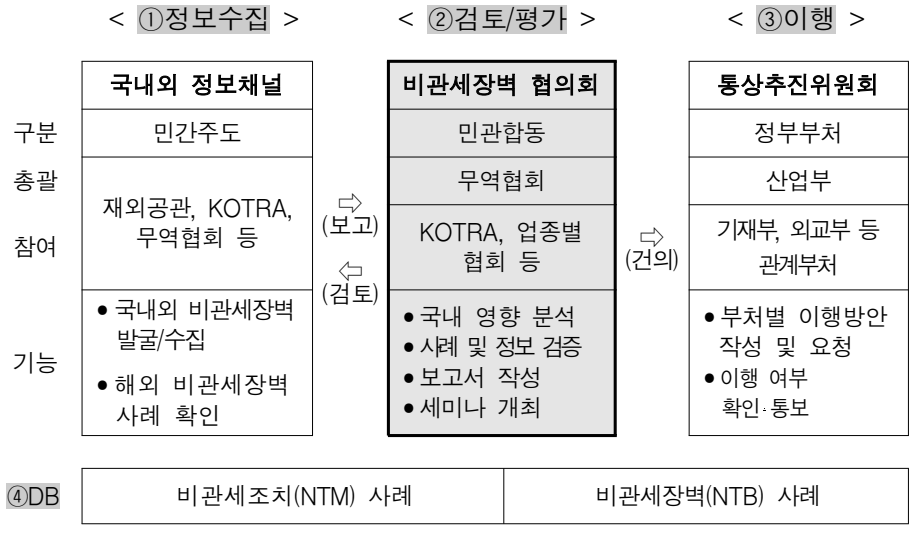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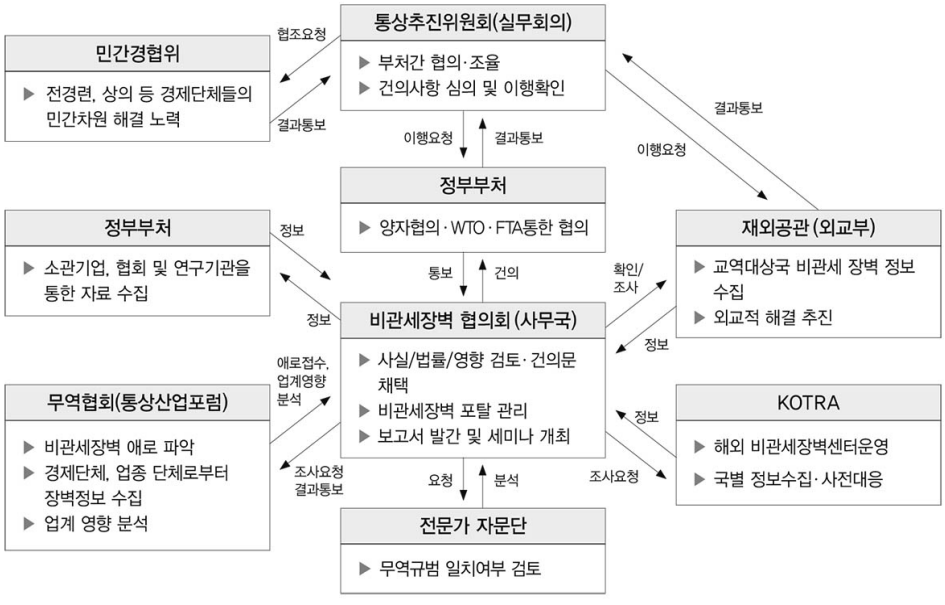


그림 5-4. 비관세장벽 사례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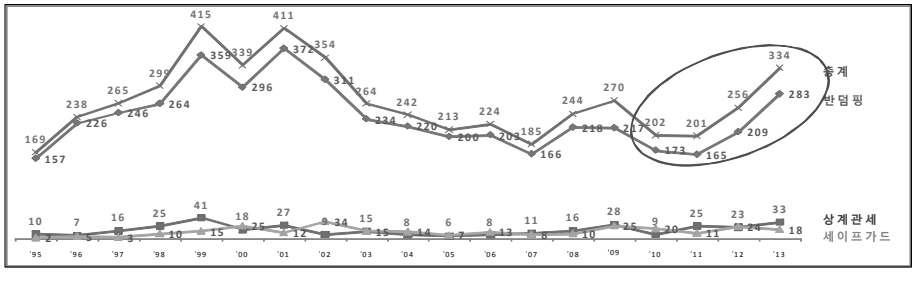


제2절 수입규제 대응*

1. 수입규제 동향

세계적인 경기부진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적인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수입규제조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3년 전세계 수입규제 조치 건수는 334건으로 전년대비 78건 증가하여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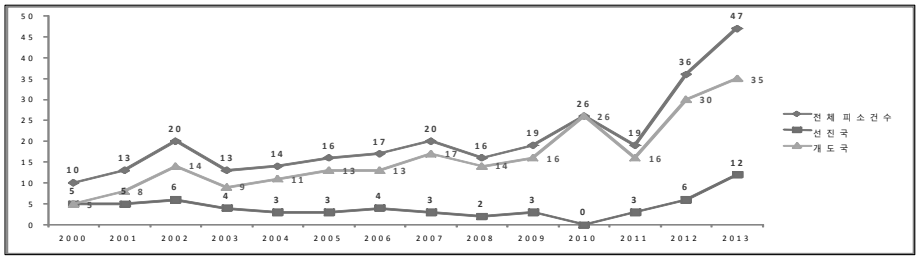
그림 5-5. 전세계 수입규제조치



* 통상협력총괄과 사무관 이우진

우리나라에 대한 신규 제소건수는 2011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3년 47건을 기록하였다. 국가별로는 콜롬비아(7건), 호주(6건), 인도(6건) 등의 신규제소가 이루어졌으며, 총 21개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제소조치를 취했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한 제소가 27건으로, 전체 제소의 57.4%를 차지했다.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조치가 24건, 세이프가드조치가 22건을 차지하여 전세계적으로 신흥국으로부터의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이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되었다.

그림 5-6. 우리나라에 대한 신규 제소건



2013년 12월말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개국으로부터 총 141건이 부과되었다. 이 중 조사 중인 규제는 34건, 조치중인 규제는 107건이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총 28건으로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부과하고 있으며, 인도, 중국, 미국에 의한 조치가 59건으로 전체 규제의 41.8%를 차지하였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한 조치가 98건으로 전체의 69.5%에 해당하였다.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조치가 112건으로, 규제의 대부분(79.4%)을 차지하였다.

세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한국의 수출상대국들이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수입규제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수입규제 국내대응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 산업부는 통상채널을 통해 상대국의 수입규제조치를 의제화하며, '수입규제 국내대응반'을 운영하고, 국제법상 위법한 수입규제의 경우 WTO에 제소하여 수입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폴리실리콘 반덤핑 제소사례('12.7 조사개시)의 경우, 산업부는 한·중 통상장관회담('13.6) 및 한·중 경제공동위('13.11)를 통해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로서 반덤핑 예비판정시('13.7) 국내업체는 경쟁국인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받게 되었다(한국산 최저 2.4%, 미국산 최저 53.3%).

미국의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제소사례('11.12 조사개시, '13.1 최종판정)의 경우, 산업부는 업계의 제소요청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2013년 8월 29일 이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였다.

산업부는 수입규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3년 7월 수입규제 국내대응반을 출범시켰다. 수입규제 국내대응반은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국내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수입규제에 대응하는 논리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수입규제 국내대응반은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을 반장으로, 지역과, 품목과, 통상법무과, 유관기관, 업종단체 등을 반원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제1차 수입규제 국내대응반 회의('13.7)에서는 앞으로 대응반을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입규제에 대응할 것을 결의하였다. 향후 대응반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입규제 조치단계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입규제에 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입규제건에 대한 개별 대응은 통상채널을 보유한 지역과가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품목과와 업종단체 등은 지역과에 적극적

으로 협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지역과가 수입규제 관련 정보를 입수하면 이에 대해 품목과 및 업종단체는 대응논리를 도출하고, 대응논리를 근거로 지역과가 통상채널 및 재외공관을 통해 상대국 정부에 입장을 표명하고 대응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이후 제2차 수입규제 국내대응반 회의('13.11)에서는 호주 및 태국의 열연강판 반덤핑조치와 태국 열연합금강 세이프가드조치 등 구체적인 수입규제 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를 통해 관련업계의 입장을 듣고, 대응조치가 통상 및 외교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첨부] 수입규제 세부현황

(1) 규제형태별 수입규제

2013.12월말 기준

국 가		반덤핑	반덤핑 / 상계조치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계
북미 (2개국)	캐나다	6 (1)				6 (1)
	미국	10 (2)	4 (1)			14 (3)
중남미 (4개국)	아르헨티나	3 (1)				3 (1)
	브라질	9 (4)				9 (4)
	콜롬비아	1				1
	멕시코	1				1
아시아 (8개국)	중 국	17 (1)				17 (1)
	인 도	24 (5)			4 (2)	28 (7)
	인도네시아	6 (3)			3 (1)	9 (4)
	말레이시아	3				3
	파키스탄	8 (1)				8 (1)
	필리핀				3 (2)	3 (2)
	대만	1 (1)			1 (1)	2 (2)
	태 국	4			1	5
아프리카	남아공	3 (1)				3 (1)
유럽 (3개국)	E U	3				3
	러시아	1			3 (1)	4 (1)
	우크라이나	1			3 (1)	4 (1)
대양주	호 주	8 (4)				8 (4)
중동	터 키	3			7 (1)	10 (1)
총계 (20개국)		112 (24)	4 (1)		25 (9)	141 (34)

* 상기 수치는 조사 중인 건[( )내 표시부분]을 포함한 수치임

(2) 품목별 수입규제

2013.12월말 기준

국 가		철강	전기전자	화학	섬유	기타	계
북미 (2개국)	캐나다	5 (1)	1				6 (1)
	미국	10 (3)	2	1	1		14 (3)
중남미 (4개국)	아르헨티나	1	1 (1)	1			3 (1)
	브라질	3		3 (1)	1 (1)	2 (2)	9 (4)
	콜롬비아			1			1
	멕시코				1		1
아시아 (8개국)	중 국		1	14 (1)	1	1	17 (1)
	인 도	3 (1)	3 (1)	19 (4)	2	1 (1)	28 (7)
	인도네시아	5 (1)		1 (1)	3 (2)		9 (4)
	말레이시아	2				1	3
	파키스탄			5 (1)	2	1	8 (1)
	필리핀	1 (1)				2 (1)	3 (2)
	대만	1 (1)		1 (1)			2 (2)
	태 국	5					5
아프리카	남아공	1		1		1 (1)	3 (1)
유럽 (3개국)	E U	2		1			3
	러시아	2 (1)	1			1	4 (1)
	우크라이나	1			1	2 (1)	4 (1)
대양주	호 주	5 (2)	1 (1)	1		1 (1)	8 (4)
중동	터 키		1	2 (1)	4	3	10 (1)
총 계 (20개국)		47 (11)	11 (3)	51 (10)	16 (3)	16 (7)	141 (34)

* 상기 수치는 조사 중인 건[( )내 표시부분]을 포함한 수치임

제3절 통상분쟁 대응*

1. WTO 한·미 세탁기 분쟁 현황

2012.12.19 미국 상무부는 우리 기업(삼성전자, 엘지전자)이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덤핑마진 및 보조금 확정 판정을 하였고, 2013.1.23 미국 무역위원회(ITC)도 우리기업의 세탁기로 인해 미국 세탁기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최종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관세(삼성 9.29%, LG 13.02%) 및 상계관세(삼성 1.85%)가 부과되었다. 이에 우리 업계는 우리 정부에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조치를 WTO에 제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WTO 제소방침을 결정하고,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2013.8.29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미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도 통보하였다.

---

* 통상법무과 사무관 주현수

2013.10.3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통해 상기 반덤핑·상계관세조치를 조속히 철폐해 줄 것을 미측에 요청하였으나. 미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2013.12.5 WTO 분쟁해결이사회(DSB)에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금번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가 승소할 경우, 대미 세탁기 수출 재개 및 국내 고용확대가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며,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표 5-1. 조사대상 세탁기 대미 수출량 비교

단위: 백만불

HS코드 및 품목명		12년상반기 ('12.1~6월)	12년하반기 ('12.7~12월)	13년상반기 ('13.1~6월)
845011	10kg 이하 세탁기	9	4	5
845020	10kg 초과 세탁기	293	219	163
845090	부분품	30	29	34
합 계		332	252	203

출처: 무역협회

제4절 신흥국 진출 지원*

1. 다자개발은행 협력

(1) MDB 프로젝트 플라자

산업부와 코트라는 한국기업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의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해 '13.9월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플라자(Korea-MDB Project Plaza)』를 개최하였다. 이는 은행 관계자 및 MDB로부터 지원받는 수원국 프로젝트 발주책임자를 초청하여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신흥국 10개국 11개 발주기관의 주요인사가 방한하여 다자개발은행이 지원 예정인 이집트 전력프로젝트(18억불), 탄자니아 송배전망 현대화 프로젝트(1.4억불) 등 총 56억불 규모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도 참여하여 민관협력프로젝트(PPP) 투자 정책 및 계획 중인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때 소개된 프로젝트들은 재원조

* 통상협력총괄과 사무관 이재연

달이 안정적이며 다자개발은행의 공식조달절차인 국제경쟁입찰 공고 이전의 사업들로만 엄선된 것으로서, 실제 입찰이 진행될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력관계, 사전 정보 공유 등으로 우리기업들의 수주가 더욱 유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아시아솔라에너지포럼

'13.11월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제6차 아시아솔라에너지포럼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우즈벡 카리모프 대통령, 기타 아시아국가 유력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이 참석하여 한국의 태양광 산업을 소개하고 한·우즈벡 태양광발전 협력을 제안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우즈벡 정부의 태양광 로드맵, 최근 태양광 기술동향 및 우즈벡 사마르칸트 100MW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등을 논의하였다.

(3) 아시아개발은행(ADB) 공동 에너지포럼

'13.12월 산업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제2차 공동 에너지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행사에는 ADB 부총재, 우즈벡 재무부 제1차관 등 고위급 인사를 포함 ADB 관계자 및 인도네시아, 몽골, 라오스 등의 에너지 전문가 등 20여명의 해외인사가 참석하여 ADB 및 각국의 에너지 프로젝트 현황을 소개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ADB의 '모두에게 에너지 접근을 보장(Energy Access for all)'한다는 구상에 따라 개도국의 태양광, 에너지효율 개선, 집단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캄보디아와 우즈베키스탄의 태양광발전소 설립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에너지 효율 개선분야에서는 라오스에서 한국과 ADB

가 공동 실시 중인 에너지 효율 향상 역량강화사업의 추진경과를 소개하고,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의 공동 사업 실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집단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지역난방시스템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벡 등에 적용시키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 ADB 및 참여 개도국간 협력체제 구축에 합의하였다.

동 포럼 계기에 산업부 한진현 제2차관과 데이비스 ADB 부총재는 산업부와 ADB간 협력 MOU를 체결하여 향후 아시아개발은행과의 협력관계에 초석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도국에서 에너지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한국과 ADB간 정보 교환, 지식 공유 및 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공동 파일럿 프로그램 실시, ADB가 발주 예정인 프로젝트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산업부 대표단 연례 파견, 공동 포럼 개최 연례화 등에 합의하였다.

2. 신흥시장 포럼

우리 기업들의 신흥국 진출수요 확대에 따라 효과적인 신흥국 진출전략을 모색하고자 '13.9월 '2013년 신흥시장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산업부 한진현 차관, KOTRA 오영호 사장, KIET 김도훈 원장, KIEP 이일형 원장과 노무라 연구소 임원, 마루베니 연구소 부소장 등 해외 연구기관 및 기업인을 포함한 200여명이 참석하여 신흥국 진출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금번 신흥시장 포럼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재성이 높은 신흥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전략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권역별 및 유망 분야별 진출방안을 살펴보는 의미로 개최되었다. 신흥국의 주요 관계기업인들을 초청하고, 일본 및 중국 연구소의 신흥국 진출 방안과 진출 성공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신흥국 진출 관심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진출 전략을 소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 신흥국 진출 가이드북 발간

제2의 중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진출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산업부는 중앙아 진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초로 「중앙아시아 진출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이번 가이드북은 중앙아 5개국 진출기업에 대한 설문을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TF가 7개월한 작업한 결과물로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에 대한 진출가이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가별 투자 환경, 애로사항별 해소방안(8개 분야 15개 항목), 국가별 진출시 유의사항 및 비즈니스 프로토콜 등 총 4장과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애로해소 분야 및 항목

① 비자발급(공통)
② Engineering 설계용역에 대한 현지 과세(카자흐)
③ 노동허가 및 쿼터(카자흐), ④ 세금(카자흐, 우즈벡)
⑤ 통관 및 운송 지연(카자흐, 우즈벡), ⑥ 외화 환전(우즈벡)
⑦ 금융 애로(카자흐, 우즈벡, 키르기즈), ⑧ 수출 보험(타지크)

4.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방안 수립

산업부는 '13.12.19(목)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 내용을 기업들이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하여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통합적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제분야 정상간 합의사항과 MOU 내용을 기업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코트라 해외시장 정보포탈(글로벌윈도우)에 데이터베이스(DB)를 2014년 1월말까지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DB에는 정상외교 내용뿐만 아니라 각 부처별 후속조치 현황, 맞춤형 지원사업 및 현지 시장정보, 바이어 정보 등 다양한 비즈니스 정보까지 수록되어 기업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는 총망라될 예정이며 합의 내용별 각 부처 담당관을 지정하여 DB 내용을 항시 업데이트하고 관심기업 문의에 직접 응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정상회담 합의내용 이행을 위해 정부의 지원수단을 △ 해외진출 지원자금 지원,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인력양성, △정책자문, △제도적 지원, △금융, △유통 및 마케팅 등 7개 분야로 분류하고, 상기 분야에 각 부처가 보유한 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정상합의내용에 포함된 에너지·자원 인프라 프로젝트에 정책금융기관(수은·무보 등)은 금융지원을 최우선 검토하기로 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정상외교 합의내용에서 사업기회를 발굴해 코트라 DB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정부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성과가 창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수출역량 강화, 해외 네트워킹, 대·중소 동반진출, 금융지원 등 사업유형·단계별 지원을 제공한다.

맞춤형 지원사업의 이행을 점검하고, 사업 관리를 위해 기업지원 범부처 협의회(주재: 산업부 제2차관)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6장

FTA 체결이후 후속조치

제1절 FTA 활용촉진*

1. FTA 활용 현황과 중요성

2000년대 초반까지 FTA 후발주자였던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 46개국과 9건의 FTA를 발효한 FTA 허브국가로 도약하였다. 그 결과 2013년 세계경제(GDP 기준)의 약 57.6%에 해당하는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고 FTA 발효국과의 무역이 우리나라 총 무역의 34.8%에 이르고 있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중국, 일본 등과 FTA를 체결할 경우 전체 무역 규모 중 FTA 발효국의 비중은 7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다발적 수준높은 FTA 체결로 FTA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으나, FTA를 체결하는 것만으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 및 시장자유화의 특혜를 누리려면 원산지관리를 비롯하여 FTA 체결국 시장 진출까지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틀

* 총괄기획과 사무관 박혜영

어 FTA 활용이라고 하는데, 대외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경제의 특성[18]상 FTA 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FTA 활용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FTA 활용은 FTA의 개방폭과 무역규모, 기업의 인지도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FTA 활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TA 활용률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FTA 활용률이란 FTA 특혜관세 대상 품목의 수출입 중 실제 FTA를 활용하여 관세인하 혜택이 적용된 물품의 수출입 비중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FTA의 활용률 중 주요경제권과 체결한 한·미, 한·EU FTA의 수출활용률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다른 FTA 활용률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의 발효 1년차 수출활용률은 68.9%로 다른 협정의 발효 1년차(한·아세안 3.5%, 한·인도 17.7% 등)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며, 한·EU FTA는 발효 3년차인 '13년 수출활용률이 80.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6-1. 상대국별 FTA 수출입활용률(2012~2013년)

단위: 백분율(%)

FTA체결국 (발효)		2012년		2013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칠레	('04.4)	75.2	97.9	78.8	98.5
EFTA	('06.9)	79.8	61.9	80.0	41.4
아세안	('07.6)	37.7	73.8	38.7	75.6
인도	('10.1)	36.2	52.7	42.9	61.0
EU	('11.7)	81.4	66.8	80.8	67.8
페루	('11.8)	78.0	92.0	91.8	97.9
미국	('12.3)	68.9	61.0	76.1	67.3
터키	('13.5)	-	-	70.0	69.4
전체		62.7	-	66.9	-

* 자료원 : 관세청
* 2012년 아세안 FTA활용률에 싱가포르는 제외

[18] 우리나라 대외의존도(서비스 포함): (2002) 67.1% → (2007) 81.6% → (2013) 105.9%

높은 수준의 FTA 활용률은 FTA 성과에 반영되었다. 한·미 FTA 발효 후 2년간 대미(對美)수출은 대세계(對世界)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증가에 기여하였다. 또한 미국의 우리나라 투자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기업규모별 2013년의 FTA 수출활용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대기업의 수출활용률이 중소기업에 비해 20%p 내외로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표 6-2. 기업규모별 FTA 수출활용률(2013년)

단위: 백분율(%)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전체
중소기업	69.8	67.9	30.0	35.3	76.3	55.6	69.2	66.9	57.4
대기업	83.6	95.6	57.7	49.0	84.3	98.2	84.1	72.5	76.8
전체	78.8	80.0	38.7	42.9	80.9	91.8	76.1	70.0	66.9

* 자료원 : 관세청

2.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중소기업은 FTA 활용에 있어 FTA 원산지관리의 복잡성, 이를 담당할 전담인력의 부족 및 해외시장 진출의 어려움 등 다양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2012년 한·미 FTA 수출활용률 기준 59.4%로 대기업의 74.8%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9 미국의 우리나라 투자는 '11년 2,372백만불, '12년 3,674백만불, '13년 3,525백만불로 FTA 발효 이후 증가세

중소기업의 FTA 활용은 FTA 성과를 극대화하고 대외지향적인 우리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핵심요소 중 하나로 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FTA 활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FTA 활용현장의 애로청취를 통해 2013년 6월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은 FTA 콜센터 1380 등 원스탑 현장지원체계 강화, FTA 활용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와 통상기능의 산업부 이관에 따른 FTA 활용과 협상간 연계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1) FTA 콜센터 1380 등 원스탑 현장지원 강화

'FTA 콜센터 1380'은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내 FTA 활용관련 전문상담을 위해 2013년 6월 개통하였다. 이로써 중소기업은 전국 어디서나 1380을 누르면 FTA 활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원스탑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1380은 업종별, 원산지관리 단계별로 7명의 관세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상담하고 있으며, 콜센터 상담으로 부족시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및 16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가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FTA 활용애로를 해결해주는 지원체계이다.

FTA 콜센터 1380은 서비스 개시 이후 2013년 12월까지 총 5,954건, 일평균 45건 이상의 상담을 통해 기업의 FTA 활용 애로를 해소하였다. 그 중 전담관세사에게 상담을 연결하여 30분 이상 소요되는 전문상담이

73.3%(총 4,365건, 일평균 33건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상담의 유형별로는 원산지증명서 작성(32.1%), 품목분류·관세율(20.9%)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20] 업종별로는 화학(12.3%), 기계(9.4%) 등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21]

표 6-3. FTA 콜센터 1380 개통 전후 상담실적

단위: 건, 백분율(%)

구 분	개통전(일평균)	'13년말(일평균)	증감
전체상담	2,400(20.2)	5,954(45.8)	127%
전문상담	1,746(14.7)	4,365(33.6)	128%

FTA 콜센터 1380에 이어 중소기업의 FTA 활용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3년 10월 '인터넷 FTA 1380'(www.fta1380.or.kr)을 구축하였다. '인터넷 FTA 1380'은 이메일·문자를 통해 요청 상담을 24시간 내에 해결하고 있으며,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지원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지원사항을 통합 공고하고 있다. 또한 협정별 관세율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관세율 DB를 보완하고, Trade navi와 연계하여 상대국의 수입규제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원스탑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20 2013년 11월 기준 FTA 콜센터 1380의 문의유형은 원산지증명서 작성(32.1%, 1,163건), 품목분류·관세율(20.9%, 757건), 원산지결정기준(14.0%, 506건), 인증수출자(10.0%, 364건) 등

21 2013년 11월 기준 FTA 콜센터 1380의 업종별 전문상담은 화학(12.3%, 447건), 기계(9.4%, 339건), 전기/전자(9.3%, 336건), 섬유/직물(8.1%, 293건), 자동차/부품(5.3%, 193건) 등

(2) 기업의 FTA 활용단계별 애로해소

기업의 FTA 활용정도에 따라 초보·준비·실행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유형화하여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FTA를 활용하지 않는 수출중소기업 및 내수위주의 협력중소기업을 초보단계 기업으로 분류하고 CEO의 관심 부족, FTA 활용으로 인한 기업정보 유출우려 등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준비단계 기업은 FTA 활용을 시작하였으나 FTA 전담인력 부족, 원산지관리 시스템 미도입 등 실제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기업으로 실무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FTA활용 기업을 실행단계로 구분하고 원산지 사후검증과 FTA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에 중점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① 초보단계 FTA 활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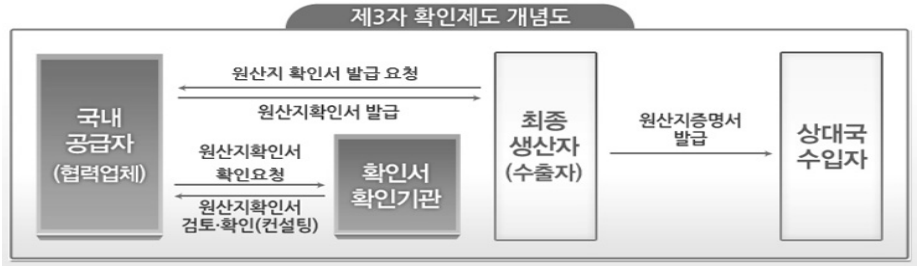
기업의 FTA 활용 인식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CEO의 FTA 교육을 기존 CEO정례·자생모임 등과 연계지원하고 유관기관에 CEO FTA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2013년에 총 1,922명의 CEO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였다. 또한 'FTA 알리미' 서비스를 월2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2013년 10월,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FTA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22]

22 산업부·중소기업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FTA로 LEVEL UP' 발간(2013년 10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활용 성공사례집' 발간(2013년 12월)
중소기업청, 'FTA로 Do Dream(한·미 FTA활용 우수 중소기업 사례)' 발간(6월)

표 6-4. CEO 대상 FTA 교육(2013년 11월 기준)

구분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
	CEO교육과정 (생산성본부, 표준협회 등)	산업단지 CEO 자생모임	FTA무역 종합지원센터	
실적	600명(10회)	792명(19회)		530명(13회)

내수위주 협력중소기업의 FTA 활용으로 인한 기업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3자 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또는 세관 등 제3자의 확인기관에서 원산지확인서의 세부자료를 검토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줌으로써 원청기업의 과도한 정보요구를 차단하는 지원정책이다. 경기지역 FTA활용지원센터에서 '13년 8월 시범도입하여 동년 11월말 기준 총 43개업체를 지원하였고, 서울세관에서도 '13년 11월에 도입하였다.



② 준비단계 FTA 활용지원

본격적인 FTA 활용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해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업부·관세청·중기청 및 유관기관의 FTA 컨설팅 통합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효율적 컨설팅 서비스를 추진하였다. 지원 기관별 컨설팅 서비스를 특화하는 한편 컨설턴트 사전 교육을 통해 컨설팅 품질을 관리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하여 2013년에 총 3,154건의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표 6-5. 2013년 FTA 컨설팅 지원내역('13.11월말 기준)

구분	산업부		관세청	중기청 (중진공)
	FTA무역종합 지원센터	지역 FTA활용 지원센터		
실적	312건	1,562건	502건	778건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의 정확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FTA KOREA(KT-NET) 및 FTA PASS(관세청) 등 무료 원산지관리 시스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3년 11월 기준 총 1만 1,956개사에 보급하였다. 또한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은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엑셀을 활용한 원산지관리 프로그램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③ 실행단계 FTA 활용지원

FTA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개척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FTA 성과 극대화를 꾀하였다. 관세인하 효과가 큰 자동차, 섬유 등 주요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해외전시회 참여, 무역사절단 파견 등 수출에 직결되는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였다.[23] 이와 더불어 FTA 컨설팅을 이수한 수출 유망기업은 종합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추천하여 무역협회의 수출스타트업, 코트라의 FTA 선도기업 등으로 선정되어 밀착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24]

23 산업부·코트라, FTA체결국 해외전시회 54회, 1,139개사 참여, 9억 6,593만불 계약체결
FTA 무역사절단 132회, 1,335개사 참여, 11억 6,519만불 계약체결
중기청, 해외전시회 125회, 시장개척단 17회, 수출컨소시엄 27회, 동반무역촉진단 14회 등

FTA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 외에도 FTA 활용 기업이 상대국의 사후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검증 대응지원을 강화하였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3월에 사후검증 매뉴얼을 배포하고 10월에는 사후검증 자가검증툴인 'FTA Helper'를 보급하였다. 또한 사후검증 진행기업은 2013년 5월에 개소한 '사후검증지원센터'를 통해 FTA 사후검증 안내(305건), 심층상담(152건), 소명자료 작성지원(44개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3. 맺음말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12년 대비 '13년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이 개선되고 다양한 중소기업 성공사례가 도출되었다. 향후 종합대책을 통한 FTA 활용의 성과를 점검하고 업종별 맞춤형지원 및 활용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4 무역협회 수출스타트업 13개사 지원, KOTRA의 한·미 FTA 선도기업 37개사, 한·터키 FTA 선도기업 15개사 선정하여 1:1 밀착지원 제공

제2절 FTA 국내보완대책의 추진과 성과평가*

1.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과 추진경과

FTA로 인한 취약산업 분야의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FTA 국내보완대책은 2013년을 기준으로 현재 한·미 FTA와 한·EU FTA 체결시 수립된 국내보완대책이 추진 중이다.[25]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10년간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농업분야 체질개선 등을 위해 24.1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면세유 공급 일몰연장 등 29.8조 원의 세제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기존에 축산업 발전대책 8.8조원에 2조원의 재정지원계획을 추가한 형태로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다.

현행 FTA 국내보완대책의 예산은 지난 2008년부터 반영된 이래 2013년까지 총 14.0조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그 중 13.4조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95.8%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분야별 집행예산은 피해보전직불제와

* 국내대책과 사무관 김태윤

25 지난 2004년 수립한 한·칠레 FTA 국내보완대책은 2010년에 종료

폐업지원 등 직접피해보전에 1,447억원(1.1%)과 품목별 경쟁력 대책으로 축산분야 6조 530억원(45.3%), 수산분야 4,209억원(3.1%), 원예/식량분야 1조 2,108억원(9.1%) 등이 집행되었으며, 기타 맞춤형 농정 3조 4,943억원(26.1%), 농식품산업육성 7,269억원(5.4%), 수출촉진 6,904억원(5.2%), 첨단지식/기술 6,266억원(4.7%)이 집행되었다.

표 6-6. 2008~2013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및 집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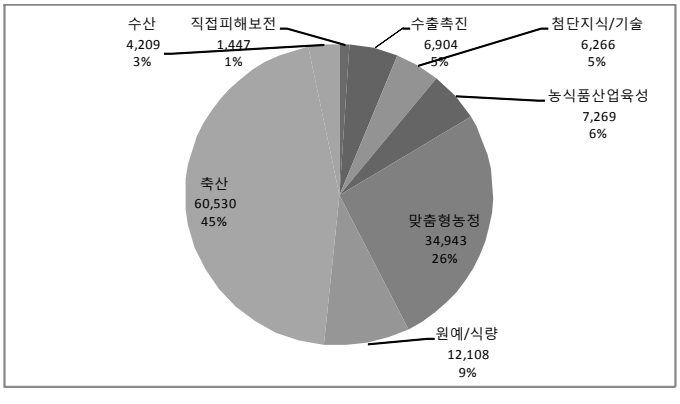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분	예산(B)	집행(C)	집행률(B/C)
합계*	139,602	133,676	95.8
한·미 FTA	123,043	102,251	83.1
■ 직접피해보전	6,506	1,447	22.2
■ 품목별경쟁력제고	54,092	45,422	84.0
- 축산분야	36,350	29,105	80.1
- 원예분야	13,163	12,108	92.0
- 수산분야(해수부등)	4,579	4,209	91.9
■ 근본적체질개선	62,445	55,382	88.7
한·EU FTA(축산)**	33,432	46,186	138.1

* 한미 FTA 대책과 한EU FTA대책 중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축산분야 사업을 제외한 수치
** 살처분보상금(계획 1,300억원, 실적 1조 7,256억원)을 제외한 한EU FTA대책 집행률은 90.4%

그림 6-1. 분야별 FTA 국내보완대책 집행실적

2008~2013 합계, 억원



2.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및 성과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의 예산은 3조 6,850억원 수준의 예산을 반영하여 3조 3,947억원을 지원하여 92.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표 6-7.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억원

구분	예산(A)	집행(B)	집행률(B/A)
합계	36,850	33,947	92.1
직접피해보전	980	1,080	110.2
품목별 경쟁력 제고	19,257	16,933	87.9
- 축산분야	15,745	13,572	86.2
- 원예분야	2,042	2,012	98.5
- 수산분야	1,470	1,349	91.8
근본적 체질개선	16,613	15,934	95.9
- 맞춤형농정추진	10,235	10,126	98.9
- 신성장동력창출	6,378	5,808	91.1

세부 내용으로는 FTA에 따른 수입 급증에 따른 직접적 피해 보전을 위해 1,080억원을 지원하여,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13년 최초로 발동요건을 충족한 한우와 한우송아지 품목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으로 26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한우를 사육하는 1만 8,297 축산농가에 대해 819억원의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여 구조조정을 유도함으로서 한우 사육농가의 규모화가 촉진되도록 유도하였다.

품목별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등 축산분야 27개 사업에 1조 3,572억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등 원예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10개 사업에 2,012억원,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 등 수산분야 16개 사업에 1,470억원을 지원하였다. FTA 국내보완대책의 소관부처인 농축산식품

부와 해양수산부의 성과분석 보고서[26]에 따르면 이러한 2013년도 품목별 경쟁력 제고사업의 추진결과, 사업 수혜농가의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으로 인한 농가 경영안정, 친환경 농축수산업의 확산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7]

농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39개 사업에는 1조 5,934억원을 지원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업재해보험, 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 유통 활성화, 시설원예 품질개선, 첨단온실 신축지원, 골든시드 프로젝트, 해외시장 개척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농업경영인의 영농정착률이 전년대비 증가[28]하였으며, 농업재해보험의 대상품목과 보장범위 확대[29]에 따라 보험 가입농가가 늘어났고[30],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통한 생산기반 정비사업 또한 안정적 소득 보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국산 종자 보급률 증가와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 비중이 확대[31]되는 등의 효과도 나타났으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축산물 이력제', 'HACCP 인증지원' 등의 사업은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는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6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2014.5, 농식품부) 및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2014.5, 해양수산부)

27 구체적인 사례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수혜농가는 비수혜농가에 비해 한우 1등급 출현율이 2.9% 높았으며, 원예농가는 2003년대비 2012년 단위면적당 과일 생산량은 13.2% 증가하고 노동시간은 11.4% 감소하였으며, 과원 10a 당 소득(실질가격 기준)은 42.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산분야는 '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 등의 추진으로 거제 어류양식협회 활어 수출액이 전년대비 4.4배 증가하였으며,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의 추진 전과 추진 후를 비교한 결과 생산량 38.4%, 어업소득 24.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8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11) 97.7% → ('12) 97.6 → ('13) 98.1

29 보험 대상 품목 증가: 5개 작물(시설부추, 시설시금치, 시설상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을 추가(34개→39개), 보장범위 확대: 병충해·야생동물피해·화재 등 보장재해 확대

30 지난 5년간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미가입 농가보다 농업소득이 평균 9.1% 높은 것으로 계측

31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 비중: ('11) 6.7% → ('12) 9.5 → ('13) 12.4

그러나 일부 농업계에서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지원규모에 대해 단기 피해보전의 지원규모가 불충분하고 중장기 투융자 재원은 기존 대책과 중복되어 지원규모가 과장되었다는 불만이 제기되었고, 재정지원 방식의 차이가 큰 보조와 융자, 이차보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지원규모로 발표함으로써 지원규모의 오해와 실효성 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반면 국회·감사원 등의 지적에 따르면 당초 농축수산분야의 FTA 피해를 과다하게 추정하여 실제 피해발생 규모와 차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었으며[32] 농축수산업계에 과도한 재정지원이 편중되어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농정과 FTA 국내보완대책의 차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FTA와 관련성이 낮은 사업은 일반 농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FTA 국내보완대책 개별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매년 시행되고 있는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투융자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33] 또한 제조업 분야의 FTA로 인한 피해보전 제도인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정 절차 간소화와 자금지원조건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32 FTA 수입피해 과대추정과 대책수립의 부적정성 지적(감사원, 2013.7), FTA 사전 피해예측과 사후 피해발생규모의 차이에 대한 논란 (국회 통상관계대책특위, 2014.3)

33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8)

3. FTA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 제고

2013년도는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착수된 해였다. 우선 2012.10월 개정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처음으로 FTA 국내보완대책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경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성과와 효과를 분석하여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와 「투융자계획서」를 각각 5월과 9월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비농업 분야의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2013. 6월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에 착수하였다.

또한 FTA 발효 후 이행과정에서 우리의 경제적 권익 확보를 위해 FTA의 경제적 효과,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과 개선방안, 상대국 정부의 조약상 의무 이행상황 등을 평가하는 「FTA 이행상황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여, 2012.1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근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한 한·칠레 FTA 이행상황 평가를 2013. 11월 착수[34]하였다. 그 결과 한·칠레 FTA에 따라 9년간 한국의 실질 GDP가 0.04% 증가하고 양국간 교역 증가에 FTA가 13~15%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35]

---

34 2013.11~2014.5월간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칠레 FTA 이행상황 평가」연구용역 계약을 체결

35 한·칠레 FTA 이행상황 평가 결과(2014.5)
- (수출입효과) 수출은 전체 증가액의 15.6%인 2.9억불, 수입은 전체 증가액의 13.1%인 3.6억불이 FTA효과
- (성장·후생효과) 한·칠레 FTA에 따라 9년간 한국의 실질 GDP는 0.04% 증가, 소비자 후생은 2.85억불 증가
- (생산·고용효과) FTA수출입 변화에 따른 국내생산은 '03년 대비 연평균 4,854억원 증가, 고용은 '03년 대비 '12년에 436명 감소, 취업계수가 높은 농축산업분야 생산감소(△1,026)가 전체 고용감소 야기
- (국내보완대책 효과) 한·칠레 FTA로 과일·축산분야의 피해가 추정되었으나, 국내보완

2013년도에는 FTA 국내보완대책 현장방문을 강화하여 사업 현장의 의견 수렴을 확대하였다. 수산·밭작물 직불제, 무역조정지원 등 국내보완대책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군산, 시흥, 구미 등에서 총 8차례의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무역조정지원 심사기간 단축, 수산직불제 직불금 지원방식 간소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대책으로 피해의 50% 이상을 상쇄시켰고, 수입가격·국민소득 상승효과 등으로 피해가 현실화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제3절 FTA 교육·홍보 활동*

1. 대국민 FTA 정책홍보

FTA에 대한 인식제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FTA 경제적 효과 등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 간행물 발간 및 계기별 정책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월간 '함께하는 FTA'는 2012년 6월부터 발간해온 정부 간행물로서 FTA 정책 동향, 농어업 및 중소기업 FTA 활용 우수사례, 산업현장의 목소리, FTA 활용 실무 등 국민 체감형 정보제공에 중점을 두고 월간지를 발간·배포하고 있다.

'함께하는 FTA' 개요

- ○ (제작형태) 월간지(44면), 2012.6월 창간
- ○ (제작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 (제작부수) 4만부
- ○ (주요내용) FTA 정책동향, 이슈분석, FTA 활용정보 등
- ○ (배포처) 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수출업체, 도서관, 은행·우체국 지점, 헌혈의집 등 3만여 곳 발송

* 홍보협력과 사무관 박백우

FTA 정책홍보 활동으로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개통한 FTA 전담 콜센터(국번없이 1380)가 수출입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전담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전광판, 인터넷 검색 등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콜센터의 인지도를 상승시켜 조기 정착에 기여하였다.

FTA 체결 및 발효 등 홍보활동으로는 한·중 FTA 1단계 타결내용을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하여 '첫걸음 내딛은 한·중 FTA'라는 홍보 만화를 제작·배포하였으며, 한·미 FTA 발효 1주년, 한·호주 FTA 타결 등 계기별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FTA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였다.

표 6-8. 2013년 계기별 정책홍보 현황

홍보 계기	시 기	형 식	매 체	내 용
한·미 FTA 발효 1주년	3월	인터넷 배너	네이버, 다음	FTA가 대한민국을 웃게 합니다.
		인터넷 검색	네이버, 다음	
활용지원 종합대책	6월	신문기고	매경	中企여 이제 FTA를 활용하자.
			한경	中企위한 FTA 전략 세우자
FTA 콜센터 개소	6~9월	인터넷 검색	네이버, 다음	FTA 활용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인터넷 배너	산업부, FTA포털	
		신문	매경, 한경 등 일간지	
		방송	MBN	
		지하철	2,4호선 314객차	
		정기간행물	함께하는FTA 외	
		전광판	정부보유 100곳	
		PCRM	뉴스레터 발송	
한·중 FTA 1단계 타결	9월	홍보만화	인쇄 제작	첫걸음 내딛은 한중FTA
		인터넷 검색	네이버, 다음	13억 인구의 중국시장이 기다립니다.
FTA콜센터 홍보	10월	신문	경제지, 석간지	FTA 활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언론보도	내일신문	콜센터1380 눈길, 중기 FTA 지원
		월간지	포브스 외 2종	FTA 활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인터뷰	월간 신용사회	통상국내대책관 인터뷰
		리플렛	인쇄 제작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한·호주 FTA 타결	12월	인터넷 검색	네이버, 다음	한·호주 FTA 실질적 타결

2. 찾아가는 FTA 교육

정부의 신통상정책에 따른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FTA시대가 본격화 됨에 따라 공무원, 교원, 기업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FTA 정책이해와 FTA활용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FTA 교육 수요의 다양화 및 증가 추세로 인해 교육 대상을 선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 추진하여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교원을 대상으로 'FTA 일반·법제교육'을 실시하여 총 62회 4,13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동시에 기업실무자를 대상으로 FTA활용 교육을 병행하여 6,81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확대로 인해 기존 공무원 대상의 FTA 교육과 함께 중소기업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FTA강좌가 신설되어 FTA 교육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FTA 체결에 따른 수출시장의 확대에 따른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체결 상대국 현지 기업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2010년도부터 '찾아가는 FTA 해외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거대 선진 경제권은 물론 신흥시장 국가와의 FTA가 지속적으로 체결되고, FTA 파트너 국가와의 무역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현지 기업인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원산지 관리, 수출입통관절차, 사후관리 등 FTA 실무능력 배양을 지원하여 현지 수입업자의 FTA의 활용도를 높이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2013년도에는 최근 FTA 협정의 발효 및 발효예정 국가, FTA 활용도가 낮은 신흥시장 중심으로 해외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지 기업들의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켰다.

표 6-9. 찾아가는 FTA 해외설명회 활동 현황

연도별	해외설명회 개최지역
2010년(7회)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인도(뉴델리, 뭄바이)
2011년(9회)	스페인, 헝가리, 미국(LA), 루마니아, 폴란드,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페루
2012년(14회)	미국(뉴욕, 디트로이트, LA, 시카고), 불가리아, 헝가리, 독일, 영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터키,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2013년(6회)	터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콜롬비아, 페루

또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FTA정책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FTA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FTA 정책 설명회를 개최(10회)하여 FTA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켰으며, FTA 관련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FTA 활용지원 대책에 반영하고 있다.

제4절 FTA 이행

1. 한·미 FTA*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 한·미 FTA는 2007년 6월 30일 서명된 총 24개장의 원협정과 2011년 2월 10일 서명·교환된 서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10월 12일,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우리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한·미 FTA 원협정이 서명된지 4년 5개월만에 동 협정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양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완화 또는 철폐되면서, 한·미 양국 이해관계자들이 협정상의 특혜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FTA 발효 후 2013년도 對美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특히 FTA 혜택 품목을 위주로 수출·수입이 증가(468억불, 7.8%)하였다. 대표적인 혜택 품목은 자동차부품(6.2억불, 9.2%) 및 석유제품(35억불,

* FTA이행과 사무관 구진경

21.1%)으로 2년 연속 對美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비혜택품목(관세율이 원래 0인 품목이거나 '13년 기준 관세인하 효과가 없는 품목)인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의 경우에도 수출세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증가(5%)하였다. 2013년도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은 전년대비 7.2%p 증가, 76.1%에 이르는 등 실제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수출입품목의 비율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협정상 권리·의무의 이행 및 감독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미 양국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산하 위원회 및 작업반을 수립·운영중이다. 2013년의 경우, 10월 5일 제2차 한·미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환경·노무 협의회, 중소기업작업반 등 총 13개의 분과 위원회 및 작업반이 개최되었다. 이와 같은 협정 이행체계를 통해, 양국은 협정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협의·조정해 나가고 있다.

한·미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을 아우르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이다.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공산품과 임수산물에서 전 품목을 예외 없이 개방하기로 하였고, 즉시 철폐를 포함하여 5년 내 조기 철폐되는 품목이 품목수 기준으로 우리 측 92%, 미 측 92.8%에 이른다. 농업 분야에서는 관세 철폐 기간을 차별화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품목별 민감성을 상당 부분 반영하였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선택적·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투자 분야에서는 투자 관련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양국간 투자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한·미 FTA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을 확대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미 FTA는 한미 동맹을 기존의 군사·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확대하여 한미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 한-EU FTA*

한·EU FTA는 매우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이다. 교역액 기준으로, 우리 공산품에 대한 EU의 관세는 5년 내에 100% 철폐되고, EU 공산품에 대한 우리의 관세는 5년 내 97%가 철폐될 예정이다. 관세철폐 외에도 상당한 수준의 서비스 시장개방과 지재권, 정부조달, 무역구제, 경쟁 등 모든 주요 무역규범을 망라하고 있다.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2013년 기준으로 세계 제1위 경제규모를 가진 거대시장이자 2013년 기준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다. 이러한 EU와의 FTA는 우리 기업의 EU시장에 대한 접근을 크게 개선하고, 한·EU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와 EU 및 제3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 증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제고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EU FTA 발효 후 유럽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우리나라의 발효 2년차(2012년 7월 1일~2013년 6월 30일) 대EU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6% 감소하였다. FTA와 무관하게 이미 무관세인 선박, 무선통신기기 및 반도체 등의 비혜택 품목 수출이 발효 1년차에 비해 12.4% 감소하였으나, 0.4% 감소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 등 FTA 혜택 품목의 수출이 비혜택 품목의 수출 감소폭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평가된다.

* FTA이행과 사무관 김이경

한편, 한·EU 양측은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13년 10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3차 한·EU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우리측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과 EU측 카렐 드 휴흐트(Karel De Gucht)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EU FTA 발효 2년간의 효과 및 산하 위원회, 작업반의 활동상황을 점검하였고 통관 및 무역원활화 방안 등 한·EU FTA 이행 방안 등과 2013년 EU에 신규가입한 크로아티아의 한·EU FTA 가입 등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한·EU FTA 이행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충실한 이행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3. 한-칠레 FTA*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FTA이다. 2003년 2월 서울에서 협정이 서명되어 2004년 4월 1일에 발효하였으며, 올해로 발효 10년째를 맞이하였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액은 발효 이전 연도인 2003년의 15.8억불에서 2013년 71.2억불로 증가하였다

양국은 한·칠레 FTA의 차질 없는 이행 관리를 위해 2012년까지 총 8차례의 한·칠레 자유무역위원회(FTC: Free Trade Commission)와 분야별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12년에 개최된 제8차 자유무역위원회(2012.12.11~12, 서울)에서는 지난 7차 자유무역위원회 개최 이후 한·칠레 FTA 성과를 평가하고, 서비스·투자·정부조달 분야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칠레 FTA 협정개선 문제 및 협정 이행 원활화를 위한 양국의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였다.

* FTA이행과 사무관 홍기웅

4. 한·페루 FTA*

한·페루 양국 정부는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격상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로서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08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시 한·페루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5차례의 공식협상, 2차례의 회기간 회의, 3차례의 통상장관회담을 거쳐 2010년 8월 30일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이어 2011년 3월 21일 서울에서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였다.

한·페루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국이 조기 비준 및 발효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1년 6월 29일 한·페루 FTA 비준 동의안이 우리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후 한 달여 만인 2011년 8월 1일 한·페루 FTA가 발효하였다.

한·페루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액은 발효 이전 연도인 2010년의 1983백만불에서 2013년 3423백만불로 증가하는 등 한·페루 FTA가 양국간 교역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1월 28일 한·페루 FTA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제1차 한·페루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었으며, 최근 2014년 6월 2~3일 제2차 장관급 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공동위원회 계기 양측은 한·페루 FTA의 효과를 평가하고, 양국간 통상 현안 및 양국 지역통합정책 현황을 논의하는 한편, FTA를 통한 양국간 협력 의지를 다시 확인하였다. 2차례에 걸친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에 관세위원회, SPS위원회 등 산하위원회도 함께 개최되어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가 이루어졌다.

* FTA이행과 사무관 홍기웅

5. 한-아세안 FTA*

한·ASEAN 회원국 정부는 2005년 12월 13일 서명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키로 하고, 상품무역협정은 2007년 6월에, 서비스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은 각각 2009년 5월 1일과 2009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3개의 협정이 모두 발효됨으로써 한·ASEAN 자유무역지대의 골격이 완성된 것이다. 이와 함께, 상품무역 협정과 서비스무역 협정 서명에 불참하였던 태국에 대해 동 협정이 2010년 1월 1일 발효됨에 따라 ASEAN 10개 회원국 모두에 대해 우리 기업은 한·ASEAN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타결되고 원활한 이행이 시작되면서 양측간 교역액은 협정 발효 이전인 2006년 618억불에서 2013년 1,353억불로 119% 증가하였으며, 2006년 말 우리나라의 제5대 교역 상대였던 ASEAN은 2010년 이래 우리나라의 제2대 교역 대상 경제권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ASEAN 양측은 한·ASEAN FTA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매년 한 두 차례의 한·ASEAN 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2013년에는 6월에 개최하였다. 아울러 2013년 9월에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특별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추가자유화 논의를 본격 개시하였다. 양측은 추가자유화 협의를 통해 양측간 추가적인 시장 개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한·아세안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FTA이행과 사무관 정지선

6. 한·인도 CEPA*

한·인도 양국 정부는 갈수록 긴밀해지는 양국 경제통상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로서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12차례의 공식협상과 3차례의 회기간 회의를 거쳐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1월 1일 한·인도 CEPA가 발효되었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된 이후 양국 교역·투자·인적 교류가 증가하는 등 실질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한·인도 CEPA 발효 전인 2009년 대비, 2013년 우리나라의 인도에 대한 수출은 42%, 수입은 49.2%가 증가하여 전체 교역액이 44.4% 증가하였다.

한편, 한·인도 CEPA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이슈들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양국 통상장관(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상공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제1차 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가 2011년 1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다. 동 공동위에서 양국 통상장관들은 CEPA 체결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CEPA 서명 이후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CEPA 활용률 제고 및 자유화 확대 등을 통해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정 개선(upgrade) 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 양국은 한·인도 CEPA 개선 추진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한·인도 CEPA는 향후 인도와의 경제적 협력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09년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관세철폐 효과만 계산해도 앞으로 10년간 대인도 수출은 17억불, 무역흑자는 14억불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인도의 경제규

* FTA이행과 사무관 정지선

모와 경제성장 속도,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 및 양국간 교역과 투자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한·인도 CEPA의 실제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7. 한-터키 FTA*

터키는 유럽 인구 2위(7,370만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도 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유럽·아시아·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지정학적 중요성·시장잠재력·거대시장 인접성 등 신흥시장으로서의 요건을 두루 갖춘 post-BRICs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7년 양국 수교 이후, 對터키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흑자폭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교역량에서도 1977년 32백만 달러에서 2011년 59억 달러로 약 185배 증가 하였다. 하지만, 터키의 전략적 중요성과 전통적으로 우리의 우방국이었음을 감안하면 양국 간의 교역수준은 그 경제규모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양국은 한·터키 FTA가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다양한 방면에서 양국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간 FTA체결 추진을 본격화하였다.

2010년 3월 19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한·터키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한·터키 FTA 협상 출범이 선언이 된 이래 양국은 2010년 4월과 7월, 2011년 3월, 2012년 3월 네 차례의 공식 협상과 소규모협상을 통해 한·터키 FTA를 한·ASEAN FTA 방식에 따라 1) 기본협정, 2) 상품무역협정, 3) 여타 협정

* FTA이행과 주무관 전호언

(서비스·투자협정 등)으로 구성하는 데 합의하고,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의 잠정 합의를 도출하였다.

2012년 8월 1일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페르 차을라얀 터키 경제부 장관은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서명(signing)하였고, 상기 협정 발효를 위한 양측의 국내 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이후, 2012년 11월 22일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우리 국회를 통과하여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으며, 2013.5월부로 발효가 되어 양국의 교역이 증가하고 對터키 수출·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8. 한-EFTA FTA*

서유럽 강소국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는 2006년 9월 1일 발효하였으며, 발효 이후 양측 간 교역량은 발효 이전 연도인 2005년 29억불에서 2013년 88억불로 증가하였다.

한·EFTA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08년 5월 서울에서 한·EFTA FTA 제1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2013년에 제4차 공동위원회(2013.11.26, 제네바)가 개최되었다. 공동위원회에서 한·EFTA 양측은 한·EFTA간 교역관계를 평가하고, 한·EFTA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세 통관·원산지 검증 이슈 및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FTA이행과 주무관 모주연

9.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FTA는 2005년 8월에 서명되어 2006년 3월에 발효하였으며, 협정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은 발효 전인 2005년 127억불에서 2013년 326억불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교역량 및 수출액 증가는 한·싱가포르 FTA 체결 이전 사실상 무관세국가였던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셈이 되어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증가 효과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경제관계 강화 및 이미지 제고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싱가포르 FTA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양국은 2009년 1월 싱가포르에서 제1차 이행검토회의를, 2012년에는 11월 29~30일간 서울에서 제2차 이행검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행검토회의에서는 한·싱가포르 FTA의 발효 이후의 효과를 점검하고, 전문직 엔지니어 상호 인정 등 이행 관련 양국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협정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 FTA이행과 주무관 모주연

제7장

소통협업역량강화

제1절 소통협업 인프라 운영

1. 통상추진위원회 운영*

통상 업무가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FTA 추진위원회를 통상추진위원회로 확대·개편하였다. 당초 FTA 추진위원회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주관하면서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석했으나 통상추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참석대상도 차관급으로 격상하였다. 심의범위도 FTA 중심에서 통상정책, 양·다자 통상조약, 산업자원협력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상추진위원회의 실무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통상차관보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석하는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도 구성하였다. 정부3.0에 따라 위원회 참석기관을 기존 14개에서 23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이 참석하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통상 애로해소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최근 주요 통상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재권 등 비관세 분야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 통상정책총괄과 사무관 권영희

2013년에는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총 4회 개최하였다. 1차회의는 통상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열리는 첫 번째 통상관련 정부회의로서 통상추진위원회 및 실무회의 구성·운영계획,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협상 추진계획, 주요 FTA 추진현황 및 계획이 논의되었다.

2차회의는 5월 16일 목요일에 열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추진동향,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추진동향,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추진계획이 심의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공급사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이익을 공고히 하는 한편, 시장 선점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RCEP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데 부처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제9차 WTO 각료회의의 주요 성과물이 될 WTO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추진동향을 논의하였는데, ITA 확대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IT제품의 수출시장을 중국 등 신흥시장을 확대하고 다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므로 협상 타결에 따른 영향분석 및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와 관련하여, 아세안은 우리의 제2의 교역 상대국인 만큼 한·아세안 FTA 개방수준을 높이고 기업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가자유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6월 5일에 열린 제3차 실무회의에서는 신통상 로드맵, 한·인니 CEPA협상 추진동향 및 계획, 한·베트남 FTA 협상 추진동향 및 계획, WTO 정부조달협상 추진동향, WTO DDA 무역원활화협상 추진동향을 심의했다. 5월 29일부터 진행된 제3차 한·인니 CEPA 협상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한·베트남 2차 협상(5.22~24)에서 상품, 원산지, 서비스 등 분야별로 논의된 결과 및 본격적인 협상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WTO 정부조달협상은 중국 가입이 주요 쟁점으로 양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개

정의정서의 이행 관련 우리 입장 정립을 위해 협의했다. 제9차 WTO 각료회의 주요 성과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DDA 무역원활화협상은 통관절차 간소화, 개도국 능력배양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제4차 실무회의는 9월 12일에 개최되었으며, 제2차 한·인니 장관급 경제협력위원회 추진방안,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 한·미 및 한-EU 양자 통상현안이 논의되었다. 9월 25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인니 장관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는 인니 경제개발 마스터 플랜 협력 이행 및 한·인니 경협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한·인니 수교('73.9.18) 40주년을 계기로 제2차 한·인니 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파트너쉽을 보다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관계부처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제 구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비관세장벽에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5차 회의는 서면안건으로 한·미 FTA 패널명부 우리측 의장 후보자 선정안이 논의되었다. 11월 28일에 열린 6차 회의에서는, 주요국별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11월 12일 개최된 민관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중국의 비관세장벽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그밖에 미국, EU, 일본, 아세안의 주요 통상현안 및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다.

표 7-1. 통추위 실무회의 안건상정 실적('13.4～'13.11)

구 분	안건명
1차 회의 ('13.4.19)	· 통상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신통상로드맵 수립 계획 ·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협상 추진계획 · 주요 FTA 추진현황 및 계획(한·중, 한·중·일, RCEP)
2차 회의 ('13.5.16)	· RCEP 추진동향 · WTO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추진동향 ·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추진계획
3차 회의 ('13.6.5)	· 신통상 로드맵 · 한·인니 CEPA, 한·베트남 FTA 협상 추진동향 및 계획 · WTO 정부조달협상 추진동향 · WTO DDA 무역원활화 협상 추진동향
4차 회의 ('13.9.12)	· 제2차 한·인니 장관급 경제협력위 추진방안 ·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 · 한·미 및 한-EU 양자 통상현안
5차 회의 ('13.10.11)	· 한·미 FTA 패널명부 우리측 의장 후보자(서면)
6차 회의 ('13.11.28)	· 주요 통상현안 대응방안 · 미국·EU·동북아·ASEAN의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2.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상정*

대외경제장관회의는 부총리 주재 장관급 협의체로 통상업무 이관 이후 통상정책 수립, 통상협상 추진에 있어 관계부처간 협의와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어 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는 2013년 4월 5일 제128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9일 제144차 회의까지 총 17차례 개최되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78건이며, 산업부는 통상정책·통상협상 관련 35건을 상정

* 통상정책총괄과 사무관 권영희

하여 전체 안건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 상정된 안건은 신통상 로드맵 등 통상정책 수립에서 FTA 협상, WTO 다자협상, 국내 보완대책에 이르기까지 통상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원전수출, 수출입 전망 등 대외경제 관련 다양한 안건을 상정하였다.

3. 국내대책위원회*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비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국내보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25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내대책위원회는 특히 정부-민간간의 다양한 소통을 통하여 FTA 체결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충실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대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청 차관급인 정부위원과 경제계·언론계·학계의 전문가, 농민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현장 전문가, 관련업계 대표자 등의 민간위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민간위원장 2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6월부터 2013년까지 총 2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소통,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자유무역협정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총괄기획과 사무관 김정표

4. FTA 활용촉진협의회*

FTA 활용촉진협의회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관합동협의체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실장급과 대한상의, 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제원산지 정보원, 한국소비자원, 산업단직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부기관장급이 참석하는 회의이다.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통상국내대책기능이 기획재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던 FTA 활용지원정책협의회를 재구성하여 2013년 5월부터 운영하였다. 2013년 총 7차례의 회의를 실시되었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세부 후속조치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FTA 통합콜센터 1380의 온라인 운영방안, FTA 활용우수사례경진대회 개최, 고용연계형 FTA전문인력 양성, FTA 사후검증 대응방안, FTA 사후검증툴(FTA-Helpe) 개발·보급,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운영방안, 공급망 원산지 관리교육 방안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FTA 비즈니스 우수 기업 사례발표, 지역 FTA 활용지원 센터 운영사항 및 건의사항, 중소기업의 FTA 수출컨설팅 성공사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사례 등 다양한 현장 성공사례 및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었다. 아울러 FTA 활용과 협상간의 환류체계 마련을 위해 기체결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FTA 활용지원반 추진실적 및 계획 등

* 총괄기획과 사무관 김성철

국내에서의 FTA 활용애로를 이행협상 등에 반영하여 해결키도 하였다. FTA 활용촉진협의회는 이외의 기능들도 가지고 있는데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점검기능이다. FTA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성과분석 보고,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 관리 내실화 방안 등이 논의되어 그간의 FTA 국내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개선안도 마련된 바 있다.

표 7-3. FTA 활용촉진협의회 회차별 주요논의내용

구분	FTA 활용촉진 협의회 안건
1차 (5.9일)	▪ FTA 활용촉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산업부) ▪ FTA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성과분석 보고(농식품부·해수부) ▪ 기체결 FTA 개선협상 추진현황 및 계획(산업부)
2차 (6.20일)	▪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산업부) ▪ 한·EU FTA 발효 2년간 주요성과 분석(산업부)
3차 (7.25일)	▪ FTA 서비스분야 협상내용 및 활용방안(KIEP) ▪ 고용연계형 FTA 전문인력 양성방안(산업부) ▪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FTA 활용 지원 사례(현대모비스)
4차 (8.29일)	▪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운영방안(산업부) ▪ 인터넷포털 'FTA 1380' 운영계획(산업부) ▪ FTA 사후검증 동향 및 대응방안(관세청) ▪ FTA 보완대책 평가 및 한·중 FTA 대비 추진방안(산업부)
5차 (9.27일)	▪ 원산지 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운영방안(산업부) ▪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계획(산업부) ▪ 중소기업의 FTA수출 컨설팅 성공사례 및 활성화 방안(중기청) ▪ FTA 활용기업 수출지원 연계방안(관계부처 합동) ▪ FTA 사후검증 자가검증툴 「FTA-Helper」보급계획(무역협회)
6차 (10.29일)	▪ FTA 컨설팅 효율성 제고방안(산업부) ▪ 공급망 원산지 관리 교육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무역협회) ▪ FTA 비즈니스 우수사례 발표(2개 기업)
7차 (12.26일)	▪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개선방향(관계부처합동) ▪ FTA 해외 활용지원반 추진실적 및 계획(산업부/외교부) ▪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운영결과 및 건의사항(2개센터) ▪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 관리 내실화 방안(산업부)

제2절 통상산업포럼*

1. 추진배경

통상산업포럼은 통상 기능이 외교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직후인 2013년 5월 신설되었다. 기존 통상정책 수립 과정의 소통체계는 크게 통상절차법상의 절차, 전문가 의견수렴 기구, 정부 중심 협의체의 3가지로 구분된다.[36]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체계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산업계와의 협의 채널이 취약했고, 협상진행 과정에서 업계와의 양방향 소통체계가 부재하여 주된 쟁점에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뿐만 아니라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야 민감 분야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인 대응이 미흡하여 정책 추진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다.

* 통상정책총괄과 사무관 정의라

36 통상절차법상의 절차(공청회, 설명회, 영향평가), 전문가 의견수렴 기구(민간자문위원회), 정부 중심 협의체(FTA 추진위원회, FTA 국내대책위원회)

그림 7-1. 통상 소통체계 구축 방안

	기 존		향 후
정부	FTA추진위원회		통상추진위원회
산업계	없음	⇒	통상산업포럼 신설
민간	통상교섭민간자문위		좌 동
국회	보고의무제도 도입		정보공유 확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정부는 통상산업포럼을 신설하여 통상교섭 및 정책 추진의 전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통상교섭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종별 영향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협상과 동시에 국내보완대책을 병행하여 마련하고자 하였다.

2. 개요

(1) 기본 개요

포럼은 제조업·농수산업·서비스업 등 각 업계를 대표하는 업종별 협회장들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포럼 아래에는 22개 업종별 분과를 설치하여 ①협상 대책 수립 지원, ②협상 상대국 업계와의 협력 추진, ③업종별 협상 영향분석 및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농어업·중소기업 등 취약분야 민감성을 반영하고 국내 보완대책과 연계하는 "산업과 함께 하는 통상" 및 산업계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주인 있는 FTA"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비관세장벽을 비롯해 무역투자장벽과 같은 "통상의 손톱밑 가시" 제거하는데 주력하여 업계의 통상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2)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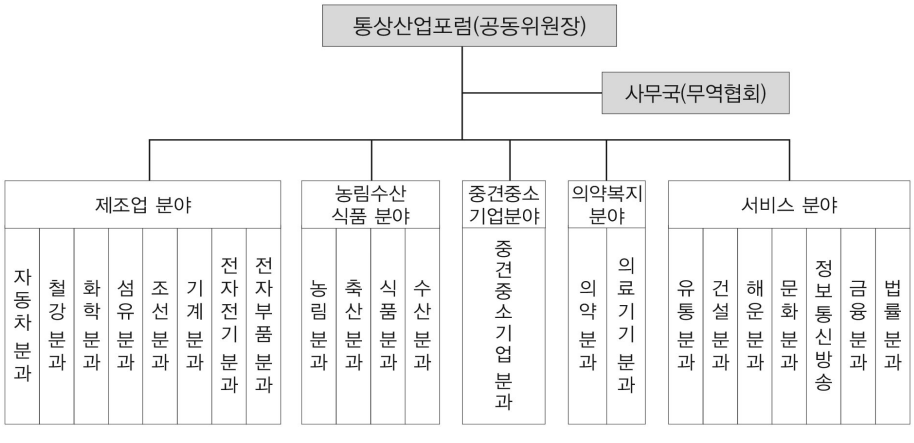
① 포럼 구성·운영

포럼은 업종별로 제조업·농업 등 업종별 협회장, 지원기관 등 30명 내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며(산업부 장관, 무역협회 회장), 포럼 개최·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무역협회에 설치한다. 운영은 연 2회 개최(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는 정부 관계자가 통상정책·협상계획 및 협상 상황에 대한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② 업종별 분과 구성·운영

분과는 업종별 협회 이사급(분과장), 업계 대표, 연구원, 부처 과장급을 위원으로 하며, 특히 업계의 통상 대응 강화를 위해 협회 내 통상전담 임원(이사급 이상)을 지정하도록 한다. 분과회의의 운영은 협상 진행에 따른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분과회의는 협상대책 수립을 위한 업계와의 협의, 협상 상황에 따른 업종별 영향분석 지원, 협상 결과에 따른 활용·보완대책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림 7-2. 통상산업포럼 조직도



3. 2013년 운영 실적

통상산업포럼은 2013년 5월 출범식을 시작으로 전체분과 워크숍(7월)과 약 22회의 분과회의를 운영하였다. 첫 포럼에서는 새정부 통상부처에 바라는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새정부의 신통상정책 방향 및 동아시아 지역의 FTA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약 22회의 분과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중국, 베트남, 터키 등 주요국과의 FTA 협상에 대한 업계간 의견을 공유하였다.

표 7-4. 포럼 운영 실적

No	주제	일시	비고
1	출범식	'13.5.23. 11시	통상산업포럼 운영계획, 새정부의 신통상정책 방향 동아시아 FTA 추진 현황 및 계획
2	워크샵	'13.7.12. 11시	새정부의 신통상 로드맵, 중소기업 한·중FTA 활용방안, 한·중FTA 및 RCEP 추진 현황, 통상산업포럼 운영방안

표 7-5. 분과회의 운영 실적

No	분과	일시	비고
1	자동차	6.20. 10:00	RCEP, 한·중FTA
2	전자전기	6.20. 14:00	
3	기계	6.27. 10:00	
4	화학	6.27. 14:00	
5	유통	7.16. 7:30	RCEP, 한·중FTA, 한·베트남FTA, 한·인니CEPA, 유통업체 해외진출 현황
6	섬유	7.17. 14:00	RCEP, 한·중FTA
7	문화	7.26. 14:00	RCEP, 한·중FTA, 한·베트남FTA, 한·인니CEPA,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현황
8	국토교통	8.2. 14:00	한·베트남FTA
9	철강	8.6. 10:00	한·중FTA 대응전략
	비철금속	8.6. 14:00	

No	분과	일시	비고
10	중견중소기업	8.8. 12:00	RCEP, 한·중FTA, 한·베트남FTA, 한·인니CEPA
11	금융	9.3. 15:00	한·중FTA, 한·인니CEPA, 인니측 인력개방 관련 요구사항 공유 및 논의
12	의약 의료기기	9.9. 14:00	RCEP, 한·중FTA, 한·베트남FTA, 한·인니CEPA, 의약, 의료기기 협상 대응전략
13	법률	9.10. 12:00	RCEP, 한·중FTA, 한·베트남FTA, 한·인니CEPA, 법률 협상 대응전략
14	정보통신방송	9.10. 15:00	RCEP, 한·중FTA, 한·베트남FTA, 한·인니CEPA, 비관세장벽 해소방안 논의
15	전자부품	9.11. 12:00	RCEP, 한·중FTA
16	조선플랜트	10.1. 15:00	
17	수산	10.2. 10:00	
18	해운물류	10.2. 15:00	한·중FTA
19	농업계간담회	7.8. 7:30	한·중FTA, 농업/수산업 현황 및 정책방향 등
	농식품간담회	8.22. 13:00	한·중FTA
	농업	10.8. 15:00	RCEP, 한·중FTA
20	식품	10.15. 11:00	한·중FTA 1단계 협상결과/대응방안, 대중국 수출 확대전략 등
21	축산	10.17. 15:00	한·중FTA
22	국토교통	10.24. 15:00	한·터키FTA, WTO GPA(정부조달)

제3절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12.7.18일자로 시행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에 따른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교섭 관련 자문기구로서, 과거 외교통상부 시절 한차례 개최('12.11.23)된 바가 있었다. 산업부로 통상기능이 이관된 이후, 첫 번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윤상직 장관 주재로 5.3일(금) 11:00, 소공동 롯데호텔(벨뷰 스위트 36층)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새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구체적으로 ①새정부의 신통상 로드맵 수립 방안, ②한중 FTA 협상, ③인도, 아세안 등과의 FTA 업그레이드 등에 관하여 민간자문위원의 자문을 듣고, ④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 결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윤상직 장관은 한·중 FTA 추진 등 통상정책 추진시 비관세장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해외진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신흥국 및 자원부국과는 산업발전 및 기술협력 등 국가별 통상수요에 최적화된 맞춤형 산업자원협력을 확

* 통상정책총괄과 서기관 전동욱

대 추진함으로써, 상호 win-win하는 산업통상모델을 구축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윤상직 장관 주재로 9.16(월) 11: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윤상직 장관은 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라는 신통상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재구성된 민간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자문위원들은 국회·학계·업계·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상품·규범·서비스 등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균형적으로 안배하여 최종 선발되었으며,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장,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다수 포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윤상직 장관은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들과 최근 중요 통상현안으로 떠오르는 이슈들에 대하여 집중 토론하였다. 구체적으로 ①한·중 FTA 협상 추진동향 및 대응방안, ②TPP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③쌀 관세화 유예만료 대응계획 등에 관하여 민간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표 7-6.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명단

	성 명	현재 직위
1	고 준 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김 연 화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장
3	김 의 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4	김 종 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5	김 준 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장
6	남 영 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7	민 경 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8	박 덕 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9	서 철 원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10	성 극 제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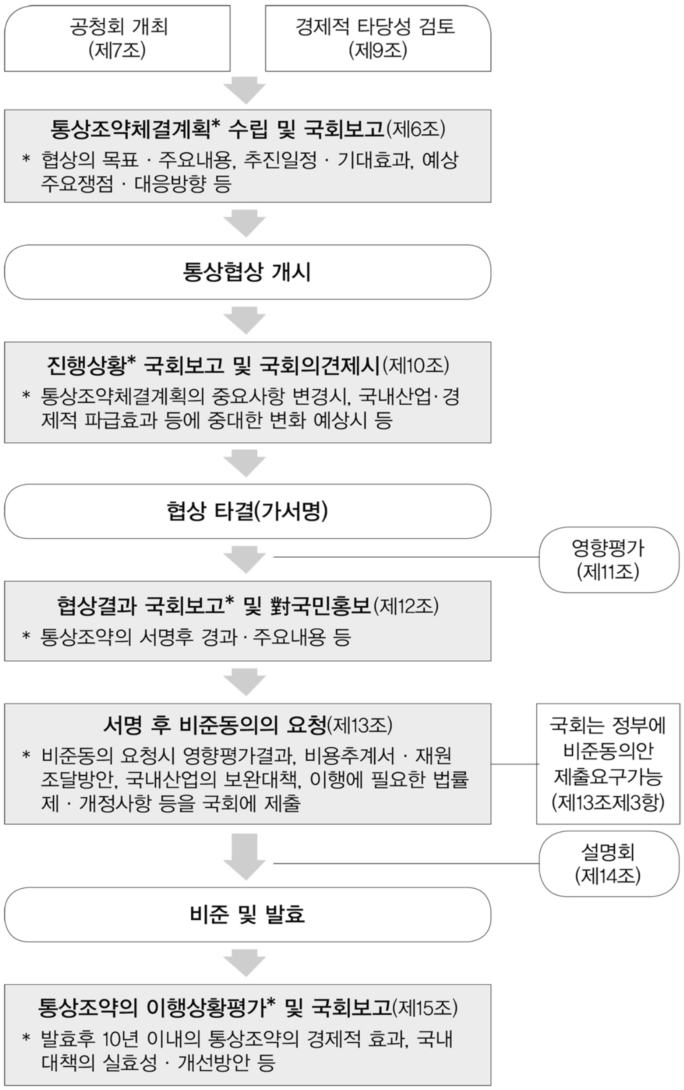
	성　　명	현재 직위
11	송 재 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12	송 주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3	신 범 철	경기대 경제학 교수
14	안 덕 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
15	안 미 정	Intellectual discovery 부사장
16	안 세 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17	오 영 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18	이 동 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19	이 재 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	이 준 호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1	이 한 영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2	이 해 영	한신대 국제경제학부 교수
23	정 명 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24	정 인 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25	최 경 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
26	최 낙 균	KIEP 무역투자정책실 선임연구위원
27	최 원 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28	표 인 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국변호사
29	한 홍 렬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30	허　　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제4절 국회협의 강화*

2012년 7월 18일 시행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부는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협상개시 전 통상조약체결계획 보고, 현재 진행중인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 보고, 협상 종료 후 협상결과의 보고, 통상조약 서명 후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 협정 발효 후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보고 등 협상 초기부터 발효 후 이행에 이르기까지 주기적인 국회 보고를 실시하였다. 국회 보고는 원칙적으로 임시회 및 정기회 회기 중 관련 상임위원회에 주요 현안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필요시 수시로 여야 간사 등 개별 위원을 방문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 통상정책총괄과 주무관 오유경

그림 7-3. 통상조약체결 절차도(국회보고 사항)



2013년 4월 23일 제315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등 동아시아 FTA 추진동향과 한·콜롬비아 FTA 경과 및 주요내용을 보고하였다. 같은 해 6월 14일 제316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신통상로드맵,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협상 추진계획, WTO 정보기술협정 확대 협상내용을 보고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9일 제320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주요 동향 및 대응계획과 한·호주 FTA 실질적 타결 내용 및 향후 계획, 제9차 WTO 각료회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표 7-7. 2013년 국회 임시회 및 정기회 보고 현황

일자	보고채널	주요 내용	통상절차법 관련 조항
'13.4.23	산업위 전체 회의	○ 동아시아 FTA 추진동향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제10조
		○ 한·콜롬비아 FTA 경과 및 주요 내용	제12조
'13.6.14	산업위 전체 회의	○ 신통상 로드맵	-
		○ 한·아세안(ASEAN) FTA 추가자유화	제6조
		○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협상 추진계획	제6조
		○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	제10조
'13.10.14	산업위 국감	○ 한·중 FTA 1단계 협상 결과	제10조
		○ 한·콜롬비아 FTA 국회 비준 계획	-
		○ TPP 협상 동향 및 대응 방안	제6조
		○ 영연방 3개국 FTA협상 재개 방안	제10조
		○ 크로아티아 가입 관련 한·EU FTA 개정 추진	-
		○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협상 현황	제10조
'13.12.9	산업위 전체 회의	○ TPP 주요 동향 및 대응 계획	제6조
		○ 한·호주 FTA 실질적 타결 내용 및 향후 계획	제10조
		○ 제9차 WTO 각료회의 결과	-

제5절 언론 홍보*

2013년은 통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한해였다. 3월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이관, 본격적인 한·중 FTA 시작, TPP, RCEP 등 다자간 FTA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통상정책인 "신통상로드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의 방향과 비전,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상정책 추진현황 등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우선 통상차관보가 주재하는 통상정책 정례브리핑(3회)(<표 7-8> 참조)을 도입하여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시작하였다. 매월 1회 진행되는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은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 추진현황은 물론 세계 주요 통상이슈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중 FTA, 한·호주 FTA 등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장관, 통상교섭실장 등이 주재하는 브리핑(10회)을 별도로 진행하여 보다 심도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 통상정책총괄과 사무관 신경선

표 7-8. 통상정책 정례브리핑 주요 안건

월별	주요 안건
10월(10.23)	• 日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관련 WTO SPS 정례회의 결과 • 필리핀의 쌀 관세화 의무제한 추진 관련,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 결과 • 연영방 FTA 협상재개 • 한·인니 CEPA 6차 협상 • 한·베트남 fTA 제3차 협상결과 • 제3차 한-EU 무역위원회 결과 • 제1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한·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 개최결과
11월(11.21)	• 한·중 FTA 2단계 협상 개시 • 한·중·일 FTA 3차 협상 개최 • TPP 공청회 결과 • 한-호 통상장관회담 개최 • 제9차 WTO 각료회의 참석 • WTO 정보기수협정(ITA) 확대 협상동향 • 제4차 한·베트남 원전·산업·에너지·무역협력 공동위 개최 • 아시아솔라에너지포럼 참석 • 제2차 한-말레이시아 산업협력워킹그룹 회의 개최 • 서남아 전력산업진출포럼 개최
12월(12.23)	• 비관세장벽 사례에 대한 무역장벽 보고서 발간 • 2013년도 통상관련 주요 성과 - 통상기능 산업부 이관 - 2013년도 통상분야 주요 성과 ① 정상외교 성과 ② 적극적인 FTA 추진 ③ WTO 다자간 협상 적극 참여 • 2014년도 통상정책 방향

더불어 보도자료 및 보도참고자료 배포도 활성화(108건)하여 주요 협상·회의의 개최 및 결과, 양자 및 다자 통상협력, 정상외교 성과 및 후속조치 등을 신속·정확하게 알렸다. 그리고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설명 또는 해명자료 등(24건)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이 전달되도록 노력하였다.

주요 간부들도 신문, 방송 등 주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기고, 외부 강연 등을 통해 주요 통상정책 및 현안 등을 직접 설명(41회)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힘썼다.

또한 FTA 공식 홈페이지(www.fta.go.kr)를 운영하여 FTA 동향 및 추진현황, 활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등 수요자들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FTA 활용 및 국내지원대책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FTA종합지원포털(www.ftahub.go.kr)과 통합 홈페이지로 개편하는 작업을 2014년에 진행할 계획이다.

그림 7-4. FTA 공식 홈페이지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홍보 및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국민적 이해도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통상정책 추진에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표 7-9. 2013년도 주요 홍보활동

일자	홍보유형	매체	주재자	제목(주요내용)
3.28	브리핑	기자단	통상차관보	한·중·일 FTA 1차 협상결과
3.28	인터뷰	KBS 라디오	장관	
3.28	브리핑	기자단	통상차관보	한·중·일 FTA 1차 협상결과
4.4	인터뷰	NHK	장관	
4.6	인터뷰	NHK	FTA정책관	한·미 FTA 1주년 성과
4.8	인터뷰	연합뉴스	장관	
4.12	인터뷰	동아일보	장관	
4.14	기고	디지털타임스	통상차관보	통상, 장보고와 개성상인 정신으로
5.8	인터뷰	봉황TV	FTA교섭관	한국의 FTA 현황
5.20	인터뷰	한국경제TV	장관	
5.22	설명회	출입기자단	FTA교섭관	동아시아 FTA 협상 전략
5.23	인터뷰	아시아경제	장관	
6.14	브리핑	기자단	통상차관보	새정부의 신통상 로드맵
6.14	인터뷰	전자신문	통상차관보	
6.14	인터뷰	SBS(CNBC)	통상교섭실장	신통상 로드맵 소개
6.24	인터뷰	United Daily News	FTA정책관	한·미 FTA 1주년 성과
6.25	인터뷰	매일경제신문	FTA교섭관	한·중 FTA 현황 및 계획
6.28	인터뷰	연합뉴스	통상교섭실장	한·중 FTA 현황 및 계획
6.28	인터뷰	뉴스Y	통상교섭실장	
7.2	인터뷰	ytn	장관	중국 방중성과
7.2	기고	헤럴드경제	통상차관보	새로운 통상패러다임의 시작
7.4	브리핑	기자단	통상교섭실장	한·중 FTA 6차 협상결과
7.8	인터뷰	머니투데이	통상교섭실장	중국과 거칠게 장기한판
7.16	강연	한국화섬협회	통상정책국장	정부의 신통상정책 방향
7.18	인터뷰	문화일보	장관	정부의 신통상정책 방향
8.1	기고(시론)	서울경제	통상교섭실장	중·일 FTA
8.11	기고	서울경제신문	통상교섭실장	동아시아 역사 전환점

일자	홍보유형	매체	주재자	제목(주요내용)
8.14	강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장관	새정부의 신통상정책 방향
9.6	브리핑	기자단	통상교섭실장	한·중 FTA 7차 협상결과
9.9	강연	전경련글로벌 경영협의회	통상차관보	한·중 FTA 현황
9.11	기고	한국경제	장관	마음으로 다가선 베트남 세일즈 외교
9.12	외신기자 회견	외신기자	통상차관보	새정부의 신통상정책
10.18	기고	중앙일보	장관	상생으로 빛난 세일즈 외교
10.23	브리핑		통상차관보	제1회 통상정책 정례브리핑
10.24	강연	표준협회	장관	FTA시대 경영과 정부의 FTA활용 촉진정책
10.25	강연	DDA/FTA 포럼	통상차관보	한중 FTA와 우리 농업의 과제
10.31	강연	세계경제연구원	장관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11.11	브리핑	기자단	통상정책국장	VIP유럽(프·영·벨)순방 경제성과
11.12	강연	한국경제연구원	FTA교섭관	FTA 연구회
11.14	기고	파이낸셜뉴스	통상교섭실장	성공적인 한중 FTA를 위해
11.18	기고	동아일보	장관	유럽은 창조경제 최적의 동반자
11.18	백브리핑	기자단	통상차관보	정부조달협정(GPA) 관련
11.18	인터뷰	경인방송	통상교섭실장	한·중 FTA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11.20	강연	희망중소기업 포럼	통상차관보	한·중 FTA와 중소기업
11.21	인터뷰	신화통신사	통상교섭실장	한·중FTA, 한·중·일FTA 이슈
11.21	브리핑	기자단	통상차관보	제2회 통상정책 정례브리핑
11.22	브리핑	기자단	통상교섭실장	한·중 FTA 2단계 협상결과
11.26	인터뷰	코리아타임즈	장관	한·중 FTA 협상동향 등
11월호	인터뷰	나라경제	장관	통상정책 중장기 추진방향 등
12.5	브리핑	기자단	장관	한·호주 FTA 실질적 타결

일자	홍보유형	매체	주재자	제목(주요내용)
12.9	강연	대한상의	장관	한·중 FTA 추진현황
12.17	인터뷰	Inside US Trade	통상차관보	WTO 제9차 각료회의
12.23	브리핑	기자단	통상차관보	12월 통상정책 정례브리핑
12.23	기고	머니투데이	제2차관	WTO의 새로운 장을 여는 무역원활화협정

제6절 통상 전문성 강화*

1. 통상분야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3년 통상분야 전문성과 통상교섭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통상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상법 아카데미', '통상법 브라운백 세미나', '통상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통상과 산업이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이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업무활용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도 통상 저변을 확대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통상과 연결시키면서 통상과 산업을 이끌어 갈 역군들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2. 통상법 아카데미

WTO/FTA 등 양자 및 다자 간 통상 협상과정에서 주도적이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상반기와 하반

* 통상법무과 사무관 장정주

기 2차례 '통상법 아카데미'를 진행하였다. 상반기에는 6.14일부터 8.2일까지, 하반기에는 10.7일부터 11.29일까지 각각 8주 동안 32시간의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은 WTO/FTA 협정 등 주요 통상협정, 주요 통상분쟁 사례, 무역구제 관련 국내 법령 및 사례 등 실무자들이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최승환 경희대 교수, 박덕영 연세대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교수, 이재민 서울대 교수,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등 통상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강사로 섭외하였으며, WTO/FTA 체제의 이해, FTA 체제의 변화와 과제, WTO/FTA 분쟁해결제도의 이해와 대응전략, 농업통상규범, 식품위생과 통상분쟁, 무역구제규범, 보조금규범, 관세제도와 관세평가, 서비스무역규범의 이해와 전략, 투자규범의 이해와 과제, 무역관련 지재권 규범과 분쟁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3. 통상 브라운백 미팅

2013년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통상법 브라운백 세미나', '통상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20여 차례 진행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통상에 대한 넓은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미 통상현안, FTA활용 중소기업 수익창출 전략, 수입규제조치 대응, 수출입 통관절차, 미국 반덤핑조치 대응전략, 미국 상계관세 사건 분석, 호주 반덤핑제도, 철강산업분야 통상대응 사례연구, 무역기술장벽, 원산지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2013 통상백서

인 쇄 2014년 10월
발 행 2014년 10월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044-203-5621
디자인/제작 (주)늘품플러스 02-2275-5326

비매품